

2017년 대선 대비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세대전략 검토 - 경제·고용상황을 중심으로

2013. 09. 12

연구자 : 김유선, 한귀영

I. 서론 : 한귀영

1. 문제의식

- 1) 경제상황 악화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 2) 경제상황 악화가 세대별 투표에 미친 영향은?
- 3) 세대, 경제, 그리고 투표간의 관계는?

2. 선행연구

- 1) 세대갈등에 대한 핵심 쟁점
- 2) 세대투표와 계층균열

II. 세대별 고용사정과 생활상태 : 김유선

1. 머리말
2. 연도별 고용사정과 생활상태 추이
3. 세대별 고용사정
4. 세대별 생활상태
5. 요약과 함의

III. 세대, 경제요인, 투표 : 한귀영

1. 연구방법

2. 2002년 대선과 2012년 대선 비교

- 1) 세대투표 양상
- 2) 경제상황이 투표에 미친 영향 비교

3. 2012년 대선 심층 분석 : 경제상황이 투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1) 전체 유권자 집단 분석
- 2) 20대 투표 영향 요인 분석
- 3) 30대 투표 영향 요인 분석
- 4) 40대 투표 영향 요인 분석
- 5) 50대 투표 영향 요인 분석

4. 세대내부 심층 분석

- 1) 세대간 차이에 대한 심층 분석
- 2) 20대 전/후반 비교
- 3) 30대 전/후반 비교
- 4) 40대 전/후반 비교
- 5) 50대 전/후반 비교

IV. 요약 및 결론 : 한귀영

<요 약>

1. 연구목적 및 방법론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국민의 삶은 악화되면서 항시적으로 경제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은 고착화되었다. 경제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악화되었고, 임금불평등은 심화되고 가구소득 불평등은 확대되었다. 가계수지 적자가구와 빈곤가구는 누적되고 있다.
- 이러한 불안감은 상대적 박탈감 및 기성체제에 대한 반감을 고조시켜왔는데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한국사회에서는 2012년 총선, 대선이라는 정치적 계기와 맞물리면서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 이 글은 세대(연령)별 고용사정과 생활 상태를 비교 분석하여, 세대 간 투표행위에 차이가 발생한 객관적 토대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 구체적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회고투표가 이루어진 2007년 대선과 달리 2012년 대선에서는 왜 경제에 대한 회고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경제요인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구체적 내용은 상이하지만 모든 세대가 경제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요인이 세대별 투표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 만일 경제요인의 영향이 세대별로 상이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외 어떤 요인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는가? 또한 한국에서 세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계급투표/계급배반 투표의 실태는 어떠한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아울러, 유권자 구성 변화를 고려할 때 5년 후 경제요인은 세대별 투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II장에서는 주요 노동경제지표를 사용해서 고용사정과 생활상태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2012년 8월)를 사용해서 성별 연령별 고용사정을 분석했다. 그리고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 자료(2012년 3월)를 사용해서 성별 연령별 생활 상태를 분석했다.

- III장에서는 세대, 경제요인, 대선투표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2012년 대선 직후 실시된 다수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 비교하였다.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무릅쓰고 3개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경제요인의 영향력을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고자 했다.

- 대선 투표 결정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도했다. 몇 단계 모형을 구성했는데, 먼저 사회경제적 변수(성, 연령, 지역, 학력, 소득, 이념)만으로 구성된 모형을 구성해 어떤 요인이 대선 투표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경제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경제요인은 현재 경제상황(소득수준, 주관적 계층수준, 가계경제형편), 과거 경제평가(국가/가계), 차기 정부 경제전망(국가/가계)로 구분해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소득양극화에 대한 실태 인식의 영향력도 살펴보았다.

- 경제요인 외에 어떤 요인이 대선 투표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투표기준(후보의 소속정당, 이념성향, 도덕성, 정책 및 공약, 당선능력 등), 이슈관심도(10개의 핵심 대선 이슈의 영향력 평가), 프레임(여성대통령, 후보단일화, 박근혜 vs 노무현 등)등의 영향력을 점검했다.

- 한편, 집단평균분석을 통한 세대간, 세대내 차이를 분석했다. 구체적 내용은 정치적 태도 및 의식, 정책적 지향, 경제인식 등이다.

-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2년 대선 직후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여론조사 데이터, 2012년 대선 직후 KSDC, 2012년 대선 직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데이터 등이다.

2. 주요 결과

1) 세대별 고용사정과 생활상태의 변화

-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로 정치권력이 교체된 지난 10여 년 동안,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국민의 삶은 악화되었다.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 했고,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은 고착화되었다. 경제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악화되었고, 임금불평등은 심화되고 가구소득 불평등은 확대되었다. 가계수지 적자가구와 빈곤가구는 누적되고 있다.

- 생애주기별로 노동생활 추이를 살펴보면, 20대는 노동시장 진입기, 30~40대 남자는 노동시장 정착기, 30대 여자는 자녀출산과 양육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쉽지 않아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시기, 40대 여자는 노동시장 재진입기, 50~60대는 남녀 모두 노동시장 퇴출기로 정의할 수 있다.

- 20대는 남녀 모두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다. 청년층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대량으로 파괴되면서 노동시장 진입에 걸리는 기간은 늘어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용률이 높아진다. 노동시장에서 성 차별도 작은 시기다.

- 30~40대는 남녀 모두 나이가 들수록 임금노동자와 공식고용 비율이 줄고, 비임금근로자와 비공식고용 비율이 늘어나는, 고용의 질이 나빠지는 시기다. 30~40대에 남성은 임금이 높아지지만, 여성은 임금이 낮아지고 저임금계층과 최저임금 미달자가 늘어나는 시기다. 30~40대에 늘어나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임금노동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고용형태다.

- 50~60대는 노동생활을 마치고 은퇴생활로 전환해 가는 시기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은퇴 후 노후생활이 준비되지 않아, 노동생활과 은퇴생활 모두 불안정한 시기다. 나이가 들수록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높아진다. 이는 다니던 직장에서는 정년 등을 빌미로 밀려나고, 노후생활은 준비되지 않아 다시 구직활동에 나서는 현실을 반영한다. 남녀 모두 나이가 들수록 임금수준은 낮아지고, 저임금계층과 최저임금 미달자는 늘어난다.

- 40세 이상 중고령자들의 노후생활 대비와 관련해, 노후생활을 준비하거나 준비한 사람은 60%고, 나머지 40%는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 노후생활 준비 방법은 공적 연금 가입이 가장 많았다. 특히 60~70대 노인들은 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60대 후반 남성은 소득의 27.5%가 공적 이전소득이고, 여성은 소득의 25.1%가 공적 이전소득이다. 70대 남성은 소득의 31.9%가 공적 이전소득이고, 여성은 소득의 40.1%가 공적 이전소득이다. 그만큼 노후생활에서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지난 대선에서 연금문제가 60대 이상 고령층

에게 어느 정도 폭발성을 지닌 사안이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 40대 후반을 정점으로 인생 하강 곡선과 노동시장 퇴출기에 접어든 5060이 겪는 고용 및 생활상의 어려움과 박탈감,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에서 패인도 ‘야권이 2030에 집중한 나머지 5060에게 그들의 고용사정과 생활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전망과 믿음을 주지 못한’ 데서 찾아야 한다.
-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를 찍었던 50~60대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은 것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국민의 삶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된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민주정부 10년은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글로벌 스탠더드인 양 맹위를 떨치던 시기였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제1의 정책과제로 추진했고, 고용사정은 더 이상 악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 앞으로 야권이 50~60대의 지지를 회복하려면 ‘야권이 집권해야 나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꿈과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한편, 과연 2030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20대와 30대는 고학력자가 많다는 점에서는 동질적이지만,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취업난을 겪는 20대 남녀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안정적 정착기에 접어든 30대 남자, 자녀출산과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30대 여자는 노동시장 내 처지가 뚜렷하게 다르다.

2) 경제상황이 2012년 대선 투표에 미친 영향

- 그렇다면 객관적 경제상황의 변화가 주관적 경제평가(MB정부 국가경제 평가 등)를 거쳐, 2012년 대선 투표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용률과 임금인상률, 노동소득분배율은 참여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에서 더 악화되었지만, 임금불평등과 가구소득 불평등은 이명박 정부보다 참여정부 때 가장 극심했다. 따라서 경제위기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만으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대중들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 대선투표 분석결과, 객관적 경제상황 악화라는 환경속에서 2012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영향을 받은 경제적 요인(경제인식 및 평가)들은 주관적 경제적 지위와 이명박 정부 5년 국가경제평가, 그리고 소득격차 심화 인식 등이었다. 구체

적으로는 주관적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문제인 지지 가능성도 높았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5년 국가경제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소득격차가 심화되었다고 인식할수록 문제인 지지 가능성도 높았다.

- 하지만 세대별로 경제요인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했다. 지난 대선에서 20대와 30대는 투표시 경제요인(경제평가/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등)의 영향을 받았지만 40대와 50대는 비교적 영향력이 적었다. 특히 50대는 경제요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 세대별로 경제상황 악화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중 어느 시기에 더 심각해졌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상이하고 그에 따라 경제요인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력도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의 20대와 30대는 참여정부시기 10대와 20대로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이거나 막 경제활동을 시작하던 시기다. 따라서 참여정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할만한 요소가 약하다. 지금의 30대의 경우 참여정부때 취업을 하고 이명박 정부 때 본격적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고용의 질 악화, 양극화 심화 등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 따라서 지금의 20대와 30대는 참여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 시기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 반면, 지금의 40대와 50대는 참여정부시기에는 30대와 40대로서 경제활동의 핵심축이었다. 참여정부 시기 경제상황 악화, 양극화로 인해 삶의 질 악화를 직접적으로 체감한 연령층인 것이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못지않게 참여정부도 경제상황 악화에 책임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경제상황악화의 책임을 MB정부에 집중시키는 전략은 설득력이 약할 수 밖에 없다. 분석결과도 40대와 50대에서 경제요인은 대선 투표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다만 대선 투표에서 40대와 50대가 차이가 났는데 40대에서는 반MB정서라는 정치적 요인이 작용한 반면 50대 이상은 반MB와 반노무현이 비슷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지난 대선에서 반MB로는 50대를 설득하기 어려웠다. 이들이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경제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MB정부와 참여정부에게 공동으로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50대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반MB보다 반노무현이었고 반이정희였다. 50대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반MB를 넘어서 참여정부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했으나 이것이 결여되어 있었다.

3) 세대별 투표 영향 요인

(1) 전체

- 지난 대선에서 지역주의는 TK와 PK지역이 갈라지면서 역대 대선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고 세대투표는 여러 데이터에서 확인되었다.
- 경제요인은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다. 먼저 개인이 처하고 있는 현재 경제상황 중 현재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나 소득수준은 투표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거나 제한적이었지만 주관적 경제적 지위는 투표에 영향을 주었다. 주관적 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문재인 지지 가능성도 높았다. 그리고 지난 5년동안의 경제상황 평가는 대선후보 선택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이를 이명박 정부로 특정화했을 때는 영향을 미쳤다. 특히 소득격차 확대 등 양극화 문제로 구체화했을 때는 야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 하지만 야권이 일찍부터 선전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경제민주화 이슈는 오히려 박근혜 후보측에 유리한 이슈임이 확인되었다. 박근혜 후보측의 경제민주화 이슈에 적극 개입하고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결과적으로 경제요인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희석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2) 20대

- 20대에서 지역주의적 경향은 미미했고 오히려 보수정당 지지기반이 강한 PK지역에서 문재인 지지 경향도 나타났다. 그리고 반MB정서의 영향력이 주요하게 작용한 반면 친노무현정서의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 취업불안에 시달리는 20대에서 경제요인은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 먼저 현재 소득수준은 제한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문재인 지지가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박근혜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부유층 부모를 둔 20대의 보수화경향을 확인해주는 대목이다. 또한 지난 5년 국가경제 평가에 따라 20대의 대선 후보 선택도 달라졌다. 하지만 소득양극화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 특징적인 것은 후보선택시 정책 및 공약, 당선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수록 문재인 지지 가능성이 높았다. 20대에서 문재인 후보의 정책 및 공약이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 후보측이 20대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사회경제적 이슈와 정책 제시에 집중했지만 효과면에서 미미했고 오히려 정치적 이슈인 과거사 이슈가 대선 후보 선택에 영향을 주었음도 드러났다.

- 즉, MB정부 경제평가 등 경제요인 외에 부모의 경제적 지위, 기독교, 안보 이슈 등이 20대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3) 30대

- 30대의 투표에 영향을 준 요인은 학력, 지역, 소득수준 등이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나 주관적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빈곤보수와 상반된 경향을 보여준다. 지역도 전통적인 지역주의 경향과 달리 PK지역거주자 일수록 문재인 지지 가능성이 높았다.
- 30대에서도 경제요인은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는데, 지난 5년 경제상황에 대한 막연한 평가나 향후 경제전망이 아닌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인식이 문재인 후보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30대가 양극화, 특히 자산 양극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문제가 정치적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앞서 박근혜 투표 영향요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모두 야권측에서 제기한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박근혜측에 주도권을 뺏기면서 30대에서 박근혜 지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정책이슈 중에서는 복지확대만이 30대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 즉, 문재인 후보측이 30대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사회경제적 이슈와 정책 제시에 집중했지만 박근혜 후보측이 이슈 주도권을 가져감으로서 경제요인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4) 40대

- 40대의 투표에 영향을 준 요인은 지역변수(TK거주, 호남거주)였고 성별변수의 영향

력이 일부 데이터에서 드러났다. 40대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선택이 엇갈려 여성일 수록 박근혜 투표 가능성도 높았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 보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투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가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되었다.

- 40대에서 경제요인은 제한적으로만 나타난다. 개인의 경제상황은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고 지난 5년 경제상황 평가에 입각한 회고투표는 문재인 지지에만 영향을 주는 등 제한적으로 나타났고 박근혜 지지와는 무관했다. 즉, 40대 박근혜 투표층은 문재인 투표층에 비해 경제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경제요인의 영향력이 미비한 대신 후보의 당선가능성과 국정운영능력이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요인 모두 박근혜 지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슈에서는 20대와 마찬가지로 40대에서도 NLL논란의 영향력이 컸는데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된다. 경제민주화 이슈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5) 50대

- 50대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준 변수는 일부 지역변수(호남거주)였고 일부 데이터에서 주관적 경제적 지위 변수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즉 주관적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박근혜를 지지하고 낮을수록 문재인을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50대에서 제한적이거나 계층투표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50대에서 경제요인은 투표 선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박근혜 투표자는 경제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후보선택에서만 일부 나타났는데, MB정부하 가계경제상황이 평가 기준이 되었다. 즉 가계경제가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층에서 문재인 지지 가능성이 높았다. 50대에서는 양극화나 국가경제위기 등을 공략하기보다 가계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더 공략했어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경제요인 외 50대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준 이슈로 후보단일화, 노무현정부부활저지, 이정희발언 등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노무현정부부활저지와 이정희발언은 박근혜 후보쪽에는 유리하게 문재인 후보쪽에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50대에게 경제민주

화 이슈는 40대와 마찬가지로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3. 전략적 함의

- 지난 대선에서는 세대간 연대 보다 기성세대에 맞선 2030세대의 투쟁이 더 강조되면서 결과적으로 세대갈등이 폭발했다. 2030세대, 또는 2040세대간 연대는 이 세대가 경제적 불안정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이 점에서 경제적 지위하락에 대한 불안감,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은 50대라도 연대할 조건은 충분했다. 하지만 실제 대선에서 야권은 세대간 차이와 갈등을 부각시키면서 50대 이상을 정치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즉, 경제위기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세대연대론이 제기되었어야 하나 정치적 전략의 실패로 인해 결과적으로 세대투쟁론이 부가되었다.
- 고령화 추세로 인해 2017년 대선에서는 50대 이상 인구 비중이 45.1%에 이른다. 그리고 연령효과와 세대효과와 관련한 일부 연구들에 의하면 지금의 50대 이상 고연령층은 16대 대선 이후 보수적 선택이 강해지는 '연령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의 40대(486세대)는 16대 대선 이후 일관되게 진보적 선택이 유지되고 있어 '세대효과'가 강하다. 50대의 압도적인 박근혜 지지는 '나이가 들면 보수화된다는' 연령효과를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한다.
-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50대의 선택을 연령효과에 따른 보수화로만 보긴 어렵다. 50대는 그 어느 연령층보다 경제적 불안, 고용 불안에 심하게 직면해 있으며, 50대가 경제상황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은 여러 지표에서 드러난다. 50대의 보수적 선택은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지위하락과, 미래 불안의 책임이 MB정부 못지 않게 참여정부에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야권은 이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줄 수 있는, 참여정부를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박근혜 후보는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50대를 끌어들이 수 있었다.
- 2017년 대선 전략 수립에 있어 세대효과나 연령효과나라는 정태적 틀을 넘어 결국 50대의 경제적 불안, 노후 불안을 해소해줄 수 있는 정책방안, 그리고 전략 제시가 관건이 될 것이다.
- 40대도 경제상황 인식에 있어 50대와 비슷하나 반MB정서로 인해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지지가 우세했다. 2017년 대선에서 이들에게 민주정부의 능력과 비전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야권지지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지난 대선에서 경제이슈는 전반적으로 진보쪽에 우세한 이슈였고, 세대별로도 차이가 확인됐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등에서 박근혜 후보쪽이 오히려 이슈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경제이슈가 변별성을 상실했다. 대신 NLL같은 안보이슈가 부각되었다. 야권이 참여정부를 극복할 수 있는 세대별, 계층별 정책대안 제시에 실패한 것이다.
- 따라서 세대별 차이, 세대내 차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제시가 절실하다. 앞의 분석에 따르면 20대는 실업급여 등 고용관련 분야, 30대와 40대는 교육, 50대와 60대는 노인연금 등을 최우선 정책으로 보고 있다.
-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가계의 책임자로서 이들의 경제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주어야 한다. 이들은 고용시장에서 퇴장하는 층으로서 새로운 일자리가 절실하며, 연금문제를 포함한 노후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60대 이상 노령층은 생활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70대는 그동안 공적연금을 받을 기회가 없었으나 제도 변화로 연금 혜택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I. 서론

1. 문제의식

1) 경제상황 악화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국민의 삶은 악화되면서 항시적으로 경제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 했고,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은 고착화되었다. 경제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은 악화되었고, 임금불평등은 심화되고 가구소득 불평등은 확대되었다.
- 이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은 대중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 및 기성체제에 대한 반감을 고조시켜왔는데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2012년 총선, 대선에서 대중들은 집권세력에게 분노를 집중적으로 표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다.
- 하지만 총선과 대선 모두 연이어 야권이 패배하고 여권이 승리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더욱이 친재벌, 감세 등 성장노선을 통해 보수적 경제노선을 명확히 한 MB정부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보수정부가 재집권에 성공했다.
-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부동산 폭등 등 전임 정부 경제평가에 입각한 회고투표가 이루어지면서 배신당한 서민층들이 정동영 후보가 아닌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경제적 약자들, 서민층들이 오히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면서 보수 후보가 당선되었다. 가난한 이들이 보수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는 야권에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렇다면 회고투표가 이루어진 2007년 대선과 달리 2012년 대선에서는 왜 경제에 대한 회고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경제요인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2) 경제상황 악화가 세대별 투표에 미친 영향은?

- 2012년 대선에서 세대투표 경향은 10년 전인 2002년 대선 보다 훨씬 강력했고 이는 2010년 지방선거부터 조짐이 나타났다. <표 I-1>에서 드러나듯이 2012년 대선에서 30대 이하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2/3에 가까운 지지를 획득한 반면 50대 이

상에서는 박근혜 후보 지지로 쏠리는 현상이 확연했다. ‘50대 보수화론’으로 대변되는 중장년층의 보수적 선택은 2030 청년층의 선택과 대조를 이루었다.

<표 I -1> 18대 대선 연령별 득표율 (단위 : %)

	16대 대선_MBC-KRC 출구조사		18대 대선_방송사 출구조사	
	이회창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19-29세	34.9	59	33.7	65.8
30대	34.2	58.3	33.1	66.5
40대	47.9	48.1	44.1	55.6
50대	57.9	43.1	62.7	37.4
60대 이상	63.5	34.9	72.3	27.5

<표 I -2> 2010년 이후 연령별 야권 지지도 변화 (단위 : %)

	2010년 지방선거 (KS이 자료)	2011년 서울시장 선거(출구조사)	2012년 대선 (출구조사)	2010년 대비 하락폭
30대	73.9	75.8	66.5	7.4%P하락
40대	62.2	66.8	55.6	6.6%P하락
50대	38.7	43.1	37.4	1.3%P하락

자료: 2010년 KSOI 조사, 2011년, 2012년 출구조사 등

- 세대투표로 나타난 세대갈등의 이면에는 경제위기가 존재하는데, 경제위기가 2030에게 집중되면서 이층을 중심으로 변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다. 이는 불안정한 청년세대 대 안정된 기성세대의 대립이라는 구도속에서 더 심화되었다. 하지만 40대, 50대 등 기성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산층에 접어든 40대와 50대는 언제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가 하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아울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크다.
- 구체적 내용은 상이하지만 모든 세대가 경제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요인이 세대별 투표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 만일 경제요인의 영향이 세대별로 상이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외 어떤 요인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는가?

3) 세대, 경제, 그리고 투표간의 관계는?

- 세대갈등은 경제위기 및 불안과 중첩되어 나타나는데, 경제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은 세대별로 상이하다. 대체로 40대를 기준으로 40대 이하에서는 경제불안이 반보수적

태도를 강화시키고, 50대 이상에서는 경제불안이 오히려 보수적 태도를 강화시키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는 빈곤보수 문제, 즉 가난한 이들이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경제불안이 야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권 후보 지지로 나타난 것이다.

- 투표에서 경제가 미치는 요인은 결국 핵심적인 균열축으로서 계층균열의 문제와 불가분 관계를 지닌다. 그리고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은 계층문제가 작동하는 방식이 상이하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세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계급투표/계급배반 투표의 실태는 어떠한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아울러, 유권자 구성 변화를 고려할 때 5년 후 경제요인은 세대별 투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선행 연구

1) 세대갈등에 대한 핵심 쟁점

(1) 세대투쟁 vs 세대연대

- 2012년 대선에서 나타난 세대투표, 세대갈등의 문제는 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와 관련해 세대갈등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세대투쟁과 세대연대로 모아진다. 한국에서 세대연구에 주목해온 서강대 전상인 교수에 따르면 세대투쟁의 전제는 “탐욕스러운 노인”들이 자신들의 수적인 우세에 기초해 권력을 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관철시켜 젊은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결과 갈등이 증대한다. 대체로 고령층의 인구학적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 상황, 서구 복지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대부분이 고령자의 사회적 보장에 집중되다 보니 세대차별적인 분배로 인해 세대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현재 경제활동 인구의 부담은 증가한다.
- 이 세대투쟁론의 문제는 정작 당사자들은 침묵하고 기성세대가 이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것으로 한국사회에서 88만원 세대담론이 이에 해당한다. 세대투쟁론은 복지의 주요 수혜자인 고령층의 복지축소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면서 복지국가, 사회국가의 축소라는 정치적 의도를 띠기도 한다.
- 세대간 갈등과 투쟁을 부각시키고 있는 세대투쟁론과 달리 세대연대는 불안정한 고용관행의 확산으로 인해 불안정한 자들은 현재적 문제로, 다른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잠재적인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모든 세대가 불안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울리히 벡’은 “불안정한 고용관계로의 이행이 진정한 세대 단절이며 새로운 세대를 형성시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주된 비판 대상은 기업이나 국가정책이므로 이에 대항하기 위해 세대간 연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젊은 층을 노동시장으로 더 잘 통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해결 방안이라는 것이다.
- 지난 대선에서 보수적 중장년층에 맞서는 2040세대 중심의 배타적 세대전략에 대한 비판이 쇄도한 가운데, 2040세대간 연대가 가능한 것은 이 세대가 경제적 불안정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는 세대이고, 이 점에서 불안정한 50대와의 연대할 수 있

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실제 대선에서는 세대간 차이와 갈등을 부각시키면서 민주진보진영이 50대 이상을 정치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2) 연령효과 vs 세대효과

- 세대는 정치적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는 인간은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치의식이 보수화된다는 연령효과 혹은 ‘생애주기효과(life cycle effect)’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청소년기의 정치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정치의식은 일생에 걸쳐 지속된다는 세대 효과도 나타난다. 연령효과와 세대효과 중 어느 것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정치변동 양상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고령화에 따른 연령별 유권자 비중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 특히 유권자 구성은 정치적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2002년 대선에서는 2030연령층이 전체의 48.3%로 거의 과반에 이르렀으나 2012년 대선에서는 38.2%로 대폭 하락했다. 그리고 50대 이상 고연령층은 2002년 대선 당시 29.3%에 불과했으나 2012년 대선에서는 40%로 10%p 이상 상승했다. 하지만 18대 대선은 진보적 성향의 40대가 21.8%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따라서 유권자 구조의 측면에서 진보색채가 우세한 2040연령층과 보수색채가 강한 50대 이상이 6대4로 나타났다.
- 다만 연령효과로 인해 50대가 보수, 안정 지향적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40대 역시 10년전(16대 대선)과 비교해 진보적 경향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령화 추세로 인해 2017년 대선에서는 50대 이상 인구 비중이 45.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인구 고령화가 어느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지와 관련해 여러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연령효과에 따르면 보수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세대효과를 감안하면 속단하기 어렵다. 16대 이후 대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금의 50대 이상 고연령층은 16대 대선 이후 보수적 선택이 강해지는 ‘연령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의 40대(486세대)는 16대 대선 이후 일관되게 진보적 선택이 유지되고 있어 ‘세대효과’가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노환희, 송정민 2013). 따라서 486세대가 50대가 되어도 지금의 50대와는 달리 진보적 성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 세대투표와 계층균열

- 세대와 경제요인이 결합하는 현상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40대 이하 연령층을 중심으로 서서히 드러났다. 그 실태를 살펴보면, 2012년 대선에서는 아래 <표 1-3>와 같이 40대 이하에서는 오히려 소득이 낮을수록 문재인 후보 지지가 가장 높았다. 물론 소득별로 차이가 크지 않고 소득에 관계없이 문재인 후보 지지가 높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하게나마 계급투표 경향이 드러난다. 즉 40대 이하에서는 가난할수록 민주당 등 야당 후보를 지지하고 부자일수록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등 정당과 정당이 표방하는 지지층간 일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 하지만 50대 이상에서는 다른 경향이 나타난다. 저소득층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와 문재인 후보 지지율간 격차가 다른 소득층과 비교해 가장 크다. 50대 이상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박근혜 후보 지지가 압도적이었고 특히 저소득층, 가난한 서민층에서 이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50대 이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계급배반 투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40대 이하에서는 다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표 1-3> 소득별 후보 지지도 : 40대 이하와 50대 이상 비교

	40대 이하		50대 이상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문재인
200만원 이하	28.2	58.3	66.7	26.5
201~400만원	31.5	57.6	66.9	28.0
401만원 이상	33.6	56.5	63.3	29.0

* 자료 : KSOI 2012년 대선 조사 종합 / 문재인 지지는 문재인 지지율과 이정희 지지율 합

- 2040세대 내에서 기성세대와 달리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반보수성향을 보이는 현상은 이 층의 분노가 극에 이르러 폭발 일보 직전이라는 점, 그 뿌리에는 불공정한 질서, 양극화로 상징화되는 극심한 격차가 있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2040세대는 5060세대와 달리 대졸 학력층이 다수지만 경제적 지위는 하층에 가깝다. 학력과 경제적 지위와의 연관성은 약해지고 오히려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 즉 학벌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고등 교육을 받아 정치적 관심과 의식은 버려졌으나 경제적으로는 팍팍함에 직면하면서 대졸 서민층이 2040세대의 다수를 이루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 사회적 격차 심화에 따른 삶의 불안이 2040세대, 그 중에서도 경제적 약자층을 덮치고 있다. 그 불안감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에 이르게 되면서 정치적 의식도 급진화하고 있다. 미래는 현재보다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믿어왔던 고학력의 중간층, 경제적 약자층이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좌절'을 느끼면서 '좌향좌'하고 있는 것이다. 희망의 사다리가 끊긴 세대가 2030세대라면, 386세대인 40대인 희망의 사다리가 중간에 사라진 세대라는 점에서 2040세대동맹은 계급적 이해에 토대를 둔다.
- 40대 이하와 50대 이상 연령층간 정치적 선택이 단절적으로 이루어지는 세대갈등의 이면에는 계층간 갈등이 있다. 즉,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빈곤층의 보수화 경향이 나타나는 데 반해, 40대 이하 젊은층에서는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진보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지난 대선에서 세대갈등과 더불어 가장 큰 주목을 끌었던 빈곤보수화 경향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에 집중된 현상이며, 40대 이하에서는 오히려 빈곤진보경향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한국 정치에서 가난한 서민층이 보수정당을 강력히 지지하게 되는 이유와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40대 이하와 50대 이상 연령층간 정치적 선택이 단절적으로 나타나며 유독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 이유는 무엇인가?
- 이에 대한 가장 일반적 가설은 미디어 이용의 차이가 정치적 선택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편을 포함해 보다 급속히 보수화되고 있는 미디어환경의 변화가 실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정치참여에 대한 태도 및 정치적 결정의 능동성 여부 등과 같은 태도의 문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수동적이고 정치참여에 부정적일수록 보수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난한 서민층이 중간 이상층과 비교해 더 수동적이고 정치참여에 부정적인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정치적 효능감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정책적 입장이나 사회문화적 이슈에 대한 태도에서도 가난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간 차이가 날 수 있고 이것이 정치적 선택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 이를 입증하기 위해 19대 총선 직후 실시된(2012년 5월 5일)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을 구분하고, 가난한 저소득층의 선택에 주목하기 위해 다시 주관적 경제적 지위에서 6개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에 속하는 서민빈곤

층과 나머지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을 시도한 결과 4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하위층과 중간이상층간 총선정당투표에 차이가 있었는데, 하위층에서 오히려 야권후보(민주진보계열정당) 후보 지지가 높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미디어이용, 정치적 태도 등에 있어 두 집단간 차이는 크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무의미했다. 다만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였던 복지의 방향으로 선별복지와 보편복지 중 하위층에서 오히려 선별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다른 경향이 나타난다. 먼저 총선정당투표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이념성향면에서는 하위층일수록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디어 이용에서도 두 집단간 차이가 컸다. 하위층에서 TV등 공중파에 대한 의존이 높았다. 정치적 태도에서도 차이가 커, 하위층은 정치적 선택에 있어 소극적이고 정치참여에서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이는 정책적 입장이나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로 이어졌다. 필리핀 이주노동자 출신인 이자스민의 국회진출 등 외국인 국회진출에 대해 하위층에서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가난한 하위층과 그렇지 않은 층간 정치적, 사회문화적, 미디어이용에서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정치적 선택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물론, 이러한 사실이 가난한 이들의 보수정당 지지 이유, 즉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사회문화적 태도에서도 보수적일 수 있고, 그래서 더 공중파 TV나 종편 등 보수매체에 의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난한 이들의 보수화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대략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단서는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반해 4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하위층과 중간이상 층간 정치적 선택의 차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요인을 찾기 어려웠다. 이는 40대 이하 연령층이 정치적 선택을 할 때 다른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정치적 효능감과 같은 보다 본질적 차원이 아니라 반MB 등과 같은 국면적,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40대 이하에서 나타난 빈곤진보 경향이 매우 불안정한 현상임을 의미한다. 향후 이 층이 민주진보세력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읽을 수 있다는 의미다.

II. 세대별 고용사정과 생활상태

제1장 머리말

-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2030세대와 5060세대는 투표행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030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 5060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많이 지지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세대가 겪은 역사적 문화적 체험 이외에 고용사정과 생활상태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대선 직후 “2030은 진보적 개혁적이고 5060은 보수적”이라는 담론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오히려 야권이 2030에 집중한 나머지 5060에게 그들의 고용사정과 생활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전망과 믿음을 주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의문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 이 글은 세대(연령)별 고용사정과 생활 상태를 비교 분석하여, 세대 간 투표행위에 차이가 발생한 객관적 토대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장에서는 주요 노동경제지표를 사용해서 고용사정과 생활상태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2012년 8월)를 사용해서 성별 연령별 고용사정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 자료(2012년 3월)를 사용해서 성별 연령별 생활 상태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제2장 연도별 고용사정과 생활상태 추이

1. 고용사정

1) 고용률 저하

- 참여정부(2004~7년) 때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59.7~59.8%였다. MB정부 때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2009년 58.6%로 톱 떨어졌다. 2010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59.4%로 증가했지만, 참여정부 때 수준에 못 미쳤다. 2002년부터 2012년 사이 실업률은 3.2~3.7%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 남성은 2002년(72.2%)부터 2010년(70.1%) 사이 고용률이 계속 감소하다가 2011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70.8%로 조금 높아졌다. 여성은 2003년(47.4%)부터 2007년(48.9%) 사이 증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2009년 47.7%로 톱 떨어졌다. 2010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48.4%로 조금 증가했다.



2)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0%였다. 노동부가 조사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2.3%고,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서 1인당 피용자 보수총액 인상률은 1.3%다. 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1.7%p, 한국은행에 따르면 매년 2.7%p만큼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것이다(<표 II-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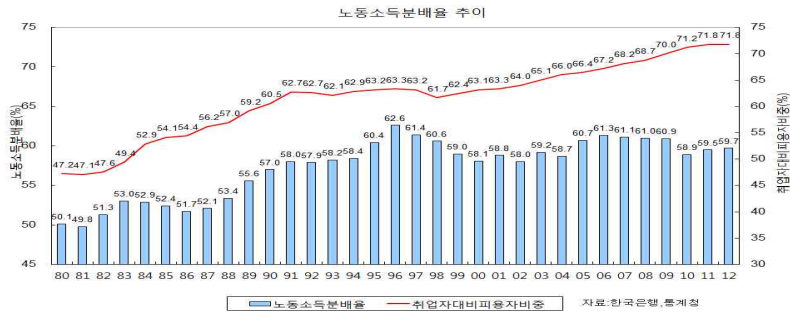
<표 II-1> 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 인상률 추이(단위:%)

연도	경제성장률 (실질GDP)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물가 상승률	실질임금(만원, 2010=100)		실질임금 인상률(%)		
				노동부 5인 이상 상용직	한국은행 피용자	노동부 5인 이상 상용직	한국은행 피용자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보수
2001	4.0	4.1	8.1	230	165	228	0.9	2.2
2002	7.2	2.8	10.0	249	180	235	8.2	9.0
2003	2.8	3.5	6.3	263	189	244	5.5	5.1
2004	4.6	3.6	8.2	269	195	247	2.3	3.1
2005	4.0	2.8	6.8	279	204	253	3.7	4.5
2006	5.2	2.2	7.4	289	213	256	3.4	4.4
2007	5.1	2.5	7.6	297	221	260	2.9	3.7
2008	2.3	4.7	7.0	296	218	258	-0.2	-1.3
2009	0.3	2.8	3.1	295	220	257	-0.6	1.2
2010	6.3	3.0	9.3	305	223	258	3.4	1.4
2011	3.6	4.0	7.6	290	225	257	-4.7	0.8
2012	2.0	2.2	4.2	299	232	258	3.0	3.2
2001-12	4.0	3.2	7.2	280	207	251	2.3	3.1
참여정부	4.3	2.9	7.3	279	204	252	3.6	4.1
MB정부	2.9	3.3	6.2	297	224	258	0.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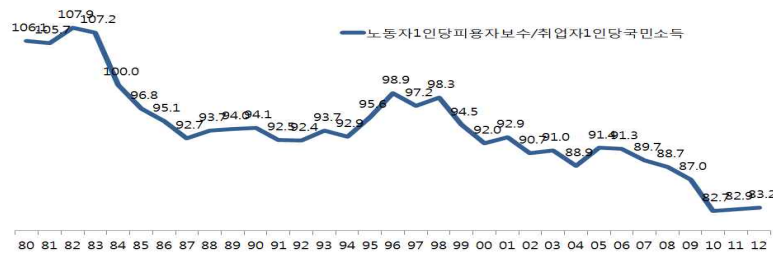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각년도

3)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실질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6%를 정점으로 2012년 59.7%로 2.9%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취업자 중 노동자 비중은 63.3%에서 71.8%로 8.5%p 증가했다. 노동자 비중 증가를 고려한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98.9%에서 2012년 83.2%로 15.7%p 하락했다.
-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노동소득분배율은 62.6%였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해 1999~2004년에는 58.0~59.2%로 톱 떨어졌다. 참여정부 후반기인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노동소득분배율은 60.7~61.3%로 개선되었지만, 2010~12년에는 다시 58.9~59.7%로 톱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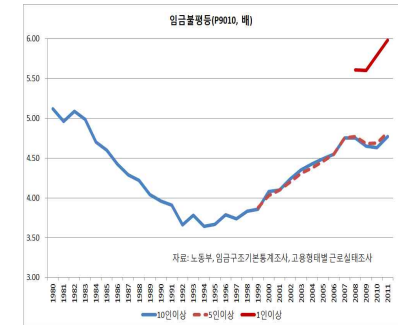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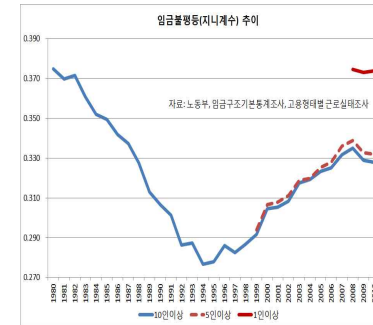


조정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4) 임금불평등 심화

-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면서 노동자들 내부적으로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서 1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들의 임금불평등 추이를 살펴보면, 지니계수는 1994년(0.272)부터 2008년(0.335)까지 꾸준히 증가했고, '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p9010)도 1994년(3.64배)부터 2008년(4.75배)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2009~10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임금불평등이 조금 완화되었지만, 2011년에는 지니계수 0.337, p9010은 4.77배로 다시 높아졌다.
- 5인 이상 사업체, 1인 이상 사업체로 조사대상을 확대하면 임금불평등 지표는 더 확대된다. 2011년 10인 이상 사업체 지니계수는 0.337이고 p9010은 4.77배지만, 5인 이상 사업체 지니계수는 0.337이고 p9010은 4.82배고, 1인 이상 사업체 지니계수는 0.380이고 p9010은 5.98배로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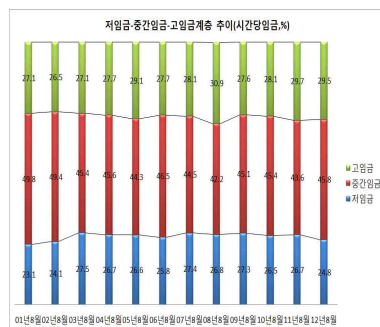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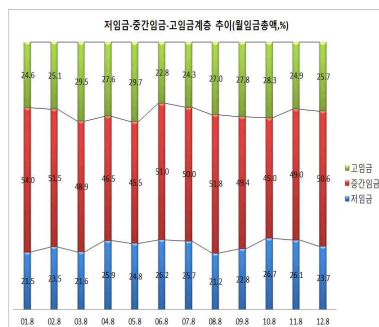


-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p9010)은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2002년 5.0배에서 2012년 5.7배,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4.9배에서 5.0배로 증가했다. 매년 오르내리고 있지만 2003년 이후는 모두 5.0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임금불평등 수준이 고착화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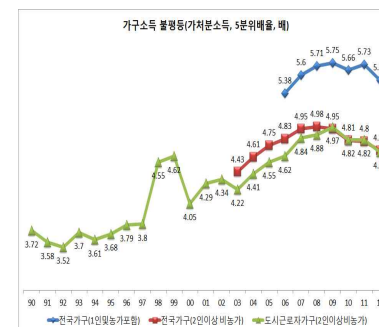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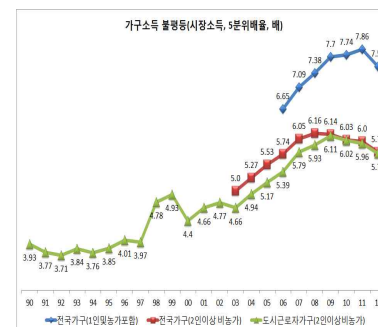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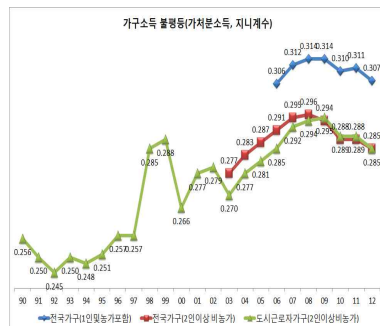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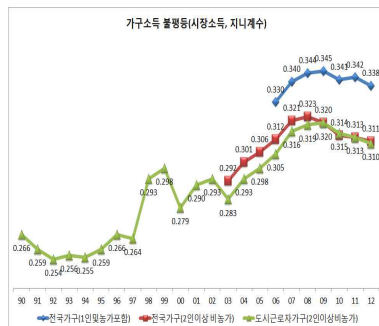
5) 저임금계층 증가

- 월임금총액 기준으로 저임금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은 2002년 23.5%에서 2012년 23.7%로 0.2%p 증가하고, 고임금계층(중위임금의 3/2 이상)은 25.1%에서 25.7%로 0.6%p 증가하고, 중간임금계층(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은 51.5%에서 50.6%로 0.9%p 감소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저임금계층 비중이 고착화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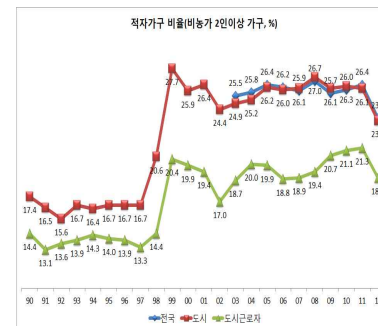
6) 가구소득 불평등 확대

- 노동시장 양극화가 확대되고 임금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가구소득 불평등도 확대되고 있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던, 지니계수를 사용 하던 5분위 배율(5분위 계층 평균소득/1분위 계층 평균소득)을 사용하던, 가구소득 불평등은 1990년대 초반을 저점으로 2008~9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10~12년에는 가구소득 불평등이 하락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 현상 인지 아니면 지속적 현상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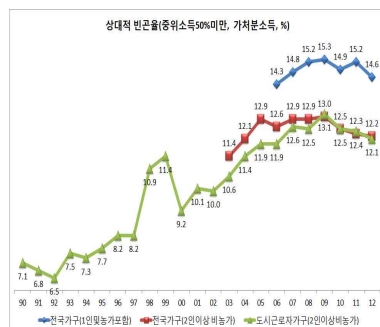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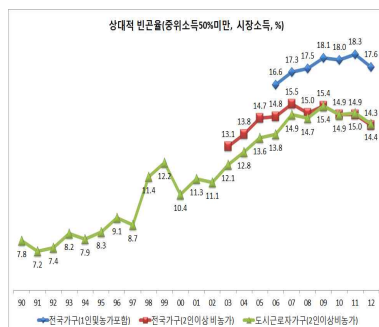


7) 가계수지 적자가구와 빈곤가구

- 가구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가계수지 적자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2인 이상 도시 가구 중 가계수지 적자가구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증했다(1997년 16.7% → 1999년 27.7%). 그 뒤 조금 감소하다가 2002년 24.4%를 저점으로 2008년에는 27.0%로 다시 증가했다. 2009~11년에는 26.1~26.3%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년 23.5%로 감소했다. 얼마간 오르내림은 있지만 2인 이상 가구 넷 중 하나는 적자가구인 것이다.



- 2인 이상 도시가구 중 빈곤가구(중위소득의 50% 미만) 비율은 1971년 7.2%에서 2009년 15.4%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2010~12년 빈곤율은 14.4~15.0%로 소폭 감소했다.



8)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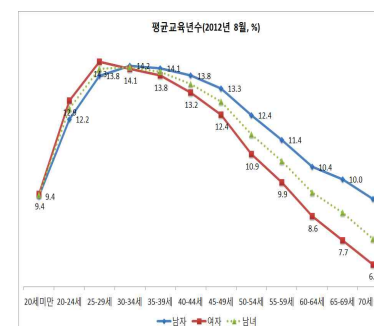
-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로 정치권력이 교체된 지난 10여 년 동안,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국민의 삶은 악화되었다. 고용률과 임금인상률, 노동소득분배율은 참여정부 때보다 이명박정부에서 더 악화되었고, 임금불평등과 가구소득 불평등은 이명박정부보다 참여정부 때 가장 극심했다.
-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를 찍었던 50~60대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은 것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국민의 삶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된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민주정부 10년은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장 맹위를 떨치던 시기였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제1의 정책과제로 추진했고, 고용사정은 더 이상 악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

제3장 세대별 고용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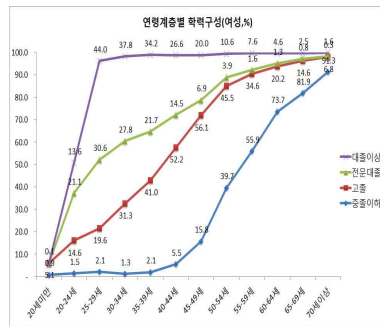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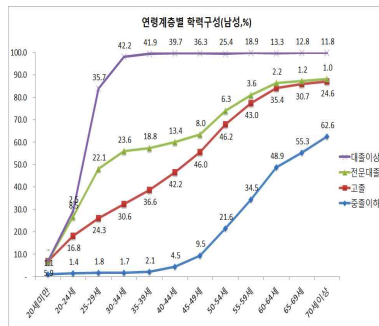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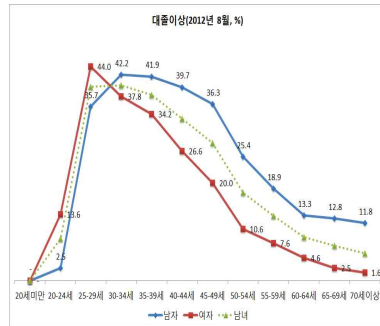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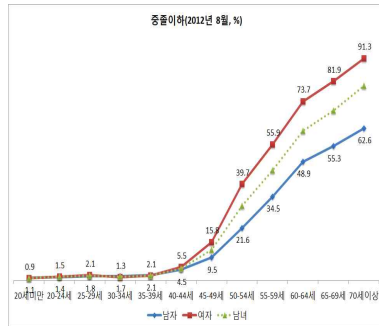
1. 인적 구성

1) 학력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8월)에서 30대는 남녀 모두 평균 교육연수가 14년이다. 하지만 40대 초반부터 평균 교육연수가 줄고 남녀 간 격차가 확대된다. 50대 초반은 남성 12.4년, 여성 10.9년이고, 60대 초반은 남성 10.4년, 여성 8.6년으로, 나이가 들수록 평균 교육연수가 줄어든다.



- 학력구성을 살펴보면 20~30대는 남녀 모두 중졸이하 저학력층이 1~2%밖에 안 된다. 하지만 50대 초반은 남성의 21.6%, 여성의 39.7%가 중졸이하고, 60대 초반은 남성의 48.9%, 여성의 73.7%가 중졸이하로, 나이가 들수록 중졸이하 저학력층 비중이 급증한다.
- 30대 초반은 대졸이상 고학력층이 남성은 42.2%, 여성은 37.8%로 많을 뿐만 아니라 남녀 간에 차이도 크지 않다. 하지만 대졸 남성은 50대 초반 25.4%, 60대 초반 13.3%로 나이가 들수록 뚝 떨어지고, 대졸 여성도 20대 후반(44.0%)을 정점으로 50대 초반 10.6%, 60대 초반 4.6%로 뚝 떨어진다.
- 따라서 '고학력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세대 간에 학력별 차이가 뚜렷하다. 20~30대는 남녀 모두 학력수준이 높지만, 50~60대는 학력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남녀 간에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2> 성별 연령별 교육연수와 학력분포(2012년 8월, 생산가능인구, 단위:년,%)

	평균 교육연수(년)			학력분포(%)					
	남자	여자	남녀	중졸이하			고졸		
20세 미만	9.4	9.4	9.4	1.1	0.9	1.0	5.9	5.1	5.5
20-24세	12.2	12.9	12.6	1.4	1.5	1.5	16.8	14.6	15.6
25-29세	13.8	14.3	14.1	1.8	2.1	1.9	24.3	19.6	22.0
30-34세	14.2	14.1	14.1	1.7	1.3	1.5	30.6	31.3	31.0
35-39세	14.1	13.8	14.0	2.1	2.1	2.1	36.6	41.0	38.7
40-44세	13.8	13.2	13.5	4.5	5.5	5.0	42.2	52.2	47.1
45-49세	13.3	12.4	12.9	9.5	15.8	12.6	46.0	56.1	51.0
50-54세	12.4	10.9	11.6	21.6	39.7	30.6	46.2	45.5	45.9
55-59세	11.4	9.9	10.7	34.5	55.9	45.3	43.0	34.6	38.8
60-64세	10.4	8.6	9.5	48.9	73.7	61.6	35.4	20.2	27.6
65-69세	10.0	7.7	8.7	55.3	81.9	69.8	30.7	14.6	21.9
70세 이상	9.2	6.8	7.8	62.6	91.3	79.9	24.6	6.8	13.8
15세 이상	12.3	11.3	11.8	17.2	29.7	23.6	33.0	29.9	3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2년 8월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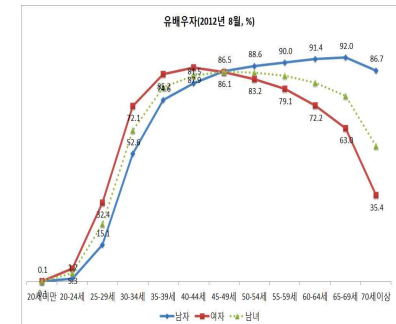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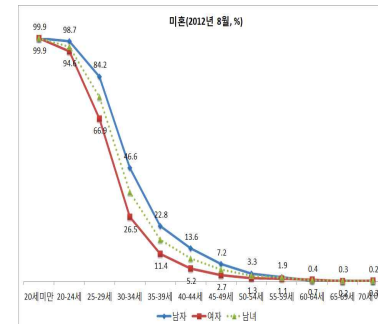
<표 II-2>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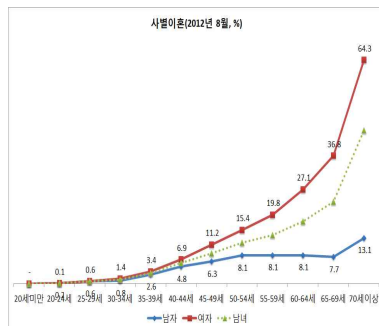
	학력분포(%)								
	전문대졸			대졸이상			재학휴학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 미만							93.0	93.9	93.4
20-24세	8.5	21.1	15.5	2.5	13.6	8.6	70.7	49.2	58.8
25-29세	22.1	30.6	26.2	35.7	44.0	39.8	16.1	3.7	10.1
30-34세	23.6	27.8	25.7	42.2	37.8	40.1	1.8	1.7	1.8
35-39세	18.8	21.7	20.2	41.9	34.2	38.1	0.6	1.0	0.8
40-44세	13.4	14.5	13.9	39.7	26.6	33.2	0.3	1.2	0.7
45-49세	8.0	6.9	7.5	36.3	20.0	28.3	0.2	1.1	0.7
50-54세	6.3	3.9	5.1	25.4	10.6	18.0	0.4	0.4	0.4
55-59세	3.6	1.6	2.6	18.9	7.6	13.2	-	0.2	0.1
60-64세	2.2	1.3	1.7	13.3	4.6	8.9	0.3	0.2	0.3
65-69세	1.2	0.8	1.0	12.8	2.5	7.2	-	0.2	0.1
70세 이상	1.0	0.3	0.6	11.8	1.6	5.6	-	-	-
15세 이상	10.0	11.2	10.6	25.9	17.7	21.7	13.9	11.5	12.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2년 8월 원자료

2) 혼인상태와 가구주 관계

- 나이가 들면 남녀 모두 미혼자가 줄지만, 40대 초반 남성 미혼자가 13.6%고 여성 미혼자가 5.2%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중장년층 미혼자가 적지 않다. 남성은 60대 후반(92.0%)까지 나이가 들수록 유배우자 비율이 계속 늘지만, 여성은 40대 초반(87.9%)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든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사별에서 비롯되는데, 50-60대 남성은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이 8% 안팎이지만, 여성은 50대 초반(15.4%)부터 60대 후반(36.8%)까지 사별 또는 이혼한 사람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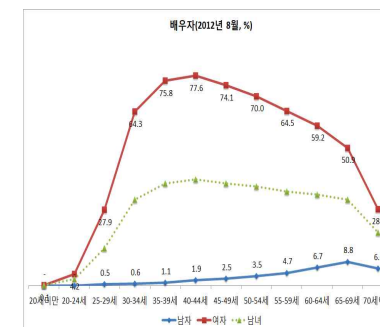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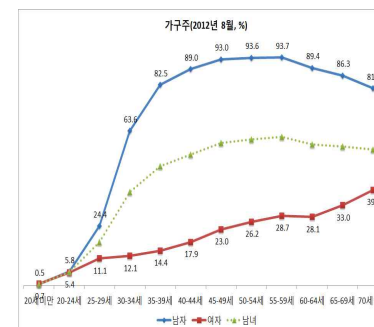


<표 II-3> 성별 연령계층별 혼인상태(2012년 8월, 단위:%)

	미혼			유배우자			사별이혼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 미만	99.9	99.9	99.9	0.1	0.1	0.1			
20-24세	98.7	94.6	96.5	1.2	5.3	3.4	0.2	0.1	0.1
25-29세	84.2	66.9	75.8	15.1	32.4	23.6	0.6	0.6	0.6
30-34세	46.6	26.5	36.7	52.6	72.1	62.2	0.8	1.4	1.1
35-39세	22.8	11.4	17.2	74.6	85.2	79.8	2.6	3.4	3.0
40-44세	13.6	5.2	9.5	81.5	87.9	84.7	4.8	6.9	5.9
45-49세	7.2	2.7	5.0	86.5	86.1	86.3	6.3	11.2	8.7
50-54세	3.3	1.3	2.3	88.6	83.2	85.9	8.1	15.4	11.8
55-59세	1.9	1.1	1.5	90.0	79.1	84.5	8.1	19.8	14.0
60-64세	0.4	0.7	0.5	91.4	72.2	81.6	8.1	27.1	17.9
65-69세	0.3	0.2	0.3	92.0	63.0	76.2	7.7	36.8	23.6
70세 이상	0.2	0.3	0.2	86.7	35.4	55.8	13.1	64.3	44.0
15세 이상	31.2	24.1	27.6	63.9	59.9	61.8	4.9	16.0	10.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2년 8월 원자료

- 사별 또는 이혼으로 여성 단신 가구가 늘면서 여성 가구주 비율은 30대 초반 12.1%, 40대 초반 17.9%, 50대 초반 26.2%, 60대 초반 28.1%로 나이가 들수록 늘고 있다. 이처럼 여성 가구주 비율이 늘면서 여성 배우자 비율은 40대 초반 (77.6%)을 정점으로 줄고 있다.



<표 II-4> 성별 연령계층별 가구주관계(2012년 8월, 단위:%)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 미만	0.5	0.7	0.6		0.1	0.1	99.5	99.2	99.4
20-24세	5.8	5.4	5.6		4.2	2.3	94.2	90.4	92.1
25-29세	24.4	11.1	17.9	0.5	27.9	13.9	75.1	61.0	68.2
30-34세	63.6	12.1	38.3	0.6	64.3	31.8	35.8	23.6	29.8
35-39세	82.5	14.4	49.0	1.1	75.8	37.8	16.4	9.9	13.2
40-44세	89.0	17.9	53.9	1.9	77.6	39.3	9.1	4.5	6.8
45-49세	93.0	23.0	58.5	2.5	74.1	37.7	4.5	2.9	3.7
50-54세	93.6	26.2	60.0	3.5	70.0	36.7	2.9	3.8	3.4
55-59세	93.7	28.7	61.0	4.7	64.5	34.7	1.6	6.8	4.2
60-64세	89.4	28.1	58.0	6.7	59.2	33.6	3.9	12.7	8.4
65-69세	86.3	33.0	57.2	8.8	50.9	31.8	4.9	16.1	11.0
70세 이상	81.0	39.3	55.8	6.3	28.3	19.6	12.7	32.4	24.6
15세 이상	68.3	20.2	43.7	2.7	51.1	27.4	29.0	28.7	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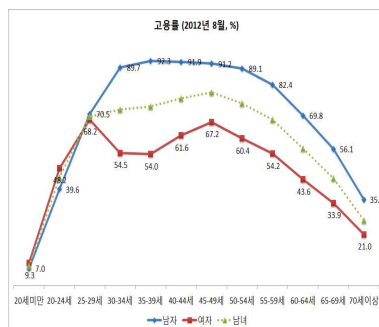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2년 8월 원자료

2. 주요 고용지표

1) 고용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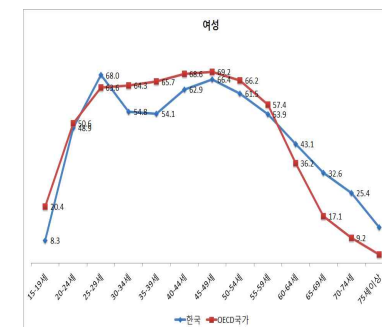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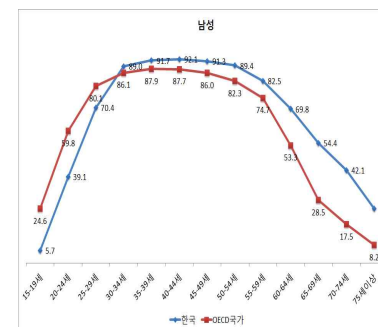
- 20대는 남녀 모두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시기다. 따라서 고용률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시기인데, 남성은 20대 초반 39.6%에서 20대 후반 70.5%로 늘고, 여성은 48.2%에서 68.2%로 는다. 노동시장 진입기인 20대에는 남녀 간에 고용률 차이도 적다.

1) 2012년 8월 취업자는 2,486만 명이고,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는 4,167만 명이다.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 100'으로 계산하므로 59.7%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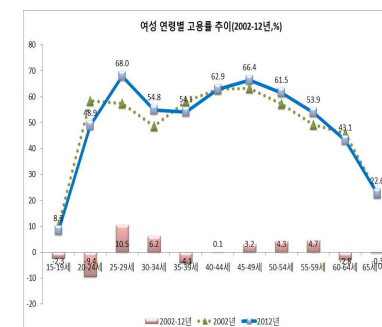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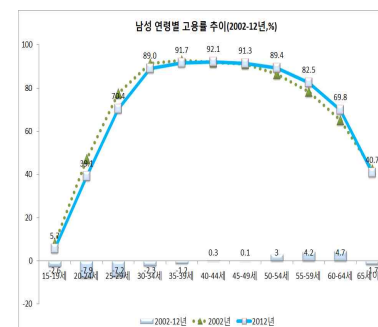


- 30~40대 남성 고용률은 90~92%로 매우 높다. 남성에게 30~40대는 고용이 안정된 노동시장 정착기라 할 수 있다.
- 여성은 20대 후반(68.2%)을 정점으로 30대 고용률은 54%로 뚝 떨어진다. 이는 자녀출산과 양육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 여성에게 30대는 노동시장 경력이 단절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 30대에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은 40대에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이에 따라 여성 고용률은 40대 초반에는 61.6%, 40대 후반에는 67.2%로 다시 높아진다. 결국 30~40대에 여성 고용률은 M자 곡선을 그리며, 남녀 간에 고용률 차이가 뚜렷하다.
- 50~60대는 노동생활을 마치고 은퇴생활로 전환해 가는 시기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은퇴 후 노후생활이 준비되지 않아, 노동생활과 은퇴생활 모두 불안정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50대 초반부터 남녀 모두 고용률이 하락세로 돌아서지만, 60대 후반에도 남성은 56.1%, 여성은 33.9%로 고용률이 매우 높다.
- 한국의 고용률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남자 고용률은 20대만 한국이 낮고 30대 이후는 한국이 높다. 여자 고용률은 50대까지 한국이 낮지만 20대 후반과 60대 이후는 한국이 높다. 특히 60대 후반 노인층에서 한국의 고용률(남자 54.4%, 여자 32.6%)이 OECD 회원국(남자 28.5%, 여자 17.1%)보다 크게 높다²⁾. 이처럼 한국에서 노인 고용률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은, 그만큼 은퇴 후 노후생활이 준비되지 않고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2) OECD.stat에서 2013년 7월 19일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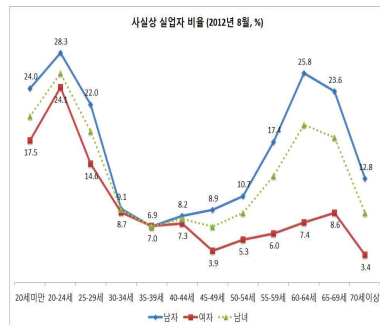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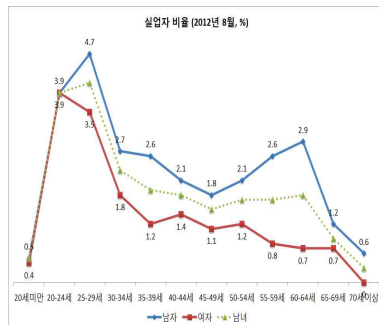


- 2002~12년 성별 연령계층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남성 고용률은 20~30대는 감소하고 50~60대는 증가했다. 특히 20대는 7%p 이상 감소했고, 50대 후반과 60대 초반 남성 고용률은 4%p 이상 증가했다. 이에 비해 여성 고용률은 20대 초반과 30대 후반, 60대 고용률은 감소하고, 다른 연령층은 증가했다.



2) 실업자 비율³⁾

- 통계청이 공식 발표하는 실업자 비율은 남녀 모두 20대에 가장 높고, 30~40대엔 나이가 들수록 계속 낮아진다. 20대 초반엔 남녀 모두 3.9%고, 20대 후반엔 남성은 4.7%, 여성은 3.5%다. 여성은 50~60대에도 계속 낮아지지만, 남성은 50대 초반(2.1%)부터 60대 초반(2.9%) 사이 계속 늘어난다.
- 사실상 실업자 비율⁴⁾도 공식 실업자 비율과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20대에 가장 높다. 20대 초반 남성은 28.3%, 여성은 24.1%고, 20대 후반 남성은 22.0%, 여성은 14.6%로, 공식 실업자 비율보다 4~7배 높다. 30~40대엔 남녀 모두 사실상 실업자 비율이 낮아지지만, 남성은 30대 후반(6.9%), 여성은 40대 후반(3.9%)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다. 50대 남성은 11~17%로 높아지고, 60대 남성은 24~26%로 20대만큼 높아진다. 여성도 50대 초반(5.3%)부터 60대 후반(8.6%)까지 계속 높아진다.
- 이상은 5060세대가 다니던 직장에서는 정년 등을 이유로 밀려나고, 노후생활은 준비되지 않아 다시 구직활동에 나서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 3) 통상적으로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으로 계산한다.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는 2,563만 명이고 실업자는 76만 명이므로 실업률은 3.0%가 된다. 여기서 실업자비율은 고용률과 분모를 통일시키기 위해 '실업자÷15세이상생산가능인구×100'으로 계산했다. 2012년 8월 현재 생산가능인구는 4,167만 명이고 실업자는 76만 명이므로 실업자비율은 1.8%가 된다.
- 4) 사실상 실업자는 '실업자 + 36시간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쉬었음 응답자'로 정의했고, 사실상 실업자 비율은 '사실상 실업자÷15세이상생산가능인구×100'으로 계산했다.

<표 II-5> 성별 연령계층별 주요 고용지표(2012년 8월, 단위:%)

	고용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실업자 비율			사실상 실업자 비율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 미만	7.0	9.3	8.1	92.4	90.2	91.4	0.5	0.4	0.5	24.0	17.5	20.5
20-24세	39.6	48.2	44.3	56.6	47.8	51.8	3.9	3.9	3.9	28.3	24.1	25.8
25-29세	70.5	68.2	69.4	24.8	28.4	26.5	4.7	3.5	4.1	22.0	14.6	18.6
30-34세	89.7	54.5	72.4	7.6	43.7	25.3	2.7	1.8	2.3	9.1	8.7	9.0
35-39세	92.3	54.0	73.5	5.1	44.8	24.6	2.6	1.2	1.9	6.9	7.0	6.9
40-44세	91.9	61.6	76.9	6.0	37.0	21.3	2.1	1.4	1.8	8.2	7.3	7.9
45-49세	91.2	67.2	79.3	7.1	31.7	19.2	1.8	1.1	1.5	8.9	3.9	6.9
50-54세	89.1	60.4	74.8	8.8	38.4	23.5	2.1	1.2	1.7	10.7	5.3	8.6
55-59세	82.4	54.2	68.2	14.9	45.0	30.1	2.6	0.8	1.7	17.4	6.0	13.2
60-64세	69.8	43.6	56.3	27.4	55.7	41.9	2.9	0.7	1.8	25.8	7.4	19.5
65-69세	56.1	33.9	43.9	42.8	65.4	55.1	1.2	0.7	0.9	23.6	8.6	17.9
70세 이상	35.4	21.0	26.7	64.0	79.0	73.0	0.6	0.0	0.3	12.8	3.4	8.6
15-64세	75.1	53.3	64.3	24.4	49.0	36.7	2.5	1.6	2.1	13.2	9.3	11.7
15세 이상	71.2	48.6	59.7	26.5	50.0	38.5	2.3	1.4	1.8	13.6	9.0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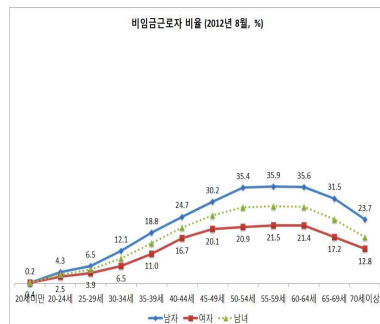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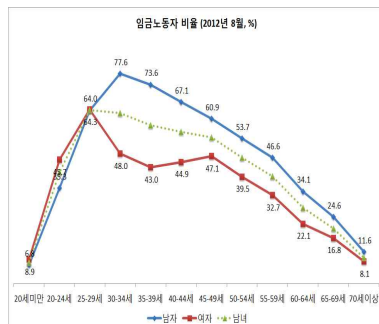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2년 8월 원자료

주: 모든 비율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대비 비율임

3) 임금노동자와 비임금근로자 비율⁵⁾

- 20대 후반 임금노동자 비율은 남자 64.0%, 여자 64.3%로 남녀 간에 차이가 없다. 남성은 30대 초반(77.6%), 여성은 20대 후반(64.3%)을 정점으로 하락하면서 남녀 간에 격차가 벌어진다. 특히 여성은 30대에 20%p 이상 줄었다가 40대에 4%p 정도 늘어나는데, 이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인 30대에 임금노동자 생활을 중단한 여성들이 임금노동자로 돌아오지 못하고 비임금근로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을 말해준다.
- 남녀 모두 나이가 들면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늘어난다. 50대와 60대 초반에서 남자는 35~36%, 여자는 21~22%로 가장 많다. 50대까지는 임금노동자가 많지만, 60대 이후는 비임금근로자가 많다. 한국에서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임금노동자 노릇을 더 이상 하기 힘든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고용형태인 것이다.

- 5) 취업자는 임금노동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성된다. 임금노동자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되고,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된다. 임금노동자 비율은 '임금노동자÷15세이상생산가능인구×100'으로 계산하고,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비임금근로자÷15세이상생산가능인구×100'으로 계산했다.



<표 II-6> 성별 연령계층별 주요 고용지표(2012년 8월, 단위:%)

	임금노동자비율			비임금근로자비율			공식고용 비율			비공식 고용 비율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 미만	6.8	8.9	7.8	0.2	0.4	0.3	0.3	0.4	0.4	6.7	8.8	7.7
20-24세	35.3	45.7	41.0	4.3	2.5	3.3	8.5	16.2	12.7	31.0	32.1	31.6
25-29세	64.0	64.3	64.1	6.5	3.9	5.2	38.6	36.3	37.4	32.0	32.0	32.0
30-34세	77.6	48.0	63.1	12.1	6.5	9.4	53.9	28.1	41.2	35.8	26.4	31.2
35-39세	73.6	43.0	58.5	18.8	11.0	14.9	51.8	20.1	36.2	40.5	33.8	37.2
40-44세	67.1	44.9	56.1	24.7	16.7	20.8	47.9	17.3	32.7	44.0	44.3	44.1
45-49세	60.9	47.1	54.1	30.2	20.1	25.2	42.9	16.6	29.9	48.2	50.6	49.4
50-54세	53.7	39.5	46.6	35.4	20.9	28.2	35.8	11.4	23.6	53.3	49.1	51.2
55-59세	46.6	32.7	39.6	35.9	21.5	28.6	25.4	7.2	16.3	57.0	47.0	52.0
60-64세	34.1	22.1	27.9	35.6	21.4	28.3	9.1	1.8	5.4	60.7	41.7	50.9
65-69세	24.6	16.8	20.3	31.5	17.2	23.7	5.3	0.7	2.8	50.8	33.2	41.2
70세 이상	11.6	8.1	9.5	23.7	12.8	17.2	0.9	0.0	0.4	34.4	20.9	26.3
15-64세	54.4	40.6	47.5	20.7	12.7	16.7	34.5	16.2	25.4	43.4	39.2	41.3
15세 이상	49.8	35.7	42.6	21.4	13.0	17.1	30.4	13.5	21.8	40.8	35.1	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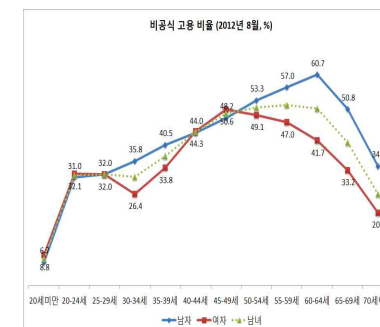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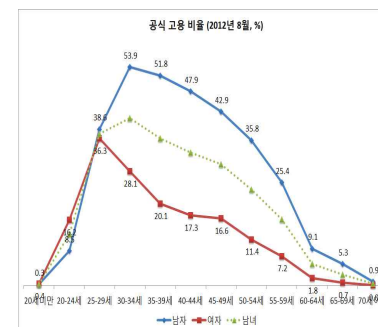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2년 8월 원자료

4) 공식고용과 비공식고용 비율

○ 5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과 고용주를 공식고용으로 정의하고, 5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와 5인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과 무급가족종사자를 비공식고용으로 정의하면,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중 공식고용은 907만 명(21.8%)이고, 비공식고용은 1,579만 명(37.9%)이다.

○ 20대 후반 공식고용 비율은 남자 38.6%, 여자 36.3%로 거의 같다. 남성은 30대 초반(53.9%), 여성은 20대 후반(36.3%)을 정점으로 공식고용 비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남녀 간 격차도 벌어진다.

○ 남녀 모두 나이가 들수록 비공식고용 비율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남성은 20대 후반(32.0%)부터 60대 초반(60.7%)까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여성은 자녀출산 및 양육기인 30대 초반(26.4%)을 저점으로 40대 후반(50.6%)까지 가파르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남성은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 여성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만 공식고용이 비공식고용보다 많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비공식고용이 공식고용보다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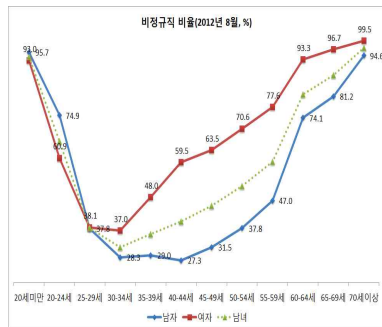


5) 비정규직 비율⁶⁾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8월)에서 20대 초반 비정규직 비율은 남자 74.9%, 여자 60.9%로 매우 높다. 하지만 20대 후반에는 남자 37.8%, 여자 38.1%로 푹 떨어지고 남녀 차이가 없다.

○ 30~40대 남성은 비정규직 비율이 27~32%로 낮지만, 50~60대 남성은 50대 초반 37.8%, 50대 후반 47.0%, 60대 초반 74.1%로 비정규직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여성은 20대 후반(38.1%)과 30대 초반(37.0%)을 저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비정규직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40대 초반 여성은 비정규직 비율이 59.5%로 절반을 훌쩍 넘어서고, 50대 후반 여성은 77.6%로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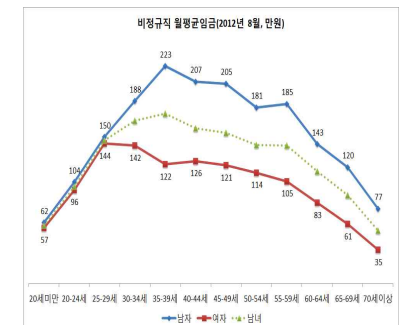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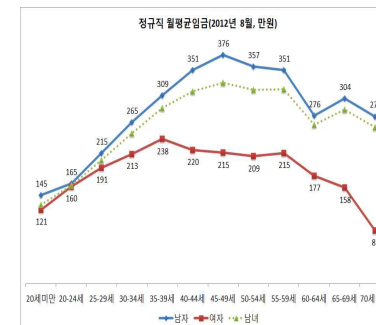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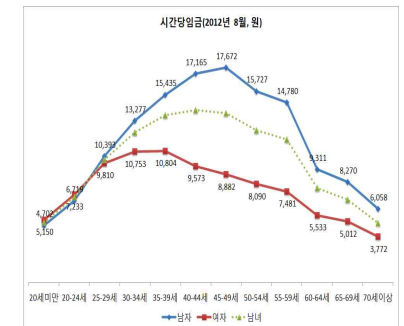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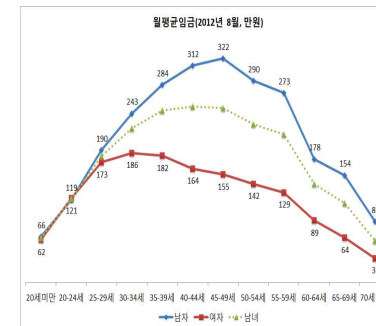
6)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고용지표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실업자, 임금노동자, 비임금근로자, 공식고용, 비공식고용 비율을 계산한 것인데 비해, 여기서 비정규직 비율은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비정규직÷임금노동자×100)이다.



3. 임금

1) 임금수준

- 2012년 8월 현재 월평균임금은 남성은 40대 후반(322만원), 여성은 30대 초반(186만원)을 정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하락하고 있다. 시간당 임금도 남성은 40대 후반(1만 8천원), 여성은 30대(1만 800원)를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정규직은 남성은 40대 후반(376만원), 여성은 30대 후반(238만원)을 정점으로 월평균임금이 하락하고, 비정규직은 남성은 30대 후반(223만원), 여성은 20대 후반(144만원)을 정점으로 월평균임금이 하락한다. 20~40대는 나이가 들면 임금이 높아지지만, 50~60대는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낮아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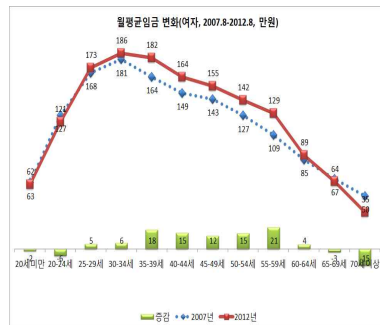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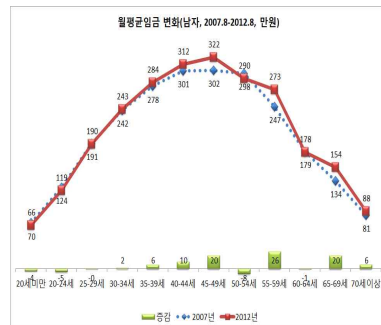


<표 II-7> 성별 연령계층별 임금수준(2012년 8월, 단위: 만원, 원)

	월평균임금(만원)									시간당임금(원)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 미만	66	62	64	145	121	129	62	57	60	4,702	5,150	4,950
20~24세	119	121	120	165	160	161	104	96	100	6,719	7,233	7,034
25~29세	190	173	182	215	191	203	150	144	147	10,393	9,810	10,108
30~34세	243	186	222	265	213	247	188	142	167	13,277	10,753	12,335
35~39세	284	182	247	309	238	288	223	122	175	15,435	10,804	13,764
40~44세	312	164	253	351	220	316	207	126	160	17,165	9,573	14,165
45~49세	322	155	251	376	215	330	205	121	155	17,672	8,882	13,903
50~54세	290	142	227	357	209	319	181	114	142	15,727	8,090	12,497
55~59세	273	129	213	351	215	320	185	105	142	14,780	7,481	11,753
60~64세	178	89	142	276	177	261	143	83	115	9,311	5,533	7,780
65~69세	154	64	114	304	158	286	120	61	91	8,270	5,012	6,800
70세 이상	88	35	61	275	87	257	77	35	55	6,058	3,772	4,877
15세 이상	256	150	210	312	207	277	169	111	138	13,997	8,787	11,76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2년 8월 원자료

-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5년 실질임금 인상액(율)은 5만원 (2.7%)밖에 안 된다. 남자는 8만원(3.1%), 여자는 5만원(3.4%) 인상되었다.



<표 II-8> 성별 연령계층별 실질임금 변화(2007~2012년 8월, 단위: 만원, %)

	2007년 8월 임금			2012년 8월 임금			증감액(만원)			증가율(%)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미만	70	63	66	66	62	64	-4	-2	-3	-5.1	-2.8	-4.1
20~24세	124	127	126	119	121	120	-5	-6	-6	-3.7	-5.0	-4.6
25~29세	191	168	180	190	173	182	-0	5	2	-0.2	3.0	1.0
30~34세	242	181	220	243	186	222	2	6	2	0.7	3.3	1.0
35~39세	278	164	237	284	182	247	6	18	11	2.2	11.2	4.5
40~44세	301	149	240	312	164	253	10	15	14	3.5	10.3	5.7
45~49세	302	143	237	322	155	251	20	12	14	6.6	8.7	5.9

50~54세	298	127	231	290	142	227	-8	15	-4	-2.6	11.6	-1.5
55~59세	247	109	197	273	129	213	26	21	17	10.6	19.0	8.5
60~64세	179	85	142	178	89	142	-1	4	-1	-0.6	5.0	-0.4
65~69세	134	67	107	154	64	114	20	-3	7	15.1	-4.1	6.5
70세이상	81	50	66	88	35	61	6	-15	-6	8.0	-30.7	-8.9
전체	248	145	205	256	150	210	8	5	5	3.1	3.4	2.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7년과 2012년 8월 원자료

주: 2007년 8월 임금은 2012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해서 조정한 실질임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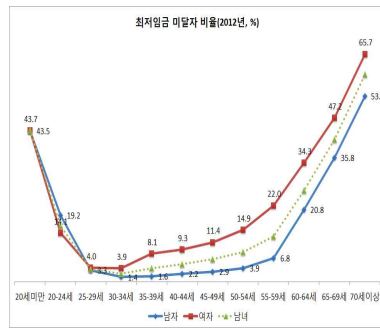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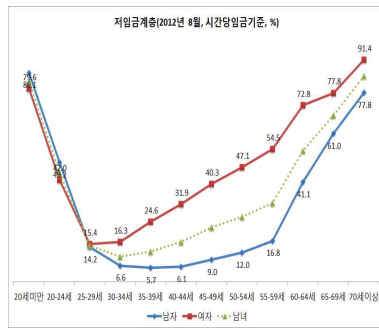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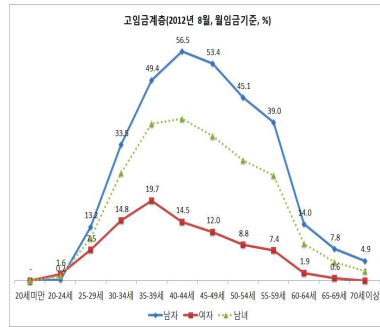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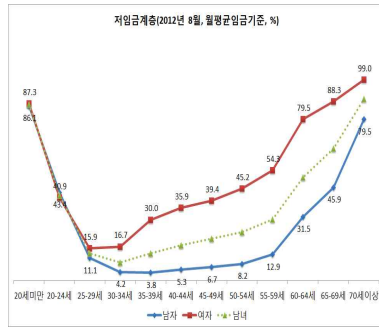
2) 저임금-고임금 계층

- 30~40대 남자는 저임금계층이 4~7%(월평균임금 기준)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20대 초반은 저임금계층이 43.4%고, 60대 초반은 31.5%, 60대 후반은 45.9%로, 30대 후반(3.8%)을 저점으로 나이가 많거나 적을수록 저임금계층이 늘어나는 U자를 그리고 있다. 여성은 20대 후반(15.9%)과 30대 초반(16.7%)을 저점으로 V자를 그리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다.

- 40대 남자는 절반 이상이 고임금계층이다. 남자는 40대 초반(56.5%), 여자는 30대 후반(19.7%)을 정점으로 고임금계층이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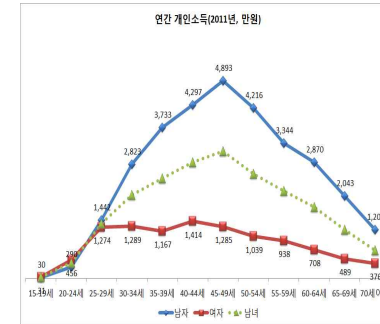
- 30~40대 남자는 최저임금 미달 자가 1.4~2.9%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20대 초반은 19.2%, 60대 초반은 20.8%, 60대 후반은 35.8%로, 나이가 적거나 많을수록 늘어나는 U자를 그리고 있다. 여성도 20대 후반(4.0%)과 30대 초반(3.9%)을 저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최저임금 미달 자가 늘어나는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7)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 2/3 이상 3/2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했다.



4. 개인소득

○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성별 연령계층별 개인소득을 살펴보면, 남성은 40대 후반(4,893만원)을 정점으로 가파른 산을 그리고, 여성은 40대 초반(1,414만원)을 정점으로 하면서도 기울기가 매우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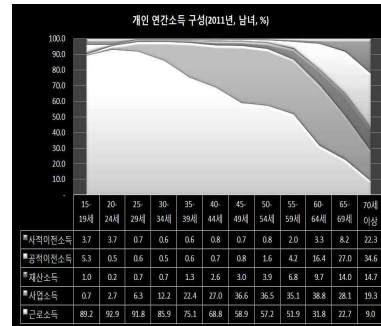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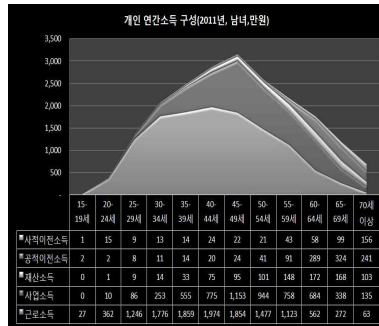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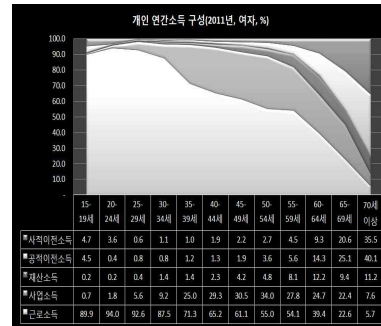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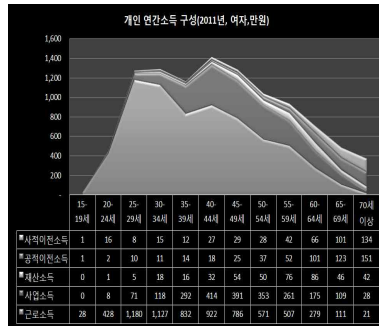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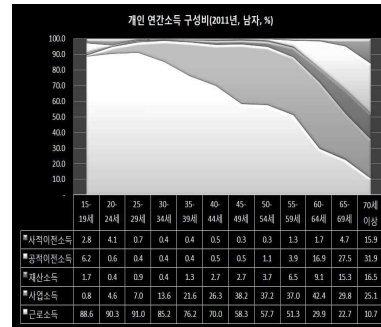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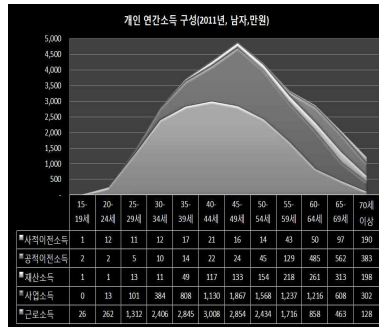
○ 남성은 개인소득 중 근로소득(62.2%)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사업소득(29.2%), 재산소득(3.9%), 공적 이전소득(3.6%), 사적 이전소득(1.2%) 순이다. 여성도 근로소득(65.8%)이 가장 많고 사업소득(21.6%), 공적 이전소득(4.7%), 사적 이전소득(4.2%), 재산소득(3.7%) 순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개인소득의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60~70대 노인들은 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60대 후반 남성은 소득의 27.5%가 공적 이전소득이고, 여성은 소득의 25.1%가 공적 이전소득이다. 70대 남성은 소득의 31.9%가 공적 이전소득이고, 여성은 소득의 40.1%가 공적 이전소득이다. 사적 이전소득까지 합치면 70대 남성은 소득의 절반(47.8%)이 이전소득이고, 여성은 75.6%가 이전소득이다. 그만큼 노후생활에서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표 II-9> 성별 연령별 저임금-고임금계층과 최저임금 미달자(2012년 8월,단위:%)

	월평균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 기준					
	저임금계층			고임금계층			저임금계층			최저임금 미달자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 미만	86.1	87.3	86.8	-	-	-	86.1	79.6	82.5	43.5	43.7	43.6
20-24세	43.4	40.9	41.9	0.2	1.6	1.0	49.2	42.0	44.8	19.2	14.1	16.1
25-29세	11.1	15.9	13.4	13.2	7.5	10.4	14.2	15.4	14.8	3.3	4.0	3.6
30-34세	4.2	16.7	8.9	33.5	14.8	26.5	6.6	16.3	10.2	1.4	3.9	2.3
35-39세	3.8	30.0	13.3	49.4	19.7	38.7	5.7	24.6	12.5	1.6	8.1	3.9
40-44세	5.3	35.9	17.4	56.5	14.5	39.9	6.1	31.9	16.3	2.2	9.3	5.0
45-49세	6.7	39.4	20.7	53.4	12.0	35.7	9.0	40.3	22.4	2.9	11.4	6.5
50-54세	8.2	45.2	23.9	45.1	8.8	29.7	12.0	47.1	26.8	3.9	14.9	8.6
55-59세	12.9	54.3	30.1	39.0	7.4	25.9	16.8	54.5	32.5	6.8	22.0	13.1
60-64세	31.5	79.5	50.9	14.0	1.9	9.1	41.1	72.8	53.9	20.8	34.3	26.3
65-69세	45.9	88.3	65.1	7.8	0.6	4.5	61.0	77.8	68.6	35.8	47.2	41.0
70세 이상	79.5	99.0	89.6	4.9	-	2.3	77.8	91.4	84.9	53.5	65.7	59.8
15세 이상	12.5	38.7	23.7	37.5	10.1	25.7	15.5	37.1	24.8	6.3	13.9	9.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2년 8월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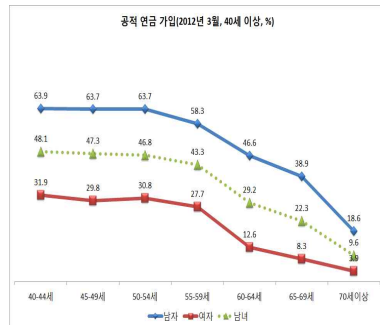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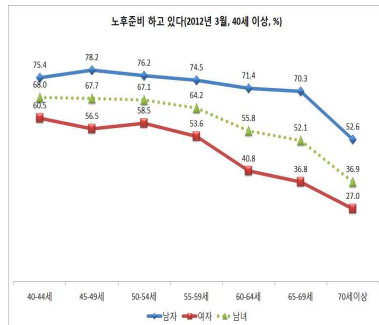
<표 II-10> 성별 연령계층별 소득 구성(2011년)

성	연령	금액(만원)						구성비(%)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남자	15-19세	30	26	0	1	2	1	100.0	88.6	0.8	1.7	6.2	2.8
	20-24세	290	262	13	1	2	12	100.0	90.3	4.6	0.4	0.6	4.1
	25-29세	1,442	1,312	101	13	5	11	100.0	91.0	7.0	0.9	0.4	0.7
	30-34세	2,823	2,406	384	11	10	12	100.0	85.2	13.6	0.4	0.4	0.4
	35-39세	3,733	2,845	808	49	14	17	100.0	76.2	21.6	1.3	0.4	0.4
	40-44세	4,297	3,008	1,130	117	22	21	100.0	70.0	26.3	2.7	0.5	0.5
	45-49세	4,893	2,854	1,867	133	24	16	100.0	58.3	38.2	2.7	0.5	0.3
	50-54세	4,216	2,434	1,568	154	45	14	100.0	57.7	37.2	3.7	1.1	0.3
	55-59세	3,344	1,716	1,237	218	129	43	100.0	51.3	37.0	6.5	3.9	1.3
	60-64세	2,870	858	1,216	261	485	50	100.0	29.9	42.4	9.1	16.9	1.7
	65-69세	2,043	463	608	313	562	97	100.0	22.7	29.8	15.3	27.5	4.7
	70세이상	1,201	128	302	198	383	190	100.0	10.7	25.1	16.5	31.9	15.9
	전체	2,849	1,772	831	110	102	34	100.0	62.2	29.2	3.9	3.6	1.2
여자	15-19세	31	28	0	0	1	1	100.0	89.9	0.7	0.2	4.5	4.7
	20-24세	456	428	8	1	2	16	100.0	94.0	1.8	0.2	0.4	3.6
	25-29세	1,274	1,180	71	5	10	8	100.0	92.6	5.6	0.4	0.8	0.6
	30-34세	1,289	1,127	118	18	11	15	100.0	87.5	9.2	1.4	0.8	1.1
	35-39세	1,167	832	292	16	14	12	100.0	71.3	25.0	1.4	1.2	1.0
	40-44세	1,414	922	414	32	18	27	100.0	65.2	29.3	2.3	1.3	1.9
	45-49세	1,285	786	391	54	25	29	100.0	61.1	30.5	4.2	1.9	2.2
	50-54세	1,039	571	353	50	37	28	100.0	55.0	34.0	4.8	3.6	2.7
	55-59세	938	507	261	76	52	42	100.0	54.1	27.8	8.1	5.6	4.5
	60-64세	708	279	175	86	101	66	100.0	39.4	24.7	12.2	14.3	9.3
	65-69세	489	111	109	46	123	101	100.0	22.6	22.4	9.4	25.1	20.6
	70세이상	376	21	28	42	151	134	100.0	5.7	7.6	11.2	40.1	35.5
	전체	913	600	197	34	43	39	100.0	65.8	21.6	3.7	4.7	4.2
남녀	15-19세	30	27	0	0	2	1	100.0	89.2	0.7	1.0	5.3	3.7
	20-24세	390	362	10	1	2	15	100.0	92.9	2.7	0.2	0.5	3.7
	25-29세	1,358	1,246	86	9	8	9	100.0	91.8	6.3	0.7	0.6	0.7
	30-34세	2,067	1,776	253	14	11	13	100.0	85.9	12.2	0.7	0.5	0.6
	35-39세	2,476	1,859	555	33	14	14	100.0	75.1	22.4	1.3	0.6	0.6
	40-44세	2,868	1,974	775	75	20	24	100.0	68.8	27.0	2.6	0.7	0.8
	45-49세	3,148	1,854	1,153	95	24	22	100.0	58.9	36.6	3.0	0.8	0.7
	50-54세	2,583	1,477	944	101	41	21	100.0	57.2	36.5	3.9	1.6	0.8
	55-59세	2,163	1,123	758	148	91	43	100.0	51.9	35.1	6.8	4.2	2.0
	60-64세	1,765	562	684	172	289	58	100.0	31.8	38.8	9.7	16.4	3.3
	65-69세	1,201	272	338	168	324	99	100.0	22.7	28.1	14.0	27.0	8.2
	70세이상	697	63	135	103	241	156	100.0	9.0	19.3	14.7	34.6	22.3
	전체	1,852	1,169	504	71	72	36	100.0	63.1	27.2	3.8	3.9	2.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5. 노후준비(40세 이상)

- 40세 이상 중장년층과 고령자 가운데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했던 사람은 59.9%(남자 72.2%, 여자 48.5%)로, 나머지 40%는 노후생활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40~50대 남성은 75~78%가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40~50대 여성은 54~61%가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있다.
- 노후생활 준비 방법으로는 공적연금 가입이 가장 많은데, 공적연금 가입자는 37.2%(남자 53.6%, 여자 21.8%)다. 40~50대 남성은 58~64%가 공적연금 가입자고, 40~50대 여성은 28~32%가 공적연금 가입자다. 한데 60~70대 공적연금 수혜자 연령층에서는 가입자 비율이 크게 떨어진다.



남 녀	50-54세	58.5	28.3	2.5	17.0	3.3	14.9	2.3	13.1	1.1	41.5
	55-59세	53.6	25.1	2.6	11.0	1.7	13.2	1.3	14.4	1.4	46.4
	60-64세	40.8	11.2	1.4	5.2	1.0	13.1	.7	14.9	2.4	59.2
	65-69세	36.8	7.8	.5	1.8	.6	9.8	.6	12.8	7.1	63.2
	70세이상	27.0	3.3	.6	.3	.2	6.4	.2	8.1	10.2	73.0
	전체	48.5	19.6	2.2	12.8	2.4	13.4	1.3	10.6	3.2	51.5
	40-44세	68.0	42.4	5.7	25.3	8.3	16.4	3.1	10.3	.2	32.0
	45-49세	67.7	42.2	5.1	23.4	6.8	16.7	2.9	12.2	.7	32.3
	50-54세	67.1	41.3	5.5	18.5	5.1	13.9	2.9	15.0	1.1	32.9
	55-59세	64.2	37.7	5.6	11.3	4.7	13.1	2.3	17.0	1.6	35.8
	60-64세	55.8	25.4	3.8	6.4	2.2	13.6	1.7	21.1	3.2	44.2
	65-69세	52.1	18.5	3.9	2.9	1.7	11.9	.9	19.1	6.8	47.9
	70세이상	36.9	7.3	2.3	.5	.7	8.5	.4	13.1	10.5	63.1
	전체	59.9	32.5	4.7	14.4	4.7	13.7	2.2	14.5	3.1	40.1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표 II-11> 성별 연령계층별 노후생활 준비(2012년 3월, 단위:%)

		있음	국민 연금	공무 원사 학 근 연 금	개인 연금	퇴직 (연)금	예 금 적 금	주 식 펀 드 채 권 선 물	부 동 산	기 타	없 음
남 자	40-44세	75.4	56.7	7.2	25.8	12.4	15.4	4.3	13.5	.2	24.6
	45-49세	78.2	56.3	7.4	25.8	9.2	16.2	3.9	16.0	.8	21.8
	50-54세	76.2	55.0	8.7	20.0	7.1	12.9	3.5	17.1	1.1	23.8
	55-59세	74.5	49.9	8.4	11.5	7.5	13.1	3.2	19.5	1.8	25.5
	60-64세	71.4	40.3	6.3	7.7	3.4	14.1	2.6	27.5	4.0	28.6
	65-69세	70.3	31.1	7.8	4.2	3.0	14.5	1.3	26.6	6.4	29.7
	70세이상	52.6	13.7	4.9	.7	1.4	11.8	.6	20.9	11.0	47.4
	전체	72.2	46.3	7.3	16.2	7.2	14.1	3.1	18.7	2.9	27.8
여 자	40-44세	60.5	27.8	4.1	24.9	4.2	17.4	1.9	7.0	.2	39.5
	45-49세	56.5	27.2	2.7	20.8	4.2	17.3	1.8	8.2	.6	43.5

제4장 세대별 생활상태

1. 가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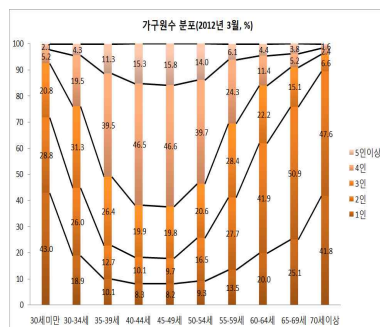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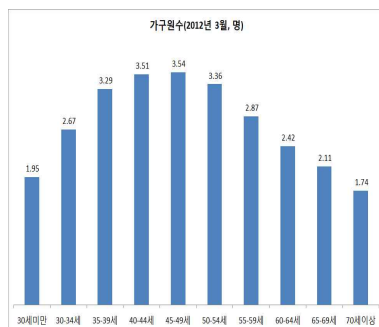
1) 가구원수

○ 가구당 가구원수는 평균 2.86명이다. 가구주가 30세 미만일 때 가구원수는 1.95명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구원수가 늘어나 40대 후반에는 3.54명으로 가장 많다. 40대 후반을 정점으로 가구원수는 줄어드는데, 60대 초반은 2.42명, 60대 후반은 2.11명, 70세 이상은 1.74명이다.

○ 단신가구와 2인 가구는 40대를 저점으로 늘어나고, 4인가구와 5인 이상 가구는 40대를 정점으로 줄어든다.

- 단신가구는 40대(8.2~8.3%)를 저점으로 20대는 43.0%, 60대 후반은 25.1%, 70대는 41.8%로 늘어난다. 2인가구도 40대(9.7~10.1%)를 저점으로 20대는 28.8%, 60대 후반은 50.9%, 70대는 47.6%로 늘어난다. 노인 가구는 단신 또는 2인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4인 가구는 40대(46.5~46.6%)를 정점으로 20대는 5.2%, 60대 후반은 5.2%로 줄어든다. 5인 가구도 40대(15.3~15.8%)를 정점으로 20대는 2.1%, 60대 후반은 3.8%로 줄어든다.



<표 II-12>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수 (2012년 3월,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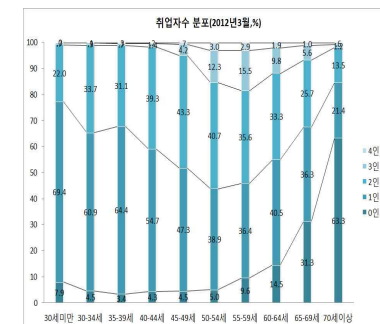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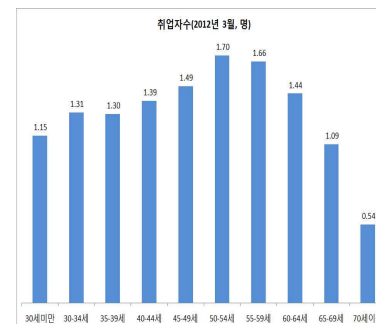
	평균(명)	분포(%)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30세미만	1.95	43.0	28.8	20.8	5.2	2.1
30-34세	2.67	18.9	26.0	31.3	19.5	4.3
35-39세	3.29	10.1	12.7	26.4	39.5	11.3
40-44세	3.51	8.3	10.1	19.9	46.5	15.3
45-49세	3.54	8.2	9.7	19.8	46.6	15.8
50-54세	3.36	9.3	16.5	20.6	39.7	14.0
55-59세	2.87	13.5	27.7	28.4	24.3	6.1
60-64세	2.42	20.0	41.9	22.2	11.4	4.4
65-69세	2.11	25.1	50.9	15.1	5.2	3.8
70세이상	1.74	41.8	47.6	6.6	2.4	1.6
전체	2.86	17.9	25.3	20.5	27.4	9.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2) 취업자 수

○ 가구당 취업자는 평균 1.31명이다. 가구주가 30세 미만일 때 취업자는 1.15명이고,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 50대 초반에는 1.70명으로 가장 많다. 50대 후반부터 취업자는 줄어드는데, 60대 초반은 1.44명, 60대 후반은 1.09명, 70세 이상은 0.54명으로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 취업자가 1명인 가구가 44.9%로 가장 많고, 2명인 가구가 32.8%로 다음으로 많다. 취업자가 1명도 없는 가구가 15.7%나 되는데, 30대 후반(3.4%)을 저점으로 50대 후반에는 9.6%, 60대 초반에는 14.5%, 60대 후반에는 31.3%, 70대는 63.3%로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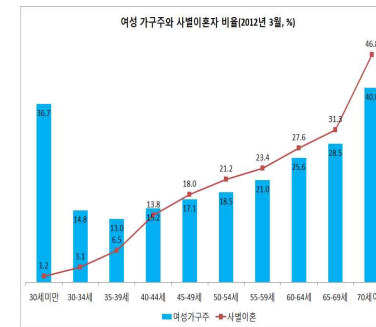
<표 II-13> 가구주 연령별 취업자 수 (2012년 3월, 단위: 명,%)

	취업자 수 평균 (명)	취업자 수 분포(%)					구직자 수(명)	비경제 활동 (명)
		0명	1명	2명	3명	4명이상		
30세미만	1.15	7.9	69.4	22.0	.7	.0	.10	.41
30-34세	1.31	4.5	60.9	33.7	.9	.1	.08	.49
35-39세	1.30	3.4	64.4	31.1	.7	.3	.08	.63
40-44세	1.39	4.3	54.7	39.3	1.4	.2	.07	.84
45-49세	1.49	4.5	47.3	43.3	4.2	.7	.09	1.35
50-54세	1.70	5.0	38.9	40.7	12.3	3.0	.13	1.29
55-59세	1.66	9.6	36.4	35.6	15.5	2.9	.15	.98
60-64세	1.44	14.5	40.5	33.3	9.8	1.9	.09	.81
65-69세	1.09	31.3	36.3	25.7	5.6	1.0	.05	.92
70세이상	.54	63.3	21.4	13.5	1.2	.6	.02	1.13
전체	1.31	15.7	44.9	32.8	5.4	1.2	.08	.96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3) 가구주 인적 구성(성, 혼인, 학력)

- 남성 가구주가 77.9%고 여성 가구주가 22.1%다. 여성 가구주는 30대 후반(13.0%)부터 70대(40.0%)까지 계속 증가한다.
-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가 69.7%로 가장 많고, 사별 또는 이혼으로 혼자된 가구주가 21.0%, 미혼자가 9.3%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는 30대 후반(77.5%)부터 70대 (52.7%)까지 계속 줄고, 사별 또는 이혼한 가구주는 60대 초반에는 27.6%, 60대 후반에는 31.3%, 70대에는 46.8%로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 가구주 학력은 고졸(34.2%)이 가장 많고, 중졸이하(29.1%), 대졸이상(27.2%), 전문 대졸(8.9%) 순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중졸이하가 많고, 젊을수록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이 많다. 20~30대는 중졸이하가 2% 안팎이지만 70대는 74.4%에 이른다. 대졸 이상은 30대 초반 49.3%에서 70대에는 9.2%로 줄어든다.



<표 II-14> 가구주 연령별 인적 구성 (2012년 3월, 단위: %)

	가구수	성		혼인상태			학력				
		남자	여자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중졸 이하	고졸	전문 대졸	대졸 이상	재학 휴학
30세미만	667	63.3	36.7	67.0	31.8	1.2	1.8	30.6	20.2	39.9	7.5
30-34세	1,403	85.2	14.8	28.0	68.9	3.1	2.1	27.7	19.1	49.3	1.9
35-39세	1,908	87.0	13.0	16.0	77.5	6.5	1.7	35.2	18.8	43.5	0.7
40-44세	2,314	84.8	15.2	9.8	76.4	13.8	4.8	43.5	13.0	38.3	0.4
45-49세	2,373	82.9	17.1	5.4	76.5	18.0	11.6	46.6	9.9	31.7	0.2
50-54세	2,332	81.5	18.5	3.0	75.8	21.2	25.7	43.5	6.2	24.5	0.2
55-59세	1,829	79.0	21.0	2.4	74.2	23.4	41.2	36.7	3.2	18.7	0.2
60-64세	1,358	74.4	25.6	1.3	71.1	27.6	56.2	28.0	2.7	13.2	-
65-69세	1,241	71.5	28.5	1.1	67.6	31.3	63.8	24.7	1.9	9.7	-
70세이상	2,457	60.0	40.0	0.5	52.7	46.8	74.4	15.1	1.3	9.2	-
전체	17,882	77.9	22.1	9.3	69.7	21.0	29.1	34.2	8.9	27.2	0.6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4) 주거형태와 주택유형

- 주거형태는 자가(56.8%), 전세(21.5%), 월세(16.8%), 기타(4.9%) 순이다. 전세는 30대 초반(40.8%)을 정점으로 60대 후반(11.0%)까지 줄고, 자가는 60대 초반(72.9%)까지 나이가 들수록 늘어난다. 기타(무상 주택, 무상 사택 등)는 20대(7.8%)와 70대 (10.5%)에서 높다.
- 주택유형은 아파트(47.3%), 단독주택(38.1%),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12.9%) 순이다. 아파트는 30대 후반(63.5%),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20대(23.8%)를 정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줄고, 단독주택은 30대 후반(21.0%)을 정점으로 늘어난다. 30~40대는 아파트 거주자가 절반이 넘고, 60~70대는 단독주택 거주자가 절반이 넘는다.

<표 II-15> 가구주 연령별 주거형태와 주택유형 (2012년 3월, 단위: %)

	주거형태				주택유형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주택사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기타
30세미만	16.5	36.6	39.1	7.8	37.0	36.4	23.8	2.8
30-34세	31.7	40.8	21.2	6.3	22.1	58.2	17.6	2.1
35-39세	45.6	32.2	18.4	3.8	21.0	63.5	14.2	1.4
40-44세	50.8	27.0	17.7	4.5	24.2	60.4	13.9	1.5
45-49세	55.2	22.7	19.1	3.0	31.3	53.9	13.4	1.3
50-54세	61.4	18.1	17.3	3.2	36.4	49.4	13.0	1.3
55-59세	69.7	13.6	14.1	2.6	40.7	44.7	12.2	2.4
60-64세	72.9	11.3	12.6	3.2	50.6	36.9	10.3	2.1
65-69세	72.4	11.0	11.1	5.6	55.6	31.3	11.3	1.8
70세이상	67.2	11.9	10.3	10.5	64.4	26.8	7.6	1.2
전체	56.8	21.5	16.8	4.9	38.1	47.3	12.9	1.6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5) 종사상 지위

-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는 임금노동자(57.1%), 비임금근로자(24.2%), 비취업자(18.8%) 순이다. 임금노동자는 20대(89.5%)부터 70대(11.0%)까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고, 비임금근로자는 20대(4.2%)부터 60대 초반(33.4%)까지 늘어나고, 비취업자는 30대 초반(3.7%)을 저점으로 70대(69.1%)까지 늘어난다.
- 상용직은 30대 초반(74.7%)을 정점으로 줄어든다, 고용주는 40대 후반(9.4%)을 정점으로 줄어든다. 임시직과 일용직은 60대 초반(22.0%)까지 늘고, 자영업자도 60대 초반(29.1%)까지 늘어난다.

<표 II-16> 가구주 연령별 종사상 지위 (2012년 3월, 단위: %)

	종사상 지위 1			종사상 지위 2					
	임금노동자	비임금근로자	비취업자	상용	임시일용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특수고용
30세미만	89.5	4.2	6.3	70.8	17.2	1.3	2.8	-	1.5
30-34세	85.2	11.1	3.7	74.7	8.8	4.4	6.7	-	1.7
35-39세	80.2	16.0	3.8	67.1	11.0	5.8	10.2	-	2.2
40-44세	73.5	22.2	4.4	59.5	12.0	7.6	14.5	0.1	1.9
45-49세	66.6	27.9	5.5	48.2	16.1	9.4	18.5	0.0	2.4
50-54세	60.7	32.5	6.8	41.6	17.3	7.7	24.7	0.1	1.8
55-59세	54.9	32.5	12.6	34.4	19.0	7.2	25.4	-	1.5
60-64세	40.7	33.4	25.9	17.8	22.0	4.2	29.1	0.1	0.9
65-69세	29.0	29.2	41.8	10.1	18.2	1.7	27.4	0.1	0.6
70세이상	11.0	19.9	69.1	2.6	8.2	0.7	19.2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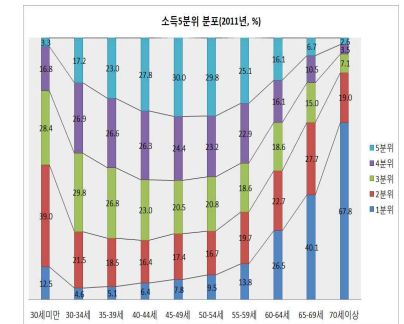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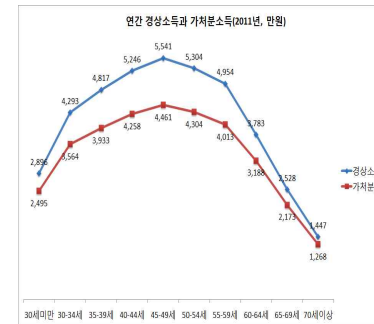
전체	57.1	24.2	18.8	41.1	14.4	5.5	18.6	0.0	1.5
----	------	------	------	------	------	-----	------	-----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2. 가계수지

1) 가구소득

- 2011년 한 해 가구당 경상소득은 4,233만원이고, 비소비지출 758만원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은 3,474만원이다. 경상소득(5,541만원)과 가처분소득(4,461만원) 모두 가구가 40대 후반일 때 가장 많다.
- 저소득층(소득1분위) 비중은 가구주가 50대 후반일 때 13.8%, 60대 초반일 때 26.5%, 60대 후반일 때 40.1%, 70대일 때 67.8%로 나이가 들수록 늘어난다. 고소득층(소득5분위)은 40대 후반(30.0%)과 50대 초반(29.8%)을 정점으로 줄어든다.



- 근로소득은 30대 후반(3,662만원), 사업소득은 40대 후반(1,906만원), 재산소득은 60대 초반(323만원)을 정점으로 줄고 있다. 이전소득은 60대 초반은 571만원(가구소득의 15.1%), 60대 후반은 671만원(26.5%), 70대 이상은 657만원(45.4%)으로 나이가 들수록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표 II-17> 가구주 연령별 소득 내역 (2011년,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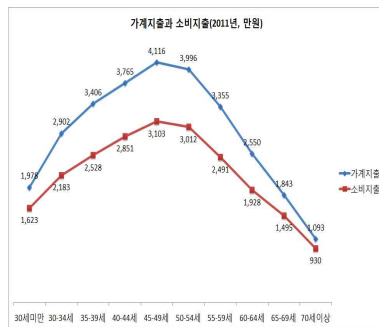
	금액(만원)						구성비(%)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30세미만	2,896	1,564	3,933	4,258	4,461	4,304	12.5	18.0	28.4	16.9	5.3	17.2
30-34세	4,293	3,564	4,817	5,246	5,541	5,304	11.5	21.5	26.9	20.0	17.5	17.5
35-39세	4,817	3,933	5,246	5,541	5,304	4,954	10.5	20.5	26.5	23.0	17.5	17.9
40-44세	5,246	4,258	5,304	5,541	5,304	4,013	10.4	20.4	26.3	23.0	18.0	18.0
45-49세	5,541	4,461	4,304	5,304	5,304	3,188	10.3	20.3	26.2	23.0	18.1	18.1
50-54세	5,304	4,304	3,188	5,304	5,304	2,173	10.2	20.2	26.1	23.0	18.2	18.2
55-59세	4,954	4,013	2,173	5,304	5,304	1,268	10.1	20.1	26.0	23.0	18.3	18.3
60-64세	3,783	3,188	1,268	5,304	5,304	1,268	10.0	20.0	25.9	23.0	18.4	18.4
65-69세	3,038	2,173	1,268	5,304	5,304	1,268	10.0	20.0	25.8	23.0	18.5	18.5
70세이상	1,447	1,268	1,268	5,304	5,304	1,268	10.0	20.0	25.7	23.0	18.5	18.5

					소득	소득					소득	소득
30세미만	2,896	2,495	250	22	40	89	100.0	86.2	8.6	0.8	1.4	3.1
30-34세	4,293	3,638	541	33	39	41	100.0	84.7	12.6	0.8	0.9	1.0
35-39세	4,817	3,662	996	64	56	38	100.0	76.0	20.7	1.3	1.2	0.8
40-44세	5,246	3,597	1,416	134	54	46	100.0	68.6	27.0	2.6	1.0	0.9
45-49세	5,541	3,359	1,906	176	60	39	100.0	60.6	34.4	3.2	1.1	0.7
50-54세	5,304	3,262	1,740	182	78	42	100.0	61.5	32.8	3.4	1.5	0.8
55-59세	4,954	2,997	1,442	291	162	63	100.0	60.5	29.1	5.9	3.3	1.3
60-64세	3,783	1,747	1,142	323	473	98	100.0	46.2	30.2	8.5	12.5	2.6
65-69세	2,528	897	652	309	522	149	100.0	35.5	25.8	12.2	20.6	5.9
70세이상	1,447	257	284	249	401	256	100.0	17.8	19.6	17.2	27.7	17.7
전체	4,233	2,642	1,139	185	179	87	100.0	62.4	26.9	4.4	4.2	2.1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2) 가계지출

- 2011년 가구당 가계지출은 3,038만원이고, 비소비지출 758만원을 제외한 소비지출은 2,311만원이다. 가구주가 40대 후반일 때 가계지출(4,116만원)과 소비지출(3,103만원), 비소비지출(1,079만원) 모두 가장 많다.
- 소비지출은 식료품비(21.2%), 경조비및기타지출(15.2%), 교육비(11.5%), 주거비(9.6%), 교통비(8.8%), 통신비(5.3%), 의료비(4.4%) 순이고, 비소비지출은 원리금상환(14.0%), 사회보험료(5.6%), 세금과징금(4.5%) 순이다.



<표 II-18> 가구주 연령별 가계지출 내역 (2011년, 단위: 만원)

	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지출	비소비지출	세금과징금	공적연금보험료	지급이자및상환액
30세미만	1,978	1,623	516	281	57	67	178	156	367	401	75	183	316
30-34세	2,902	2,183	663	294	136	114	274	179	522	728	159	280	523
35-39세	3,406	2,528	729	312	387	121	305	180	494	884	199	305	718
40-44세	3,765	2,851	768	328	603	116	331	199	507	989	272	313	784
45-49세	4,116	3,103	774	349	764	129	351	219	517	1,079	281	315	861
50-54세	3,996	3,012	754	354	580	152	352	212	608	999	244	317	737
55-59세	3,355	2,491	687	309	264	162	324	175	570	941	252	284	780
60-64세	2,550	1,928	598	268	71	140	257	126	467	595	142	157	384
65-69세	1,843	1,495	481	229	30	156	159	88	353	355	85	86	310
70세이상	1,093	930	323	169	18	135	63	45	177	179	49	36	153
전체	3,038	2,311	643	293	348	133	269	162	463	758	190	237	592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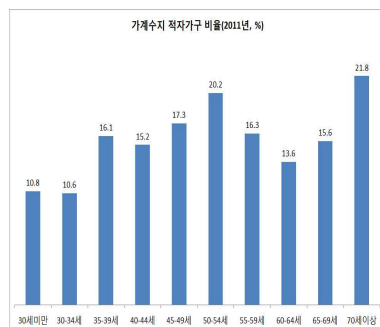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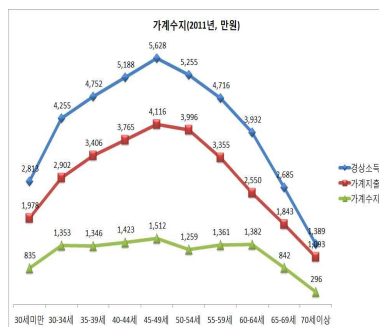
<표 II-19> 가구주 연령별 가계지출 내역 구성비 (2011년, 단위: %)

	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지출	비소비지출	세금과징금	공적연금보험료	지급이자및상환액
30세미만	100.0	82.0	26.1	14.2	2.9	3.4	9.0	7.9	18.5	13.8	2.6	6.3	10.9
30-34세	100.0	75.2	22.9	10.1	4.7	3.9	9.5	6.2	18.0	17.0	3.7	6.5	12.2
35-39세	100.0	74.2	21.4	9.2	11.4	3.5	9.0	5.3	14.5	18.4	4.1	6.3	14.9
40-44세	100.0	75.7	20.4	8.7	16.0	3.1	8.8	5.3	13.5	18.9	5.2	6.0	14.9
45-49세	100.0	75.4	18.8	8.5	18.6	3.1	8.5	5.3	12.6	19.5	5.1	5.7	15.5
50-54세	100.0	75.4	18.9	8.9	14.5	3.8	8.8	5.3	15.2	18.8	4.6	6.0	13.9
55-59세	100.0	74.3	20.5	9.2	7.9	4.8	9.6	5.2	17.0	19.0	5.1	5.7	15.7
60-64세	100.0	75.6	23.4	10.5	2.8	5.5	10.1	5.0	18.3	15.7	3.8	4.2	10.2
65-69세	100.0	81.1	26.1	12.4	1.6	8.5	8.6	4.8	19.1	14.0	3.4	3.4	12.3
70세이상	100.0	85.1	29.6	15.5	1.6	12.3	5.8	4.1	16.2	12.4	3.4	2.5	10.6
전체	100.0	76.1	21.2	9.6	11.5	4.4	8.8	5.3	15.2	17.9	4.5	5.6	14.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3) 가계수지

- 2011년 한 해 가구당 가계수지 흑자(경상소득-가계지출)는 평균 1,175만원이다. 가계수지가 적자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16.6%고, 가구당 평균 695만원 적자다. 가계수지가 흑자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83.4%로, 가구당 평균 1,548만원 흑자다.
- 가계수지 흑자폭은 40대 후반(1,512만원)에 가장 크고, 가계수지 적자가구는 50대 초반(20.2%)과 70대(21.8%)에 가장 많다.



<표 II-20> 가구주 연령별 가계수지와 적자가구 비율 (2011년, 단위: 만원, %)

	경상 소득	가계 지출	가계수지		적자가구			흑자가구		
			평균 값	증위 값	비율 (%)	평균 값	증위 값	비율 (%)	평균값	증위값
30세미만	2,813	1,978	835	628	10.8	-526	-215	89.2	1,001	722
30-34세	4,255	2,902	1,353	1,006	10.6	-833	-378	89.4	1,613	1,195
35-39세	4,752	3,406	1,346	820	16.1	-679	-431	83.9	1,733	1,097
40-44세	5,188	3,765	1,423	858	15.2	-617	-318	84.8	1,789	1,127
45-49세	5,628	4,116	1,512	813	17.3	-844	-434	82.7	2,005	1,129
50-54세	5,255	3,996	1,259	743	20.2	-1002	-556	79.8	1,831	1,087
55-59세	4,716	3,355	1,361	769	16.3	-955	-614	83.7	1,813	1,126
60-64세	3,932	2,550	1,382	636	13.6	-556	-221	86.4	1,688	826
65-69세	2,685	1,843	842	310	15.6	-435	-170	84.4	1,077	483
70세이상	1,389	1,093	296	89	21.8	-351	-136	78.2	476	163
전제	4,213	3,038	1,175	591	16.6	-695	-339	83.4	1,548	877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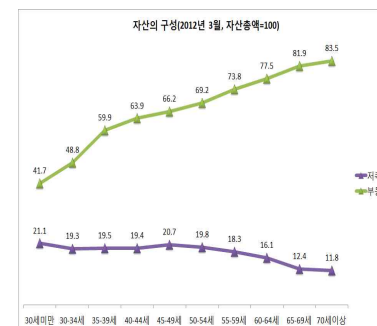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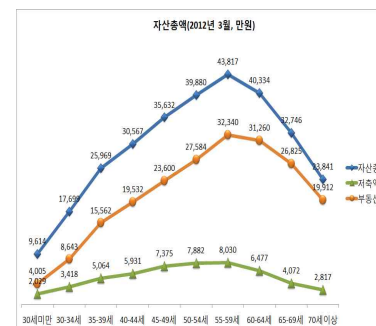
3. 순자산

1) 자산총액

○ 2012년 3월 현재 가구당 자산총액은 3억 1,495만원이다. 자산총액에서 금융자산은 7,855만원(24.9%)이고, 실물자산은 2억 3,639만원(75.1%)이다. 금융자산에서 저축액은 5,641만원(17.9%)이고, 실물자산은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산총액과 저축액, 부동산은 50대 후반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 나이가 들수록 금융자산(저축액) 비중은 줄고 실물자산(부동산) 비중은 증가한다. 금융자산은 20대 51.7%에서 70대 14.7%로 줄고, 실물자산은 48.3%에서 85.3%로 증가한다. 금융자산 중 저축액은 20대 21.1%에서 70대 11.8%로 줄고, 실물자산 중

부동산은 41.7%에서 83.5%로 증가한다.



<표 II-21> 가구주 연령별 자산, 부채, 순자산액 (2012년 3월, 단위: 만원)

	자산 총액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 총액	금융 부채	임대 보증금	순 자산액
		소계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소계	부동산	거주 주택				
30세미만	9,614	4,970	2,029	2,941	4,644	4,005	2,822	1,441	1,153	288	8,173
30-34세	17,699	7,840	3,418	4,421	9,859	8,643	5,747	3,319	2,602	717	14,380
35-39세	25,969	8,774	5,064	3,710	17,195	15,562	9,514	5,035	3,942	1,093	20,933
40-44세	30,567	9,026	5,931	3,095	21,541	19,532	10,991	6,084	4,232	1,853	24,483
45-49세	35,632	9,921	7,375	2,546	25,712	23,600	12,388	6,942	5,100	1,842	28,690
50-54세	39,880	9,857	7,882	1,975	30,024	27,584	13,743	7,356	5,077	2,279	32,524
55-59세	43,817	9,383	8,030	1,353	34,434	32,340	16,726	7,730	5,084	2,646	36,087
60-64세	40,334	7,527	6,477	1,049	32,807	31,260	16,092	5,442	3,079	2,363	34,892
65-69세	32,746	4,866	4,072	794	27,880	26,825	15,680	4,205	2,227	1,978	28,541
70세이상	23,841	3,495	2,817	677	20,346	19,912	11,418	2,015	991	1,023	21,826
전제	31,495	7,855	5,641	2,215	23,639	22,023	12,019	5,291	3,599	1,693	26,203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표 II-22> 가구주 연령별 자산, 부채, 순자산액 구성비 (2012년 3월, 단위: %)

	자산 총액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 총액	금융 부채	임대 보증금	순자 산액
		소계	저축 액	전월 세보 증금	소계	부동산	거주 주택				
30세미만	100.0	51.7	21.1	30.6	48.3	41.7	29.4	15.0	12.0	3.0	85.0
30-34세	100.0	44.3	19.3	25.0	55.7	48.8	32.5	18.8	14.7	4.1	81.2
35-39세	100.0	33.8	19.5	14.3	66.2	59.9	36.6	19.4	15.2	4.2	80.6
40-44세	100.0	29.5	19.4	10.1	70.5	63.9	36.0	19.9	13.8	6.1	80.1
45-49세	100.0	27.8	20.7	7.1	72.2	66.2	34.8	19.5	14.3	5.2	80.5
50-54세	100.0	24.7	19.8	5.0	75.3	69.2	34.5	18.4	12.7	5.7	81.6
55-59세	100.0	21.4	18.3	3.1	78.6	73.8	38.2	17.6	11.6	6.0	82.4
60-64세	100.0	18.7	16.1	2.6	81.3	77.5	39.9	13.5	7.6	5.9	86.5
65-69세	100.0	14.9	12.4	2.4	85.1	81.9	47.9	12.8	6.8	6.0	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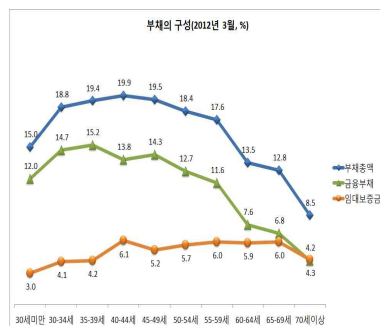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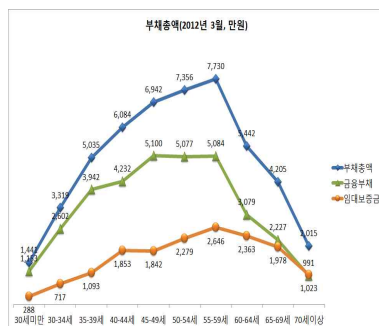
70세이상	100.0	14.7	11.8	2.8	85.3	83.5	47.9	8.5	4.2	4.3	91.5
전체	100.0	24.9	17.9	7.0	75.1	69.9	38.2	16.8	11.4	5.4	83.2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2) 부채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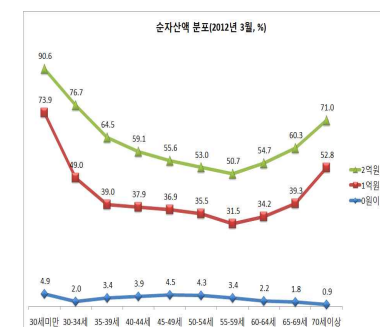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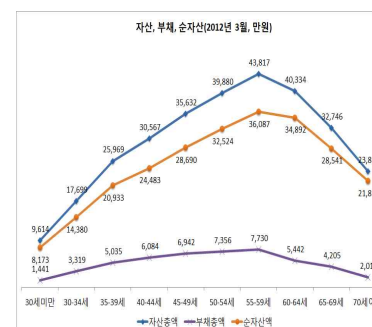
- 2012년 3월 현재 가구당 부채총액은 5,291만원(자산총액의 16.8%)이다. 부채총액에서 금융부채는 3,599만원(11.4%)이고, 임대보증금은 1,693만원(5.4%)이다. 부채총액과 임대보증금은 50대 후반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금융부채는 4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5,100만원으로 가장 많다.

- 자산총액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대 초반(19.9%)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금융부채 비중은 30대 후반(15.2%)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3) 순자산액

- 2012년 3월 현재 가구당 순자산액(자산총액-부채총액)은 2억 6,203만원(자산총액의 83.2%)이다. 자산총액, 부채총액과 함께 순자산액도 50대 후반(3억 6,087만원)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순자산액이 (-)인 가구가 전체의 3.1%다. 순자산액 1억 원 미만 가구는 37.9%고, 2억 원 미만 가구는 58.4%다. 순자산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는 50대 후반(50.7%)을 저점으로 20대는 90.6%, 70대는 71.0%로 늘어난다. 순자산액이 5억 원 이상인 가구는 50대 후반(21.0%)을 정점으로 20대는 1.5%, 70대는 10.4%로 줄어든다.



<표 II-23> 순자산액 분포(2012년 3월,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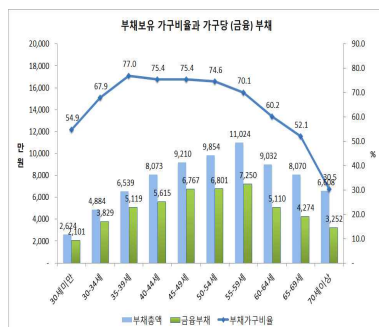
	0원이하	0~1억원 미만	1~2억원 미만	2~3억원 미만	3~4억원 미만	4~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전체
30세미만	4.9	69.0	16.6	5.1	1.8	1.0	1.5	100.0
30-34세	2.0	47.0	27.7	13.2	5.3	2.3	2.5	100.0
35-39세	3.4	35.6	25.6	15.4	7.2	4.3	8.5	100.0
40-44세	3.9	34.1	21.1	15.3	9.8	4.9	10.9	100.0
45-49세	4.5	32.4	18.7	13.3	9.4	6.9	14.9	100.0
50-54세	4.3	31.2	17.5	14.0	8.9	6.4	17.7	100.0
55-59세	3.4	28.1	19.1	14.5	8.4	5.4	21.0	100.0
60-64세	2.2	32.0	20.5	11.7	7.8	6.8	19.0	100.0
65-69세	1.8	37.5	21.1	10.5	8.3	5.1	15.8	100.0
70세이상	0.9	51.9	18.1	9.0	5.9	3.8	10.4	100.0
전체	3.1	37.9	20.5	12.8	7.8	5.0	13.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4. 가계의 재무건전성

1) 부채 보유가구 비율과 금액

- 전체 가구 중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64.6%다.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 사이 부채 보유가구는 75~77%로, 네 가구 중 세 가구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가구당 부채총액은 8,187만원이고, 금융부채는 5,567만원이다. 50대 후반은 가구당 부채총액이 1억 1,024만원이고, 금융부채는 7,250만원으로 가장 많다.



2) 부채 보유가구의 원리금 상환가능성과 생계부담

- 부채 보유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가구는 7.0%다. '원리금 상환 불가능'은 특히 50대 이상 고령층에서 많다.
- 부채 보유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가구는 68.1%(약간 부담 42.2%, 매우 부담 25.9%)다. 이들 가구의 80%가 저축, 투자, 지출을 축소하고 있다.
- 부채 보유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가구는 31.9%다. 하지만 이들 가구도 원리금 상환이 가계소득의 20%를 넘어서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표 II-24> 부채 보유가구 원리금 상환가능성과 생계부담(2012년 3월, 단위:%)

	가계부채 상환가능성			생계에 주는 부담 정도			부담없다 응답		부담스럽다 응답	
	대출 기한내 상환	대출기간 경과와 상환가능	상환 불가능	부담이 없다	약간 부담스럽다	매우 부담스럽다	부담되는 가계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		저축, 투자, 지출 축소 여부	
							평균값	중위값	줄이고 있음	줄이고 있지 않음
30세미만	68.9	28.0	3.1	31.2	45.6	23.2	20.1	20.0	74.6	25.4
30-34세	72.2	25.1	2.7	36.4	43.1	20.5	20.0	20.0	82.0	18.0
35-39세	70.3	25.3	4.4	32.1	43.9	24.0	19.3	20.0	80.6	19.4
40-44세	65.4	28.7	5.9	30.8	43.9	25.3	20.0	20.0	77.8	22.2
45-49세	63.4	30.7	5.8	29.9	43.2	26.9	19.1	20.0	80.1	19.9
50-54세	62.1	29.2	8.7	31.3	41.1	27.6	19.1	20.0	79.2	20.8
55-59세	65.7	26.6	7.7	31.6	41.6	26.8	18.8	20.0	83.1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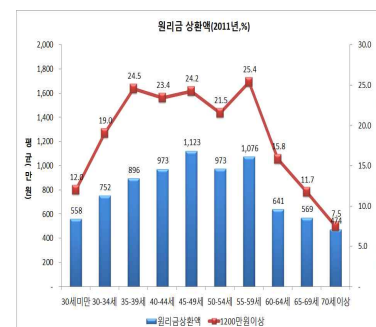
60-64세	64.0	24.6	11.5	31.3	39.5	29.3	18.0	20.0	77.2	22.8
65-69세	67.5	22.6	9.9	31.7	41.4	26.9	18.9	20.0	79.1	20.9
70세이상	61.5	20.4	18.1	37.0	32.5	30.5	17.5	20.0	77.7	22.3
전체	65.9	27.1	7.0	31.9	42.2	25.9	19.2	20.0	79.6	20.4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3) 부채보유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

- 부채보유 가구의 2011년 한 해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 886만원이다.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50만원 미만인 가구는 60.1%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9.3%며, 100만원 이상인 가구는 20.7%다.

- 40~50대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973~1,123만원으로, 매달 80~90만원을 원리금상환에 붓고 있다. 40~50대는 매달 100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는 가구가 22~25%에 이른다.



<표 II-25> 부채 보유가구의 원리금상환액 평균과 분포(2011년,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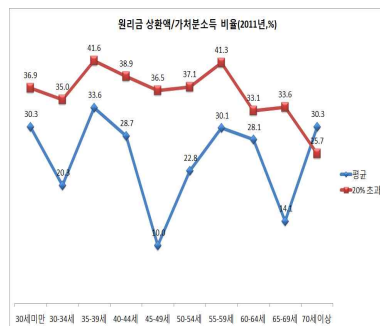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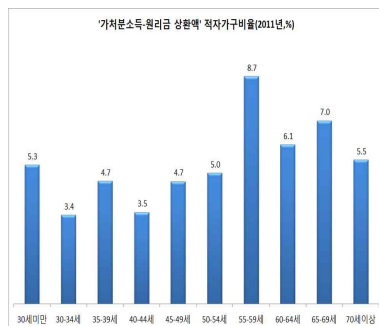
	원리금 상환액 평균(만원)	원리금상환액 분포(%)				
		600만원 미만	600~1200만원 미만	1200~1800만원 미만	1800~2400만원 미만	2400만원 이상
30세미만	558	72.6	15.4	4.2	4.5	3.4
30-34세	752	60.0	20.9	8.5	4.3	6.3
35-39세	896	52.6	22.9	12.4	4.7	7.4
40-44세	973	53.5	23.1	11.7	3.8	7.9
45-49세	1,123	54.9	20.9	10.0	5.1	9.0
50-54세	973	58.2	20.2	9.5	3.0	9.1
55-59세	1,076	56.0	18.6	9.6	4.7	11.1
60-64세	641	68.7	15.4	8.1	1.5	6.2
65-69세	569	77.2	11.1	6.1	2.1	3.5

70세이상	474	83.3	9.2	3.5	1.1	2.9
전체	886	60.1	19.3	9.4	3.7	7.6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4) 부채보유 가구의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 부채보유 가구의 5.2%는 가처분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많다. 특히 고령층인 50대 후반(8.7%)과 60대 후반(7.0%)에 많다.
-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평균 24.5%다. 특히 20대(30.3%)와 30대 후반(33.6%), 50대 후반(30.1%), 70대(30.3%)는 30%가 넘는다.
-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가구가 37%다. 특히 30대 후반(41.6%)과 50대 후반(41.3%)에 많다. 가처분소득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상환에 쏟아 붓는 가구도 13.5%나 된다.



<표 II-26> 부채 보유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2011년, 단위: 만원, %)

	가처분소득-원리금상환액 (만원)				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 비율(%)							
	가처 분소 득 (A)	원리 금상 환액 (B)	A-B	적자 가구 비율	평균	10% 이하	10- 20% 이하	20- 30% 이하	30- 40% 이하	40- 50% 이하	50- 100% 이하	100% 초과
30세미만	2,694	558	2,136	5.3	30.3	42.2	20.8	11.1	7.8	3.3	9.4	5.3
30-34세	3,715	752	2,963	3.4	20.3	44.6	20.4	10.4	7.6	4.3	9.6	3.2
35-39세	4,047	896	3,150	4.7	33.6	39.1	19.3	14.5	7.5	5.7	9.8	4.2
40-44세	4,393	973	3,420	3.5	28.7	41.4	19.7	12.4	8.3	6.0	9.1	3.2
45-49세	4,562	1,123	3,440	4.7	10.0	44.5	19.0	11.6	6.7	5.0	9.6	3.7
50-54세	4,539	973	3,566	5.0	22.8	44.0	18.9	12.7	7.6	4.8	7.7	4.3
55-59세	4,501	1,076	3,425	8.7	30.1	41.9	16.8	12.2	8.0	4.6	8.8	7.7
60-64세	3,466	641	2,826	6.1	28.1	47.7	19.2	10.9	5.2	3.3	8.6	5.2

65-69세	2,487	569	1,917	7.0	14.1	51.1	15.3	8.6	5.9	5.6	8.2	5.3
70세이상	1,903	474	1,429	5.5	30.3	62.8	11.5	6.2	3.4	1.6	9.9	4.6
전체	3,959	886	3,073	5.2	24.5	44.7	18.3	11.6	7.0	4.7	9.0	4.5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5. 은퇴 후 생활

- 2012년 3월 가구주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가구는 271만4천 가구(15.2%)고, 은퇴할 때 나이는 평균 61세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여유가 있다’는 가구는 7.0%밖에 안 되고, ‘부족하다’가 61.1%, ‘보통이다’가 31.1%다.
-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비를 가족, 친지 등의 용돈으로 마련한다는 응답이 32.0%로 가장 많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 23.5%, 개인저축액이 11.7% 순이다. 60대 초반(42.1%)과 60대 후반(36.0%)은 공적연금 비중이 높지만, 70대는 공적연금(17.4%)이 줄고 가족, 친지 등의 용돈(37.4%)이 늘어난다.

<표 II-27> 은퇴 가구주 은퇴연령과 생활비 충당 정도(2012년 3월, 단위:천명,%,세)

	은퇴 가구주			생활비 충당 정도(%)					생활비 마련 방법(%)			
	수 (천명)	비율 (%)	은퇴 나이 (중위 값)	충분 히 여유 있다	여유 있다	보통 이다	부족 하다	매우 부족 하다	가족 친지 등의 용돈	공적 연금	개인 저축 액	기타
30세미만	0											
30-34세	1	0.1	30				100					100
35-39세	1	0.1	21					100				100
40-44세	10	0.4	39			45.5		54.5				100
45-49세	22	1.0	43			13.6	36.4	50.0	22.7		9.1	68.2
50-54세	57	2.4	50			28.6	28.6	42.9	12.5	8.9	14.3	64.3
55-59세	146	7.9	55	2.1	10.3	28.1	39.0	20.5	23.8	23.1	14.3	38.8
60-64세	309	23.2	60	3.6	8.4	35.1	35.7	17.2	20.7	42.1	19.7	17.5
65-69세	494	40.7	60	0.6	5.5	32.0	36.2	25.7	26.7	36.0	12.3	24.9
70세이상	1,674	67.2	65	2.3	3.8	32.0	39.8	22.0	37.4	17.4	9.9	35.4
전체	2,714	15.2	61	2.1	4.9	31.9	38.2	22.9	32.0	23.5	11.7	32.8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주들은 은퇴연령을 65세로 생각하고, 노후 최저생활비를 150만원, 노후 적정생활비를 200만원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가구주 나이가 들수록 은퇴연령이 늦춰지고, 노후 최저생활비와 적정생활비도 낮아진다. 예컨대 60대 초반에는 은퇴연령을 70세로 생각하고, 60대 후반에는 75세로 생각하며, 노후 최저생활비는 100만원, 노후 적정생활비는 15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들 가운데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9.0%밖에 안 되고, ‘보통이다’가 36.6%, ‘잘 되어 있지 않다’가 54.4%다.

<표 II-28>비은퇴 가구주 은퇴연령과 걱정생활비 의견(2012년 3월, 단위:세,만원,%)

	비은퇴 가구주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 준비 상황(%)						
	은퇴연령의견 (세)	노후 최소 생활비 (만원)	노후 적정 생활비 (만원)	아주 잘 되어 있다	잘 되어 있다	보통이 다	잘 되어 있지 않다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잘 됨	잘 안 됨
30세미만	60	150	200	0.2	5.4	36.9	30.8	26.7	5.6	57.5
30-34세	60	150	250	1.0	6.6	41.3	31.4	19.8	7.6	51.1
35-39세	62	150	250	1.2	6.4	41.7	32.3	18.5	7.6	50.7
40-44세	62	150	250	1.5	7.1	36.6	34.0	20.8	8.6	54.8
45-49세	65	150	230	1.7	6.6	35.8	34.8	21.1	8.3	55.9
50-54세	65	150	200	2.3	7.6	34.6	34.8	20.7	9.9	55.5
55-59세	65	150	200	2.7	10.2	36.4	31.4	19.2	12.9	50.7
60-64세	70	100	150	2.2	7.0	32.2	36.3	22.3	9.3	58.6
65-69세	75	100	150	0.7	9.6	33.8	36.6	19.4	10.2	56.0
70세이상	80	90	100	2.4	6.4	32.2	37.8	21.3	8.8	59.0
전체	65	150	200	1.7	7.3	36.6	33.8	20.6	9.0	54.4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제5장 맺는 말 - 요약과 함의

1. 시계열 추이

-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로 정치권력이 교체된 지난 10여 년 동안,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국민의 삶은 악화되었다.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 했고,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은 고착화되었다. 경제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악화되었고, 임금불평등은 심화되고 가구소득 불평등은 확대되었다. 가계수지 적자가구와 빈곤가구는 누적되고 있다.
-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를 찍었던 50~60대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은 것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국민의 삶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된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민주정부 10년은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글로벌 스탠더드인 양 맹위를 떨치던 시기였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제1의 정책과제로 추진했고, 고용사정은 더 이상 악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 앞으로 야권이 50~60대의 지지를 회복하려면 ‘야권이 집권해야 나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꿈과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2. 생애주기별 노동생활

- 생애주기별로 노동생활 추이를 살펴보면, 20대는 노동시장 진입기, 30~40대 남자는 노동시장 정착기, 30대 여자는 자녀출산과 양육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쉽지 않아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시기, 40대 여자는 노동시장 재진입기, 50~60대는 남녀 모두 노동시장 퇴출기로 정의할 수 있다.
- 20대는 남녀 모두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다. 청년층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대량으로 파괴되면서 노동시장 진입에 걸리는 기간은 늘어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용률이 높아진다. 노동시장에서 성 차별도 작은 시기다.
- 30~40대는 남녀 모두 나이가 들수록 임금노동자와 공식고용 비율이 줄고, 비임금근로자와 비공식고용 비율이 늘어나는, 고용의 질이 나빠지는 시기다. 30~40대에 남성은 임금이 높아지지만, 여성은 임금이 낮아지고 저임금계층과 최저임금 미달자가 늘어나는 시기다. 30~40대에 늘어나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자유로운 선

택의 결과가 아니라, 임금노동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고용형태다.

- 50~60대는 노동생활을 마치고 은퇴생활로 전환해 가는 시기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은퇴 후 노후생활이 준비되지 않아, 노동생활과 은퇴생활 모두 불안정한 시기다. 나이가 들수록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높아진다. 이는 다니던 직장에서는 정년 등을 빌미로 밀려나고, 노후생활은 준비되지 않아 다시 구직활동에 나서는 현실을 반영한다. 남녀 모두 나이가 들수록 임금수준은 낮아지고, 저임금계층과 최저임금 미달 자는 늘어난다.

3. 가계부채

- 전체 가구의 64.6%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가구가 7.0%며, 특히 50대 이상 고령층에 많다. '원리금 상환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가구는 68.1%며, 이들 가구의 80%가 저축, 투자, 지출을 줄이고 있다.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가구도 '원리금 상환액이 가계소득의 20%를 넘어서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 부채보유 가구의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74만원이고, 매달 100만원 이상인 가구가 20.7%다. 40~50대는 월평균 80~90만원인데, 100만원 이상인 가구가 22~25%에 이르고 있다. 가처분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많은 가구가 5.2%인데, 고령층인 50대 후반(8.7%)과 60대 후반(7.0%)에 많다.
-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평균 24.5%다. 원리금 상환이 가계에 부담이 되는 임계치인 20%를 초과하는 가구가 37%고, 가처분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 붓는 가구가 13.5%다. 이밖에 가계수지(경상소득-가계지출)가 적자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16.6%며, 특히 50대 초반(20.2%)과 70대(21.8%)에 많다.

4. 노후생활

-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가구들은 '가족, 친지 등의 용돈'(32.0%),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23.5%), 개인저축(11.7%) 순으로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다. 60대 초반(42.1%)과 60대 후반(36.0%)은 공적연금 비중이 높고, 70대는 가족, 친지 등의

용돈 비중(37.4%)이 높다. '생활비에 여유'가 있는 가구는 7.0%밖에 안 되고, '보통이다'가 31.1%, '부족하다'가 61.1%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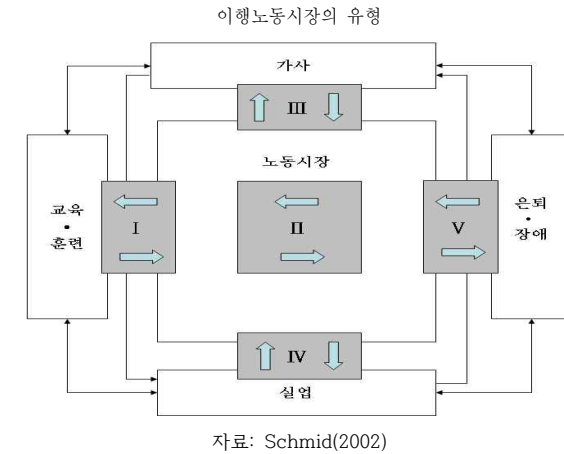
-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주들은 은퇴연령을 65세로 생각하고, 노후 최저생활비를 150만원, 노후 적정생활비를 200만원으로 생각한다.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가구는 9.0%밖에 안 되고, '보통이다'가 36.6%, '잘 되어 있지 않다'가 54.4%다.
- 40세 이상 중고령자 가운데 노후생활을 준비하거나 준비한 사람은 60%고, 나머지 40%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 노후생활 준비 방법은 공적연금 가입이 가장 많다.

5. 세대구성

- 가구당 가구원수는 평균 2.9명이다. 40대 후반(3.5명)을 정점으로 60대 초반은 2.4명, 60대 후반은 2.1명, 70세 이상은 1.7명으로 줄어든다. 단신가구와 2인 가구는 40대를 정점으로 늘어나고, 4인가구와 5인 이상 가구는 40대를 정점으로 줄어든다.
- 50~60대 남성은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이 8% 안팎이지만, 여성은 50대 초반(15.4%)부터 60대 후반(36.8%) 사이 사별 또는 이혼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사별 또는 이혼으로 단신 가구가 늘면서 여성 가구주 비율은 30대 초반 12.1%, 40대 초반 17.9%, 50대 초반 26.2%, 60대 초반 28.1%로 나이가 들수록 늘고 있다.
- 가구당 취업자는 평균 1.3명이다. 50대 초반(1.7명)을 정점으로 60대 후반 1.1명, 70세 이상 0.5명으로 취업자 수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취업자가 1명인 가구가 44.9%고, 2명인 가구가 32.8%다. 취업자가 1명도 없는 가구는 15.7%인데, 50대 후반 9.6%, 60대 초반 14.5%, 60대 후반 31.3%, 70대 63.3%로 늘고 있다.
- 고학력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세대 간에 학력별 차이가 뚜렷하다. 20~30대는 대졸자가 40%로 남녀 모두 학력수준이 높지만, 50~60대는 학력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남녀 간에 차이가 크다.

6. 합의

- 대선 직후 “2030은 진보적 개혁적이고 5060은 보수적”이라는 담론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분석으로는 이러한 세대 담론의 객관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
- 과연 2030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20대와 30대는 고학력자가 많다는 점에서는 동질적이지만,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취업난을 겪는 20대 남녀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안정적 정착기에 접어든 30대 남자, 자녀출산과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30대 여자는 노동시장 내 처지가 뚜렷하게 다르다.
- 40대 후반을 정점으로 인생 하강 곡선과 노동시장 퇴출기에 접어든 5060이 겪는 고용 및 생활상의 어려움과 박탈감,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에서 패인도 ‘야권이 2030에 집중한 나머지 5060에게 그들의 고용사정과 생활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전망과 믿음을 주지 못한’ 데서 찾아야 한다.
-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ur Markets: TLM) 이론은 생애과정에 걸쳐 고용과 기타 사회적 활동 간에 이행의 주요 유형을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 이행은 교육·훈련과 노동시장/고용 간의 이행(I), 두 번째 이행은 노동시장 내에서 다양한 고용관계 간의 이행 또는 피고용과 자영업 간의 이행(II), 세 번째 이행은 고용과 가사활동 간의 이행(III), 네 번째 이행은 고용과 실업 간의 이행(IV), 다섯 번째 이행은 고용과 은퇴 간의 이행(V)을 의미한다.
- 이러한 이행들은 일자리 경력의 하향곡선을 통해 실업의 반복이나 장기실업, 빈곤, 비경제활동상태 등의 사회적 배제로 귀결될 위험을 수반한다. 이행노동시장론은 이러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여 사회적 배제를 방지함으로써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대안으로는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문제의식을 참조해서, 생애주기별로 각 세대에 걸 맞는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III. 세대, 경제요인, 투표

1. 연구방법

- 이 장에서는 세대, 경제요인, 대선투표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2012년 대선 직후 실시된 다수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 비교하였다.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무릅쓰고 3개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경제요인의 영향력을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다.

<회귀분석을 통한 투표 영향 요인 분석>

1단계 : 대선 영향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 성, 연령, 지역, 학력, 소득, 이념 등 사회경제적 변수

2단계 : 경제 관련 변수의 영향력 분석

- 현재 경제상황 : 소득/계층/경제형편
- 경제평가 : 국가 / 가계
- 경제전망 : 국가 / 가계
- 양극화인식

3단계 : 비경제 변수의 영향력 분석

- 투표기준 : 후보의 소속정당, 이념성향, 도덕성, 정책 및 공약, 당선능력 등
- 이슈관심도 평가 : 10개의 핵심 대선 이슈의 영향력 평가
- 프레임영향력 평가 : 4개의 대선 프레임(여성대통령, 후보단일화, 박근혜 vs 노무현 등)

<집단평균분석을 통한 세대간, 세대내 차이 분석>

- 정치적 태도 및 의식 비교
- 정책적 지향 비교
- 경제인식 비교

-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2012년 대선 직후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여론조사 데이터
- 2012년 대선 직후 KSDC
- 2012년 대선 직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대면면접조사 자료를 주로 이용하되 비교분석을 위해 KSDC,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자료도 비슷한 틀로 분석했다.

2. 2002년 대선과 2012년 대선 비교

1) 세대투표 양상

- 2002년 대선과 2012년 대선의 투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성,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그리고 지지정당(또는 이념성향)이 포함된 회귀모델을 구성해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를 통해 비교 분석했다(<표 III-2>, <표 III-3>).
- 분석 결과, 2002년 대선에서 지역주의는 물론 세대투표 경향도 확연히 나타나 고연령으로 갈수록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고 저연령으로 갈수록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다. 하지만 학력, 소득수준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 2012년 대선에서도 지역주의와 세대투표 경향이 나타났다. 박근혜 투표 요인으로는 세대투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문재인 투표 요인으로는 세대투표 경향이 확연했다.

<표 III-1> 18대 대선 연령별 득표율 (단위 : %)

	16대 대선_MBC-KRC		18대 대선_방송사 출구조사	
	이회창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19-29세	34.9	59	33.7	65.8
30대	34.2	58.3	33.1	66.5
40대	47.9	48.1	44.1	55.6
50대	57.9	43.1	62.7	37.4
60대 이상	63.5	34.9	72.3	27.5

- <표 III-1>이 보여주듯이 출구조사 결과는 2002년 대선 보다 2012년 대선에서 2030세대와 5060세대간 격차가 심화되었다. 그리고 2002년 대선은 40대에서 이회창, 노무현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균형추 역할을 했지만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쪽에 기울었다. 2002년 대선과 비교해 2012년 대선에서는 20대와 30대는 물론 40대에서도 야권 후보가 우세했지만 선거 결과는 박근혜 당선으로 나타났다. 50대에서 격차가 심하게 벌어진데다가 50대 이상 중장년층 유권자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2002년과 2012년 대선의 차이는 야권지지층의 핵심축이 다르다는 점도 작용한다. 2002년 대선에서 세대투표를 통해 세대갈등을 이끈 세대는 386세대였으나 2012년

은 ‘30대’라 할 수 있다. 386세대가 주축이 된 2002년 대선은 세대요인이 기존의 이념적 요인과 결합했다. 당시 진보적 위상을 지닌 노무현 후보의 등장과 386세대로 대표되는 진보적인 유권자층의 부상, 일명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불린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압사 사건과 대미관계 변화에 대한 요구 속에 이념갈등이 부각되었고 이것이 세대갈등과 맞물리면서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다.

- 2002년 대선 당시 세대동맹은 2030으로 나타났는데, 30대였던 386세대와 20대였던 탈정치적 X세대간 동맹이 이루어진 데에는 이념보다 가치의 차원이 컸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포기한 정치인으로 특권과 주류에 맞서는 비주류, 탈권위를 상징했고 2030세대는 노무현 후보가 내세운 상식과 원칙에 열광했다.
- 2002년 대선에서 20대와 30대가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묶일 수 있었던 데에는 미디어 리터러시(매체를 이해하고 매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를 공유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 보수언론에 맞서고 반기독, 반특권 의식을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었다. 당시 다음의 아고라, 한토마(한겨레토론마당), 서프라이즈 등 수많은 인터넷 토론방은 여론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 반면 2012년 대선은 세대요인이 경제적 요인과 결합했다. 반보수 동맹의 핵심에는 30대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안철수 현상을 이끈 주역이다. 이들의 정치적 행동은 SNS를 중심으로 형성되거나 표출된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상의 정치적 행동이 중심이 되었던 386세대와 다르다. 또한 이념적 진보, 정치적 진보라기 보다는 자신의 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진보라는 점에서 386세대와 다르다. 벤처 대란, 카드 대란, 부동산 대란 등의 핵심적인 피해층인 이 세대가 이 사건들로 입은 경제적 상흔은 크다.
- 386세대가 정치적 급진성과 경제적 보수성이 공존하는 모순성을 보인다면 30대는 경제적 불안함이 정치적 급진성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30대가 처한 경제적 불안감은 2012년 대선에서 2040세대동맹이 주창되는 근거로 작용했다. 세대와 계층이 중첩되었다는 점에서 세대와 이념이 중첩된 2002년 대선과 차이가 있다.

<표 III -2> 2002년 대선 투표 영향 요인 (자료 : TNS 대선전 자료 종합)

	이회창 투표				노무현 투표		
	B	S.E.	Exp(B)		B	S.E.	Exp(B)
성	.130	.114	1.139	성	-.162	.103	.851
연령	.365**	.061	1.441	연령	-.199**	.055	.819
충청	-.099	.191	.906	충청	-.025	.168	.976
호남	-1.268	.275	.282	호남	.737**	.180	2.089
TK	.261	.177	1.298	TK	-.916**	.190	.400
PK	.092	.153	1.097	PK	-.385**	.147	.681
학력	.108	.097	1.114	학력	.155	.089	1.167
소득	-.069	.080	.933	소득	.130	.072	1.139
한국당지지	3.038**	.121	20.864	한국당지지	-2.042**	.137	.130
민주당지지	-1.533**	.197	.216	민주당지지	2.372**	.138	10.713
상수	-2.668	.391	.069	상수	-.014	.344	.986
R제곱	0.607			R제곱	0.548		
적중률	86.5			적중률	85.5		
N	3146			N	3146		

*p<0.05, ** p<0.01 (이하 동일)

<표 III -3> 2012년 대선 투표 영향요인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박근혜투표				문재인투표		
	B	S.E.	Exp(B)		B	S.E.	Exp(B)
성	0.17	0.16	1.19	성	-0.22	0.16	0.80
연령	0.24	0.08	1.27	연령	-0.26**	0.08	0.77
충청	0.32	0.26	1.38	충청	-0.31	0.26	0.73
호남	-2.60**	0.34	0.07	호남	2.68**	0.34	14.52
TK	1.72**	0.34	5.57	TK	-1.94**	0.37	0.14
PK	-0.63**	0.20	0.53	PK	0.75**	0.20	2.12
학력	-0.27	0.15	0.76	학력	0.28	0.15	1.32
이념	-1.03**	0.10	0.36	이념	1.07**	0.10	2.91
소득	0.12	0.07	1.12	소득	-0.12	0.07	0.89
자가	0.05	0.19	1.05	자가	0.01	0.20	1.01
상수	1.53	0.65	4.63	상수	-1.65	0.66	0.19
R제곱	0.426			R제곱	0.45		
적중률	75.9			적중률	76.9		
N	1200			N	1200		

2) 경제상황이 투표에 미친 영향 비교

- 경제상황이 투표에 미친 요인을 보면 앞서 <표 III -2>와 <표 III -3>의 2002년과 2012년 동일한 회귀모델에서 소득수준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자신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계층 투표 경향은 아직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한 2012년의 경우 경제요인의 영향력이 일정하게 포착된다(2002년의 경우 경제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 양 선거를 동일한 틀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일부 데이터에서는 주관적 경제적 지위, 또는 소득수준에

따라 후보 선택이 달라지기도 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5년 경제상황평가는 물론 소득 격차 확대에 대한 인식도 대선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대별로 경제요인이 미치는 영향 정도는 상이해 대체로 2030세대에서는 경제요인의 영향력이 크나 50대 이상에서는 적었다.

- 2012년은 경제가 핵심 이슈로 작용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 및 경제적 지위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전 세대와 계층을 엄습했다. 특히 불공정한 분배로 인한 양극화 문제가 경제민주화 및 복지 이슈와 결합하면서 폭발력을 지녔다.
- 사실 2002년 대선도 경제가 핵심이슈였다. 1997년 IMF 이후에는 국민들의 최우선 관심사가 경제로 집중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 즈음부터 이미 대중 여론은 ‘경제문제’가 다른 모든 변수를 압도했다. 대중의 최우선 관심 이슈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정치 이슈였으나 그 이후에는 일관되게 경제 이슈로 집중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다시 찾아온 경기 침체, 이로 인한 경제불안감으로 인해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하지만 2002년 대선은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및 민생 위기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대중들도 충분히 자각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정치개혁이라는 화두가 노무현이라는 개혁적 인물과 만나면서 선거공간에서 폭발력을 발휘했다. 당시 이회창 후보의 한나라당이 색깔론을 펼치면서 ‘민주대 반민주’의 프레임을 제공해준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즉, 2002년 대선은 사실상 경제이슈가 절박하게 부상하기 시작했으나 구체적 청산의 성격을 띤 사실상 마지막 ‘정치선거’에 가리워지고 말았다.
- 하지만 2002년 대선에서도 경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나타났다. 다만 직접적이기 보다는 우회적으로 표출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적 약자층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인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2002년 대선의 ‘정몽준 바람’은 대중의 요구가 ‘경제이미지’를 지닌 인물과 만나 증폭된 사례에 가깝다. 정몽준 바람을 점화시킨 것이 2002년 월드컵이라면 그 바람을 미풍이 아니라 태풍 수준으로 승격시킨 것은 경제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었다.
- 2002년 11월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간 극적인 후보단일화가 성사되기 전까지 정몽준 후보를 지지했던 층이 누구인가를 분석해 보면 이 점이 드러난다. 당시 노무현 후보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20대와 30대가 후보단일화 이전에는 정몽준 지지와

노무현 지지로 나뉘었다. 젊은층 내에서도 대졸, 화이트칼라층이 노무현 후보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것과 달리 고졸 학력층, 저학력층, 자영업 등 경제적 약자층은 정몽준 후보를 더 지지했다.

- 2040세대 내 경제적 약자층은 2002년 대선부터 정치개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줄 후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보를 표방한 노무현 후보는 정치개혁에 몰입했고 사회경제적 의제에 대해서는 준비가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정몽준이라는 인물을 통해 자신의 ‘사회경제적 욕망’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그리고 2007-8년 국면에서는 ‘성장’이라는 사회경제적 의제를 본격적으로 제시한 이명박 후보에게 자신의 욕망을 투여했고 일부는 아예 기권하였다.

3. 2012년 대선 심층 분석 : 경제상황이 투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1) 전체 유권자 집단 분석

(1) 박근혜 투표 요인 분석

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데이터 분석

○ 2012년 대선에서 어떤 요인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해 성, 연령, 지역, 학력, 소득, 자가유무 등 사회경제적 변수에 주관적 이념성향을 포함한 기본 모델을 구성하여 박근혜/문재인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기법을 사용해 분석했다. 먼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대선 사후 데이터를 분석한 <표 III-4>에 따르면 고연령일수록, TK지역 거주자일수록, 호남과 PK지역 거주자가 아닐수록, 그리고 보수성향일수록 박근혜 후보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지역변수의 영향력은 유효했지만 TK지역과 PK지역이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이 역대 대선과 달랐다.

○ 기본모델에 이명박정부와 노무현정부에 대한 평가를 추가했을 때, 두 변수 모두 박근혜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명박 정부에 긍정적인수록, 노무현 정부에 부정적일수록 박근혜 후보에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

○ 경제상황을 지난 5년 국가 및 가계 경제평가, 향후 국가 및 가계 경제전망, 5년전과 비교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격차 평가, 5년전과 비교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갈등 심화 정도 평가로 구분해 박근혜 투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표 III-5>) 지난 5년 경제평가는 박근혜 투표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향후 경제전망은 박근혜 투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인식할수록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난 5년 동안에 대한 일반적인 경제상황 평가는 이번 대선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소득양극화라는 특정 이슈로 한정할 때는 대선에 영향을 주었다. 경제전망이 긍정적일수록 박근혜 투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집권당 후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지난 5년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향후에는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투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한편, <표 III-5>에 새누리당 선호도와 민주당 선호도 등 정당변수를 추가했을 때 경제상황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국가경제전망의 영향력만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 투표 결정에 있어 경제요인 외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후보의 소속 정당, 정책과 공약, 당선 가능성, 국정운영능력, 도덕성, 이념성향 등이 후보 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표 III-6>). 분석 결과 유권자가 후보의 당선가능성, 이념성향을 중요시 할수록, 그리고 도덕성을 중요시 하지 않을수록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 III-4> 박근혜 투표 요인_전체1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17	0.16	1.19	성	0.24	0.17	1.28	성	0.15	0.21	1.16
연령	0.24	0.08	1.27	연령	0.19*	0.08	1.20	연령	0.00	0.10	1.00
충청	0.32	0.26	1.38	충청	0.38	0.28	1.46	충청	0.62	0.33	1.86
호남	-2.60**	0.34	0.07	호남	-2.14**	0.36	0.12	호남	-1.58**	0.43	0.21
TK	1.72**	0.34	5.57	TK	1.58**	0.35	4.87	TK	0.89**	0.43	2.44
PK	-0.63**	0.20	0.53	PK	-0.76**	0.21	0.47	PK	-0.26	0.26	0.78
학력	-0.27	0.15	0.76	학력	-0.32*	0.16	0.73	학력	-0.18	0.20	0.84
이념	-1.03**	0.10	0.36	이념	-0.83**	0.10	0.44	이념	-0.42**	0.13	0.66
소득	0.12	0.07	1.12	소득	0.13	0.07	1.14	소득	0.12	0.09	1.12
자가	0.05	0.19	1.05	자가	0.00	0.21	1.00	자가	0.15	0.25	1.16
상수	1.53	0.65	4.63	이명박 평가	0.29**	0.04	1.34	새누리 당선후보	0.11**	0.01	1.12
				박근혜 평가	-0.32**	0.05	0.73	민주당 선호	-0.10**	0.01	0.91
				상수	1.81	0.73	6.10	상수	-0.29	0.89	0.75
R제곱	0.426			R제곱	0.510			R제곱	0.7		
적중률	75.9			적중률	79.8			적중률	87		
N	1200			N	1200			N	1200		

<표 III -5> 박근혜 투표 요인_전체 2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15	0.16	1.16	성	0.13	0.17	1.14	성	0.16	0.16	1.17
연령	0.25**	0.08	1.29	연령	0.24**	0.08	1.27	연령	0.25**	0.08	1.28
충청	0.32	0.26	1.38	충청	0.10	0.27	1.10	충청	0.26	0.26	1.30
호남	-2.67**	0.34	0.07	호남	-2.59**	0.35	0.08	호남	-2.70**	0.35	0.07
TK	1.68**	0.34	5.38	TK	1.83**	0.35	6.22	TK	1.75**	0.34	5.77
PK	-0.68**	0.20	0.51	PK	-0.49*	0.21	0.62	PK	-0.70**	0.20	0.50
학력	-0.26	0.15	0.77	학력	-0.26	0.15	0.77	학력	-0.26	0.15	0.77
이념	-1.01**	0.10	0.36	이념	-1.01**	0.10	0.37	이념	-1.02**	0.10	0.36
소득	0.11	0.07	1.11	소득	0.08	0.07	1.08	소득	0.12	0.07	1.13
자가	0.03	0.19	1.03	자가	0.03	0.20	1.03	자가	0.04	0.20	1.04
국가경	-0.13	0.11	0.88	국가경	-0.40**	0.12	0.67	소득양	0.45**	0.17	1.56
제평가				제전망				극화			
가계경	-0.14	0.11	0.87	국가경	-0.42**	0.13	0.66	갈등심	-0.19	0.16	0.82
제평가				제전망				화			
상수	2.52	0.77	12.46	상수	3.84	0.77	46.32	상수	1.09	0.70	2.96
R제곱	0.43			R제곱	0.47			R제곱	0.43		
적중률	76.7			적중률	76.5			적중률	76		
N	1200			N	1200			N	1200		

<표 III -6> 박근혜 투표 요인_전체 3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성	0.20	0.17	1.23
연령	0.22*	0.08	1.25
충청	0.32	0.27	1.37
호남	(2.64)**	0.36	0.07
TK	1.80**	0.34	6.03
PK	(0.67)**	0.21	0.51
학력	(0.30)	0.16	0.74
이념	(1.05)**	0.10	0.35
소득	0.09	0.07	1.09
자가	0.21	0.20	1.23
소속정당	(0.08)	0.04	0.92
정책과 공약	(0.07)	0.06	0.93
당선가능성	0.27 **	0.05	1.32
국정운영능력	0.12	0.07	1.13
도덕성	(0.32)**	0.07	0.72
후보이념성향	0.22*	0.07	1.25
상수	0.64	0.78	1.90
R제곱	0.48		
적중률	78.6		
N	217		

나. KSDC 데이터 분석

- 경제상황이 대선투표에 미친 영향력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KSDC의 대선 사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표 III-7>) 연령변수, 지역변수, 주관적 이념성향변수의 영

향은 이 분석에서도 유의미했다. 즉, 고연령일수록, 대구경북거주자일수록, 호남거주자가 아닐수록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MB정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박근혜 후보 투표가능성도 높았다.

- 경제상황의 영향력을 평가한 <표 III-8>에 따르면 MB정부평가, MB정부 경제상황 평가(국가/가계), 경제전망(국가/가계) 중 MB정부하 경제상황 평가(국가), 경제전망(국가/가계) 등이 긍정적일수록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가계의 경제형편은 후보 선택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 경제변수 외 어떤 이슈들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표 III-7>). 분석결과 박근혜 투표에 영향을 준 이슈는 경제민주화, 후보단일화, 과거사논란, 노무현정부부활저지, NLL논란, MB정부심판, 이정희발언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확대, 정치쇄신, 국민통합은 별 영향이 없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민주화, 노무현정부부활저지, NLL논란, 이정희발언 등의 이슈에 관심이 많을수록, 후보단일화, 과거사논란, MB정부심판 이슈에 관심이 적을수록 박근혜 후보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NLL논란 이슈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이 중 경제민주화 이슈는 야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측에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오히려 박근혜 후보측에 유리하게 작용했음이 확인된다.

<표 Ⅲ-7> 박근혜 투표 요인_전체 1 (자료 : KSDC)

	B	S.E.	Exp(B)		B	S.E.	Exp(B)
성	0.07	0.15	1.08	성	-0.17	0.18	0.84
연령	0.39 **	0.07	1.48	연령	0.36**	0.08	1.43
충청	(0.01)	0.25	1.00	충청	-0.43	0.30	0.65
호남	(2.94)**	0.40	0.05	호남	-2.80**	0.42	0.06
TK	1.20**	0.27	3.31	TK	1.27**	0.32	3.55
PK	0.28	0.20	1.32	PK	0.09	0.22	1.09
학력	(0.11)	0.15	0.90	학력	-0.04	0.17	0.96
소득	0.00	0.03	1.00	소득	-0.01	0.03	0.99
이념	0.49**	0.04	1.63	이념	0.43**	0.05	1.53
가독교	0.27	0.20	1.31	경제민주화	-0.14*	0.06	0.87
천주교	(0.09)	0.19	0.92	복지확대	-0.07	0.05	0.93
불교	0.05	0.26	1.05	후보단일화	0.34**	0.05	1.40
상수	(3.99)	0.60	0.02	정치채신	-0.10	0.06	0.90
R제곱	0.43			국민통합	0.00	0.06	1.00
적중률	74.6			과거사	0.19**	0.04	1.21
N	1200			반노무현	-0.13**	0.04	0.88
				NLL	-0.21**	0.05	0.81
				반MB	0.21**	0.04	1.23
				이정희발언	-0.11**	0.04	0.90
				상수	-3.15	0.74	0.04
				R제곱	0.59		
				적중률	81.8		
				N	1200		

<표 Ⅲ-8> 박근혜 투표 요인_전체 2 (자료 : KSDC)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05	0.16	1.05	성	0.12	0.16	1.12	성	0.13	0.16	1.13
연령	0.38**	0.07	1.47	연령	0.43**	0.07	1.53	연령	0.38**	0.07	1.46
충청	0.26	0.27	1.30	충청	0.21	0.26	1.23	충청	-0.20	0.26	0.82
호남	-3.05**	0.43	0.05	호남	-3.15**	0.43	0.04	호남	-2.88**	0.42	0.06
TK	1.16**	0.29	3.19	TK	1.17**	0.29	3.23	TK	0.93**	0.29	2.54
PK	0.13	0.21	1.14	PK	0.17	0.20	1.19	PK	0.03	0.21	1.03
학력	-0.07	0.15	0.94	학력	-0.07	0.15	0.93	학력	-0.03	0.16	0.98
소득	-0.01	0.03	1.00	소득	-0.01	0.03	0.99	소득	0.01	0.03	1.01
이념	0.40**	0.05	1.50	이념	0.43**	0.04	1.54	이념	0.44**	0.05	1.55
이명박평가	-1.06**	0.12	0.35	국가경제평가	-0.82**	0.15	0.44	국가경제전망	-0.92**	0.21	0.40
생활형편	-0.14	0.12	0.87	가계경제평가	-0.16	0.15	0.85	가계경제전망	-0.78**	0.22	0.46
상수	-0.01	0.78	1.00	상수	-0.79	0.77	0.46	상수	-0.05	0.74	0.95
R제곱	0.50			R제곱	0.48			R제곱	0.53		
적중률	77.6			적중률	76.2			적중률	79.1		
N	1200			N	1200			N	1200		

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데이터 분석

○ 세 번째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데이터를 이용해 박근혜 투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연령, 지역 외에도 학력, 주관적경제적지위의 효과도 확인되었다. 즉, 저학력, TK, PK지역 거주자일수록, 호남거주자가 아닐수록, 주관적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이번 대선의 주요 프레임인 박정희 vs 노무현 프레임, 여성 대통령 프레임, 친노 정치세력 평가 프레임, 후보단일화 프레임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 결과, 네 가지 프레임 모두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 여성대통령, 친노세력 평가 프레임은 박근혜 투표에 긍정적으로, 박정희 vs 노무현, 후보단일화 프레임은 박근혜 투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표 Ⅲ-9> 박근혜 투표 요인_전체 (자료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B	S.E.	Exp(B)
성	0.195	0.168	1.215
연령	0.319**	0.076	1.376
충청	0.394	0.282	1.482
호남	-1.909**	0.357	0.148
TK	1.499**	0.325	4.476
PK	0.292	0.229	1.339
학력	-0.56**	0.173	0.571
소득	-0.138*	0.07	0.871
이념성향	0.969**	0.108	2.634
자가소유	-0.197	0.191	0.821
주관적계층	-0.314*	0.107	0.73
프레임1 : 박정희 vs 노무현	0.323**	0.092	1.381
프레임2 : 후보단일화	-0.328**	0.102	0.72
프레임3 : 여성대통령	-0.22*	0.111	0.803
프레임4 : 친노세력 평가	0.545**	0.098	1.725
상수	-1.33	1.041	0.264
R제곱	0.467		
적중률	76.4		
N	1200		

2) 문재인 투표 요인 분석

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데이터 분석

○ <표 Ⅲ-10>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투표에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적 변수는 연령, 지역, 그리고 주관적이념성향으로 나타났다. 즉, 저연령일수록, 호남과 PK

지역 거주자일수록, TK지역거주자가 아닐수록, 그리고 진보성향일수록 문재인 후보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영남 지역 내에서도 TK지역과 PK지역이 상이하게 투표했음이 확인된다. 고연령층일수록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저연령층일수록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세대투표 현상도 나타났다.

- 기본모델에 이명박정부와 노무현정부에 대한 평가를 추가했을 때, 두 변수 모두 문재인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0>). 즉, 이명박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노무현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문재인 후보에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 두 변수의 영향력의 크기는 비슷해서 반MB정서 못지 않게 고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아쉬움이 문재인 투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경제상황을 지난 5년 국가 및 가계 경제평가, 향후 국가 및 가계 경제전망, 5년전과 비교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격차 평가, 5년전과 비교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갈등 평가로 구분해 문재인 투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표 III-11>) 지난 5년 경제평가는 문재인 지지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향후 경제전망은 영향을 주었다. 국가와 가계의 경제전망을 비관적으로 인식할수록 문재인을 지지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인식할수록 문재인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황이 박근혜 지지에 미친 영향과 마찬가지로, 지난 5년 동안에 대한 일반적인 경제상황 평가는 문재인 지지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소득양극화라는 특정 이슈로 한정할 때는 문재인 지지에 영향을 준 것이다. 아울러 경제전망도 후보선택에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된다.
- 한편, <표 III-11>에 새누리당선호도와 민주당선호도 등 정당변수를 추가했을 때, 경제상황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문재인 지지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선호도에 경제평가요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그 외 문재인 지지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표 III-12>) 후보의 당선가능성, 도덕성, 이념성향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도덕성을 중시할수록, 당선가능성이나 이념성향은 중시하지 않을수록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표 III-10> 문재인 투표 요인_전체 1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22	0.16	0.80	성	-0.30	0.18	0.74	성	-0.23	0.22	0.80
연령	-0.26**	0.08	0.77	연령	-0.21*	0.08	0.81	연령	-0.03	0.11	0.97
충청	-0.31	0.26	0.73	충청	-0.37	0.28	0.69	충청	-0.61	0.34	0.54
호남	2.68**	0.34	14.52	호남	2.22**	0.35	9.20	호남	1.70**	0.44	5.50
TK	-1.94**	0.37	0.14	TK	-1.81**	0.38	0.16	TK	-1.25**	0.48	0.29
PK	0.75**	0.20	2.12	PK	0.90**	0.22	2.46	PK	0.44	0.27	1.55
학력	0.28	0.15	1.32	학력	0.32*	0.16	1.38	학력	0.19	0.21	1.21
이념	1.07**	0.10	2.91	이념	0.87**	0.11	2.40	이념	0.46**	0.14	1.58
소득	-0.12	0.07	0.89	소득	-0.14	0.07	0.87	소득	-0.11	0.09	0.89
자가	0.01	0.20	1.01	자가	0.08	0.21	1.08	자가	-0.07	0.26	0.93
상수	-1.65	0.66	0.19	이명박 평가	-0.31**	0.04	0.74	새누리당 선호도	-0.13**	0.01	0.88
				노무현 평가	0.32**	0.05	1.38	민주당 선호도	0.11**	0.01	1.11
				상수	-1.93	0.75	0.15	상수	0.15	0.93	1.16
R제곱	0.45			R제곱	0.53			R제곱	0.73		
적중률	76.9			적중률	81.2			적중률	87.5		
N	1200			N	1200			N	1200		

<표 III-11> 문재인 투표 요인_전체 2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20	0.16	0.82	성	-0.18	0.17	0.83	성	-0.21	0.16	0.81
연령	-0.28*	0.08	0.76	연령	-0.26*	0.08	0.77	연령	-0.27	0.08	0.76
	*				*				**		
충청	-0.32	0.27	0.73	충청	-0.09	0.27	0.91	충청	-0.25	0.27	0.78
호남	2.74**	0.34	15.46	호남	2.65**	0.34	14.20	호남	2.76**	0.34	15.77
TK	-1.92*	0.37	0.15	TK	-2.04*	0.38	0.13	TK	-1.97*	0.37	0.14
	*				*				*		
PK	0.79**	0.21	2.20	PK	0.62**	0.21	1.86	PK	0.81**	0.21	2.25
학력	0.27*	0.15	1.30	학력	0.27	0.15	1.31	학력	0.27	0.15	1.31
이념	1.06**	0.10	2.88	이념	1.03	0.10	2.81	이념	1.06	0.10	2.88
소득	-0.11	0.07	0.90	소득	-0.09*	0.07	0.92	소득	-0.12*	0.07	0.89
					*				*		
자가	0.02	0.20	1.03	자가	0.04	0.20	1.04	자가	0.02	0.20	1.02
국가경 제평가	0.09	0.11	1.09	가계경 제전망	0.29*	0.12	1.33	소득양 극화	-0.41*	0.17	0.67
가계경 제평가	0.17	0.12	1.19	국가경 제전망	0.48**	0.13	1.61	갈등심 화	0.18	0.16	1.20
상수	-2.61	0.79	0.07	상수	-3.76	0.78	0.02	상수	-1.25	0.72	0.29
R제곱	0.45			R제곱	0.48			R제곱	0.45		
적중률	77.2			적중률	77.5			적중률	76.8		
N	1200			N	1200			N	1200		

<표 III-12> 문재인 투표 요인_전체 3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성	(0.26)	0.17	0.77
연령	(0.25)**	0.08	0.78
충청	(0.27)	0.27	0.76
호남	2.65**	0.35	14.12
TK	(2.00)**	0.37	0.14
PK	0.78**	0.21	2.19
학력	0.30	0.16	1.35
이념	1.08**	0.10	2.95
소득	(0.10)	0.07	0.91
자가	(0.13)	0.21	0.88
소속정당	0.06	0.04	1.07
정책과 공약	0.05	0.06	1.05
당선가능성	(0.20)**	0.05	0.82
국정운영능력	(0.11)	0.07	0.89
도덕성	0.33**	0.08	1.39
후보이념성향	(0.24)**	0.07	0.79
상수	(0.92)	0.78	0.40
R제곱	0.48		
적중률	78.6		
N	217		

나. KSDC 데이터 분석

- KSDC의 대선 사후데이터 분석에서도 문재인 지지에 영향을 준 사회경제적 변수는 연령변수, 지역변수, 주관적 이념성향 등으로 나타났다. 즉, 저연령일수록, 호남거주자 일수록, TK지역거주자가 아닐수록, 진보성향일수록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MB정부에 비판적일수록 문재인 후보 투표가능성도 높았다.
- 경제상황의 영향력을 평가한 <표 III-14>에 따르면 MB정부평가, MB정부 경제상황 평가(국가/가계), 경제전망(국가/가계) 중 MB정부하 경제상황 평가(국가), 경제전망(국가/가계) 등이 부정적일수록 문재인 지지 가능성도 높았다. 박근혜 투표와 마찬가지로 현재 가계의 경제형편은 후보 선택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 지난 대선의 주요 이슈들 중 문재인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은 후보단일화, 과거사논란, 노무현정부부활저지, NLL논란, MB정부심판, 이정희발언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후보단일화, 과거사논란, MB정부심판 이슈에 관심이 많을수록, 노무현정부부활저지, NLL논란, 이정희발언 등의 이슈에 관심이 적을수록, 문재인 지지가 높았다. 박근혜 지지 영향 이슈와 비교해 경제민주화 이슈가 문재인 지지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음이 특징적이다. 또한 후보단일화, MB정부심판 이슈의 영

향력이 가장 컸는데, 두 이슈 모두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이슈라기보다는 구도와 관련한 이슈라는 점도 선거 패인으로 주목할 만하다.

<표 III-13> 문재인 투표 요인_전체 1 (자료 : KSDC)

	B	S.E.	Exp(B)
성	0.05	0.17	1.05
연령	(0.02)**	0.01	0.98
충청	0.09	0.28	1.10
호남	2.13**	0.32	8.40
TK	(1.21)**	0.33	0.30
PK	(0.24)	0.22	0.78
학력	0.01	0.17	1.01
소득	(0.01)	0.03	0.99
이념	(0.33)**	0.04	0.72
경제민주화	0.08	0.06	1.08
복지확대	(0.01)	0.05	0.99
후보단일화	(0.34)**	0.04	0.71
정치채신	0.04	0.06	1.04
국민통합	(0.05)	0.06	0.95
과거사	(0.15)**	0.04	0.86
반노무현	0.19**	0.04	1.21
NLL	0.10*	0.04	1.10
반MB	(0.19)**	0.04	0.83
이정희발언	0.13**	0.04	1.13
상수	2.86	0.77	17.52
R제곱	0.523		
적중률	78.7		
N	1200		

<표 III-14> 문재인 투표 요인_전체 2 (자료 : KSDC)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18)	0.15	0.84	성	(0.25)	0.15	0.78	성	(0.21)	0.15	0.81
연령	(0.19)**	0.07	0.83	연령	(0.22)**	0.07	0.80	연령	(0.18)	0.07	0.84
충청	(0.32)	0.25	0.73	충청	(0.27)	0.25	0.76	충청	0.09	0.25	1.09
호남	2.27**	0.32	9.65	호남	2.36**	0.31	10.54	호남	2.16	0.31	8.63
TK	(1.19)**	0.31	0.30	TK	(1.20)**	0.30	0.30	TK	(1.00)	0.31	0.37
PK	(0.30)	0.20	0.74	PK	(0.36)	0.20	0.70	PK	(0.19)	0.20	0.83
학력	0.20	0.15	1.22	학력	0.20	0.15	1.22	학력	0.15	0.15	1.17
소득	0.01	0.03	1.01	소득	0.02	0.03	1.02	소득	0.00	0.03	1.00
이념	(0.34)**	0.04	0.72	이념	(0.37)**	0.04	0.69	이념	(0.37)	0.04	0.69
이명박평가	0.98**	0.11	2.68	국가경제평가	0.65**	0.14	1.92	국가경제평가	0.79	0.19	2.21
생활형편	0.13	0.12	1.14	가계경제평가	0.28	0.15	1.32	가계경제평가	0.48	0.20	1.61
상수	(1.49)	0.76	0.23	상수	(0.72)	0.74	0.49	상수	(0.84)	0.68	0.43
R제곱	0.43			R제곱	0.40			R제곱	0.44		
적중률	76.4			적중률	74.4			적중률	78.1		
N	1200			N	1200			N	1200		

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데이터 분석

- 세 번째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데이터를 이용해 문재인 투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연령, 지역 외에도 학력, 주관적경제적지위의 효과도 확인되었다. 즉, 고학력일수록, 호남거주자일수록, TK거주자가 아닐수록, 주관적경제적지위가 낮을수록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대선의 주요 프레임 효과와 관련해서는 박정희 vs 노무현 프레임, 후보단일화 프레임은 문재인 지지에 긍정적으로, 여성대통령 프레임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친노세력 평가 프레임은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문재인 투표 요인_전체 (자료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B	S.E.	Exp(B)
성	-0.195	0.167	0.823
연령	-0.247**	0.075	0.781
충청	-0.111	0.281	0.895
호남	1.864**	0.334	6.452
TK	-1.657**	0.348	0.191
PK	-0.2	0.228	0.819
학력	0.641**	0.174	1.898
소득	0.083	0.07	1.087
이념성향	-0.987**	0.108	0.373
자가소유	0.243	0.19	1.275
주관적계층	0.208*	0.105	1.231
프레임1 : 박정희 vs 노무현	-0.345**	0.092	0.708
프레임2 : 후보단일화	0.341**	0.101	1.406
프레임3 : 여성대통령	0.169	0.111	1.184
프레임4 : 친노세력 평가	-0.559**	0.098	0.572
상수	1.304	1.034	3.683
R제곱	0.458		
적중률	76.4		
N	1200		

3) 요약

- 지난 대선에서 지역주의는 TK와 PK지역이 갈라지면서 역대 대선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고 세대투표는 여러 데이터에서 확인되었다.
- 그리고 경제요인은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다. 먼저 개인이 처하고 있는 현재 경제상황 중 현재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나 소득수준은 투표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거나 제한적이었지만 주관적 경제적 지위는 투표에 영향을 주었다. 주관적 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문재인 지지가가능성도 높았다. 그리고 지난 5년동안의 경제상황 평가는 대선후보 선택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이를 이명박 정부로 특정화했을 때는 영향력이 높아졌다. 특히 소득격차 확대 등 양극화 문제로 구체화했을 때는 야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2007년 대선과 달리 전임 정부 5년 경제상황 평가에 입각한 회고투표 경향은 약했다고 볼 수 있다.

- 야권이 일찍부터 선점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경제민주화 이슈는 오히려 박근혜 후보측에 유리한 이슈로 작용했음이 확인되었다. 박근혜 후보측의 경제민주화 이슈에 적극 개입하고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결과적으로 경제요인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희석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2) 20대 투표 영향 요인 분석

(1) 20대 박근혜 투표 요인 분석

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데이터 분석

- 지난 대선에서 20대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살펴본 결과, <표 III-16>에 따르면 20대는 지역, 학력, 소득, 20대 전반과 후반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박근혜 지지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고 주관적 이념성향만이 영향을 주었다. 20대에서 지역주의적 경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오히려 보수정당 지지기반이 강한 PK지역에서 반박근혜 투표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정당선호도 변수를 통제했을 때(<표 III-16>) 20대 내에서는 가계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박근혜 지지도 높은 현상이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 기본모델에 이명박정부와 노무현정부에 대한 평가를 추가했을 때는, 이명박 정부 평가만이 박근혜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6>). 즉, 이명박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박근혜 지지가 높았지만 노무현 정부 평가는 20대의 대선 투표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 경제상황을 지난 5년 국가 및 가계 경제평가, 향후 국가 및 가계 경제전망, 5년전과 비교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격차 평가, 5년전과 비교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갈등 평가로 구분해 20대에서 박근혜 투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표 Ⅲ-17>) 지난 5년 경제평가 중 국가경제평가가 긍정적인수록, 향후 가계 경제전망이 긍정적인수록 박근혜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소득격차 및 갈등심화에 대한 인식은 20대의 투표선택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한편, <표 Ⅲ-17>에 새누리당선호도와 민주당선호도 등 정당변수를 추가했을 때는 이명박, 노무현 정부 평가의 영향력도 사라졌다. 경제상황 중에서는 지난 5년 가계 경제평가가 박근혜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
- 경제요인 외에 20대의 박근혜 투표 결정 요인들로는 <표 Ⅲ-18>와 같이 정책 및 공약, 당선가능성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 및 공약을 중시할수록, 당선가능성을 중시할수록 박근혜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표 Ⅲ-16> 박근혜 투표 요인_20대 1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05	0.42	1.06	성	0.39	0.47	1.48	성	-0.10	0.51	0.91
충청	-0.93	0.69	0.40	충청	-1.01	0.73	0.36	충청	-1.59	0.91	0.21
호남	-21.55	10894.91	0.00	호남	-21.73	10721.65	0.00	호남	-20.28	11191.59	0.00
TK	0.91	0.61	2.49	TK	0.82	0.63	2.27	TK	-0.11	0.73	0.90
PK	-2.25**	0.66	0.11	PK	-2.37**	0.67	0.09	PK	-2.41 **	0.79	0.09
학력	-0.40	0.57	0.67	학력	-0.56	0.61	0.57	학력	-0.62	0.75	0.54
이념	-0.95**	0.29	0.39	이념	-0.82**	0.30	0.44	이념	-0.58	0.35	0.56
소득	0.27	0.17	1.31	소득	0.30	0.18	1.35	소득	0.54*	0.22	1.71
전후반	0.39	0.43	1.48	전후반	0.53	0.46	1.71	전후반	0.21	0.52	1.24
자가	0.15	0.47	1.17	자가	0.35	0.50	1.42	자가	0.20	0.58	1.22
상수	1.44	2.07	4.22	이명박 평가	0.23*	0.12	1.26	새누리당선호	0.09**	0.02	1.09
				노무현 평가	-0.11	0.12	0.89	민주당선호	-0.05*	0.02	0.95
				상수	0.41	2.41	1.50	상수	-1.01	2.60	0.36
R제곱	0.39			R제곱	0.43			R제곱	0.61		
적중률	75.5			적중률	75.5			적중률	81.8		
N	217			N	217			N	217		

<표 Ⅲ-17> 박근혜 투표 요인_20대 2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01	0.43	1.00	성	0.20	0.45	1.22	성	-0.01	0.43	0.99
충청	-1.05	0.74	0.35	충청	-1.37	0.72	0.25	충청	-0.79	0.70	0.45
호남	-21.54	10725.39	0.00	호남	-21.29	11004.88	0.00	호남	-21.54	10938.35	0.00
TK	0.94	0.62	2.56	TK	1.09	0.67	2.98	TK	0.93	0.62	2.52
PK	-2.22**	0.66	0.11	PK	-2.04**	0.67	0.13	PK	-2.27**	0.67	0.10
학력	-0.37	0.59	0.69	학력	-0.49	0.62	0.62	학력	-0.32	0.56	0.73
이념	-0.94**	0.30	0.39	이념	-0.98&&	0.30	0.38	이념	-1.00**	0.30	0.37
소득	0.36*	0.19	1.44	소득	0.27	0.19	1.31	소득	0.28	0.18	1.33
전후반	0.62	0.45	1.85	전후반	0.40	0.46	1.49	전후반	0.27	0.44	1.31
자가	0.26	0.49	1.29	자가	0.11	0.52	1.11	자가	0.29	0.49	1.33
국가경제 평가	-0.57*	0.29	0.56	가계경제 전망	-0.68*	0.34	0.51	소득양극화	0.21	0.44	1.24
가계경제 평가	0.61	0.32	1.84	국가경제 전망	-0.41	0.35	0.66	갈등심화	-0.61	0.41	0.55
상수	0.61	2.50	1.84	상수	4.48	2.43	88.33	상수	2.27	2.29	9.69
R제곱	0.43			R제곱	0.47			R제곱	0.41		
적중률	76.9			적중률	76.9			적중률	76.2		
N	217			N	217			N	217		

<표 Ⅲ-18> 박근혜 투표 요인_20대 3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성	0.38	0.48	1.47
충청	-0.88	0.77	0.42
호남	-21.78	9986.95	0.00
TK	1.00	0.67	2.71
PK	-2.66**	0.73	0.07
학력	-0.41	0.64	0.66
이념	-1.19**	0.34	0.30
소득	0.36	0.20	1.43
전후반	0.64	0.49	1.89
자가	0.03	0.54	1.04
소속정당	-0.04	0.09	0.96
정책과 공약	0.43*	0.19	1.53
당선가능성	0.38**	0.14	1.46
국정운영능력	-0.28	0.19	0.76
도덕성	-0.24	0.16	0.79
후보이념성향	0.00	0.17	1.00
상수	-0.59	2.54	0.55
R제곱	0.51		
적중률	79.6		
N	217		

나. KSDC 데이터 분석

- KSDC의 대선 사후데이터 분석에서도 지역, 소득, 학력 등은 20대의 박근혜 지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대 전반과 후반간 차이도 무의미했다. 다만 주관적 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비록 유의수준은 낮지만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을수록 박근혜 지지가능성도 높았다. MB정부에 긍정적일수록 박근혜 후보 투표가능성도 높았다.

- 경제상황의 영향력을 평가한 <표 Ⅲ-20>에 따르면 MB정부평가, MB정부 경제상황 평가(국가/가계), 경제전망(국가/가계) 중 MB정부하 국가경제상황 평가, 국가경제전망이 박근혜 지지에 영향을 미쳤다. 즉, MB정부하 국가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향후 국가경제전망을 긍정적으로 전망할수록 박근혜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현재 가계의 경제형편은 후보 선택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 경제요인 외 지난 대선의 주요 이슈들 중 20대의 박근혜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은 후보단일화, 과거사논란, NLL논란, MB정부심판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NLL논란, MB정부심판 이슈에 관심이 많을수록, 후보단일화, 과거사논란에 관심이 적을수록 박근혜 지지가 높았다. 이 중에서도 20대의 박근혜 지지에 있어 NLL 이슈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대가 안보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선거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Ⅲ-19> 박근혜 투표 요인_20대 1 (자료 : KSCD)

	B	S.E.	Exp(B)		B	S.E.	Exp(B)
성	(0.74)	0.41	0.48	성	(0.77)	0.48	0.46
충청	(1.58)	1.09	0.21	충청	(2.67)*	1.23	0.07
호남	(20.10)	8443.35	0.00	호남	(19.31)	8554.01	0.00
TK	0.49	0.61	1.63	TK	0.54	0.73	1.71
PK	0.25	0.53	1.29	PK	(0.15)	0.60	0.86
학력	1.13	0.72	3.11	학력	1.35	0.84	3.86
소득	0.03	0.07	1.03	소득	0.01	0.08	1.01
이념	0.65**	0.13	1.91	이념	0.63**	0.15	1.88
전후반	(0.10)	0.43	0.91	전후반	(0.28)	0.49	0.76
기독교	0.91#	0.48	2.49	경제민주화	(0.20)	0.17	0.82
천주교	(0.76)#	0.64	0.47	복지확대	(0.04)	0.15	0.96
불교	1.36	0.71	3.90	후보단일화	0.34**	0.12	1.41
상수	(6.93)	2.41	0.00	정치채신	(0.18)	0.18	0.84
R제곱	0.42			국민통합	0.01	0.17	1.01
적중률	81.2			과거사	0.34**	0.13	1.41
N	228			반노무현	(0.15)	0.12	0.86
				NLL	(0.25)*	0.12	0.78
				반MB	0.24*	0.11	1.27
				이정희발언	(0.15)	0.11	0.86
				상수	(6.67)	2.86	0.00
				R제곱	0.56		
				적중률	83.3		
				N	118		

<표 Ⅲ-20> 박근혜 투표 요인_20대 2 (자료 : KSCD)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62)	0.43	0.54	성	(0.67)	0.42	0.51	성	(0.80)	0.45	0.45
충청	(1.43)	1.15	0.24	충청	(1.36)	1.11	0.26	충청	(1.70)	1.10	0.18
호남	(20.01)	8348.59	0.00	호남	(20.25)	8645.80	0.00	호남	(19.80)	8031.26	0.00
TK	0.47	0.64	1.59	TK	0.77	0.63	2.17	TK	0.37	0.68	1.45
PK	(0.50)	0.57	0.61	PK	(0.45)	0.53	0.64	PK	(0.26)	0.56	0.77
학력	1.72*	0.80	5.59	학력	0.59	0.67	1.81	학력	0.57	0.82	1.77
소득	0.03	0.07	1.03	소득	0.02	0.07	1.02	소득	0.08	0.07	1.08
이념	0.50**	0.13	1.66	이념	0.64**	0.14	1.89	이념	0.62**	0.15	1.85
전후반	0.14	0.45	1.15	전후반	(0.08)	0.42	0.92	전후반	(0.51)	0.46	0.60
이명박평가	(1.72)**	0.37	0.18	국가경제평가	(1.42)**	0.41	0.24	국가경제평가	(1.72)**	0.57	0.18
생활형편	(0.09)	0.33	0.91	가계경제평가	0.37	0.43	1.45	가계경제평가	(1.08)	0.58	0.34
상수	(2.81)	2.74	0.06	상수	(1.87)	2.45	0.16	상수	1.72	3.13	5.59
R제곱	0.51			R제곱	0.45			R제곱	0.53		
적중률	84			적중률	85.2			적중률	85.2		
N	228			N	228			N	228		

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데이터 분석

- 세 번째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데이터를 이용해 박근혜 투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부 지역변수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즉, 20대 내에서는 충청과 TK 지역 거주자일수록 박근혜 지지도 높았다. 그 외 주관적 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박근혜지지 가능성도 높았다.

- 대선의 주요 프레임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박정희 vs 노무현 프레임, 후보단일화 프레임, 여성대통령 프레임, 친노세력 평가 프레임 중 어떤 것도 20대의 후보선택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표 III-21> 박근혜 투표 요인_20대 (자료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B	S.E.	Exp(B)
성	-0.414	0.396	0.661
충청	1.539*	0.646	4.66
호남	-0.74	0.895	0.477
TK	1.677*	0.666	5.351
PK	0.148	0.55	1.16
학력	-0.153	0.617	0.858
소득	0.084	0.156	1.088
이념성향	0.974**	0.246	2.649
자가소유	-0.329	0.419	0.719
주관적계층	-0.116	0.248	0.891
프레임1 : 박정희 vs 노무현	0.285	0.202	1.33
프레임2 : 후보단일화	-0.296	0.251	0.744
프레임3 : 여성대통령	-0.039	0.259	0.962
프레임4 : 친노세력 평가	0.393	0.223	1.481
상수	-2.009	2.415	0.134
R제곱	0.353		
적중률	72.3		
N	205		

(2) 20대 문재인 투표 요인 분석

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데이터 분석

- 지난 대선에서 20대의 대선 투표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살펴본 결과, <표 III-22>에 따르면 20대는 지역, 학력, 소득, 20대 전반과 후반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문재인 지지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고 주관적 이념성향만이 영향을 주었다. 이는 박근혜지지 영향 요인과 비슷한 결과로, 20대에서 지역주의적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보수정당 지지기반이 강한 PK지역에서 문재인 지지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정당선호도 변수를 통제했을 때(<표 III-22>) 20대 내에서는 가계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문재인 지지도 높았다. 즉, 20대에서 소득변수가 제한적으로나마

대선투표에 영향을 미쳤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문재인 지지가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박근혜 지지가 높게 나타난다. 부유한 부모를 둔 20대에서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 일정부분 보수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 기본모델에 이명박정부와 노무현정부에 대한 평가를 추가했을 때는, 이명박 정부 평가만이 문재인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2>). 즉, 이명박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문재인 지지가 높았고 노무현 정부 평가는 20대의 대선 투표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 경제상황을 지난 5년 국가 및 가계 경제평가, 향후 국가 및 가계 경제전망, 5년전과 비교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격차 평가, 5년전과 비교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갈등 평가로 구분해 20대에서 문재인 투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표 III-23>) 지난 5년 경제평가 중 국가경제평가가 부정적일수록, 향후 가계 경제전망이 부정적일수록 문재인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지난 5년간 소득격차 및 갈등심화에 대한 인식은 20대의 투표선택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한편, <표 III-22>에 새누리당 선호도와 민주당 선호도 등 정당변수를 추가했을 때는 이명박, 노무현 정부 평가의 영향력도 사라졌다. 경제상황 중에서는 지난 5년 가계 경제평가만이 문재인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
- 경제요인 외 20대의 문재인 투표에 영향을 준 요인들은 <표 III-24>와 같이 정책 및 공약, 당선 가능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후보선택시 정책 및 공약,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수록 문재인지지 가능성이 높았다. 20대에서 문재인 후보의 정책 및 공약이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표 III -22> 문재인 투표 요인_20대 1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08	0.43	0.93	성	-0.47	0.47	0.62	성	0.12	0.54	1.12
충청	1.11	0.71	3.04	충청	1.20	0.75	3.31	충청	1.96*	0.99	7.06
호남	21.55	10899.3	2292264	호남	21.81	1065	2962408	호남	20.18	1111	580026503
		5	963.65			5.27	661.21			9.96	.62
TK	-1.15	0.63	0.32	TK	-1.04	0.66	0.35	TK	-0.13	0.78	0.88
PK	2.38**	0.67	10.79	PK	2.54**	0.69	12.74	PK	2.69**	0.85	14.78
학력	0.31	0.57	1.36	학력	0.45	0.62	1.58	학력	0.48	0.77	1.62
이념	1.07**	0.30	2.92	이념	0.94*	0.31	2.56	이념	0.77*	0.38	2.15
소득	-0.26	0.18	0.77	소득	-0.29	0.18	0.75	소득	-0.59*	0.24	0.55
전후반	-0.23	0.43	0.80	전후반	-0.39	0.47	0.68	전후반	0.10	0.55	1.10
자가	-0.01	0.48	0.99	자가	-0.23	0.51	0.79	자가	-0.03	0.62	0.97
상수	-1.90	2.10	0.15	이명박	-0.27*	0.12	0.76	새누리	-0.10*	0.02	0.90
				평가				당선후	*		
				노무현	0.11	0.12	1.12	민주당	0.06*	0.02	1.06
				평가				선호			
				상수	-0.55	2.46	0.58	상수	0.69	2.71	2.00
R제곱	0.42			R제곱	0.47			R제곱	0.66		
적중률	74.8			적중률	75.5			적중률	83.9		
N	217			N	217			N	217		

<표 III -23> 문재인 투표 요인_20대 2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02	0.44	0.98	성	-0.26	0.46	0.77	성	-0.01	0.44	0.99
충청	1.26	0.76	3.53	충청	1.62	0.75	5.07	충청	0.98	0.72	2.66
호남	21.57	10729.	232712131	호남	21.26	11017.	170691774	호남	21.52	10922.	222400737
		59	9.58			05	0.19			40	5.21
TK	-1.16	0.64	0.31	TK	-1.41*	0.71	0.24	TK	-1.16	0.64	0.31
PK	2.36**	0.67	10.55	PK	2.18**	0.68	8.81	PK	2.38**	0.68	10.85
학력	0.30	0.58	1.35	학력	0.37	0.62	1.44	학력	0.24	0.57	1.27
이념	1.08**	0.32	2.94	이념	1.13**	0.32	3.11	이념	1.13**	0.31	3.10
소득	-0.35	0.19	0.70	소득	-0.26	0.19	0.77	소득	-0.27	0.18	0.76
전후반	-0.44	0.46	0.64	전후반	-0.20	0.47	0.82	전후반	-0.08	0.45	0.92
자가	-0.09	0.50	0.91	자가	0.09	0.53	1.09	자가	-0.15	0.49	0.86
국가경	0.61*	0.30	1.84	가계경	0.71*	0.35	2.03	소득양	-0.12	0.44	0.89
제평가				제전망				극화			
가계경	-0.57	0.32	0.57	국가경	0.47	0.36	1.59	갈등심	0.58	0.41	1.79
제평가				제전망				화			
상수	-1.45	2.53	0.23	상수	-5.20	2.49	0.01	상수	-2.93	2.34	0.05
R제곱	0.46			R제곱	0.50			R제곱	0.44		
적중률	79			적중률	79			적중률	75.5		
N	217			N	217			N	217		

<표 III -24> 문재인 투표 요인_20대 3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성	-0.42	0.48	0.66
충청	1.15	0.79	3.17
호남	21.93	10068.94	3345990987.28
TK	-1.23	0.68	0.29
PK	2.74**	0.73	15.47
학력	0.40	0.63	1.49
이념	1.32**	0.36	3.76
소득	-0.35	0.19	0.70
전후반	-0.37	0.48	0.69
자가	0.12	0.54	1.13
소속정당	0.02	0.09	1.02
정책과 공약	-0.41*	0.18	0.67
당선가능성	-0.31*	0.13	0.73
국정운영능력	0.20	0.18	1.22
도덕성	0.21	0.16	1.24
후보이념성향	0.00	0.17	1.00
상수	0.01	2.47	1.01
R제곱	0.51		
적중률	75.4		
N	217		

나. KSDC 데이터 분석

○ KSDC의 대선 사후데이터 분석에서도 지역, 소득, 학력 등은 20대의 박근혜 지지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대 전반과 후반간 차이도 무의미했다. 다만 호남거주 자일수록, 주관적 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문재인 지지도 높았다. 또한 유의수준은 다소 낮지만 기독교를 믿지 않을수록 문재인 지지가가능성도 높았다. 아울러 MB정부에 비판적일수록 문재인 투표가능성도 높았다. 20대에서 종교, 특히 기독교가 지지 후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20대의 보수화와 종교가 일정부분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경제상황의 영향력을 평가한 <표 III-26>에 따르면 MB정부평가, MB정부 경제상황 평가(국가/가계), 경제전망(국가/가계) 중 MB정부하 국가경제상황 평가만이 문재인 지지에 영향을 미쳤다. 즉, MB정부하 국가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현재 가계의 경제형편은 후보 선택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앞서 분석한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데이터와 비교하면 지난 5년 국가경제평가에 따라 20대의 대선 후보 선택도 달라져 20대에게 경제평가가 후보 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했음이 확인된다.

○ 지난 대선의 주요 이슈들 중 20대의 문재인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은 후보 단일화, 과거사논란, 노무현정부부활저지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후보단일화, 과거사논란에 관심이 많을수록, 노무현정부부활저지에 대한 관심이 낮을수록 문재인 지지가 높았다. 이 중에서도 20대의 문재인 지지에 있어 과거사 논란 이슈 영향력이 가장 컸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측이 20대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사회경제적 이슈와 정책 제시에 집중했지만 효과면에서 미미했고 오히려 정치적 이슈인 과거사 이슈가 대선후보 선택에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된다.

<표 III -25> 문재인 투표 요인_20대 1 (자료 : KSCD)

	B	S.E.	Exp(B)		B	S.E.	Exp(B)
성	0.04	0.31	1.04	성	(0.06)	0.37	0.94
충청	(0.55)	0.51	0.58	충청	(0.16)	0.63	0.85
호남	1.69*	0.81	5.40	호남	1.42	0.88	4.13
TK	(0.75)	0.54	0.48	TK	(0.86)	0.66	0.43
PK	(0.43)	0.42	0.65	PK	(0.17)	0.47	0.85
학력	(0.21)	0.51	0.81	학력	(0.40)	0.57	0.67
소득	(0.03)	0.05	0.97	소득	(0.04)	0.06	0.96
이념	(0.32)**	0.09	0.73	이념	(0.28)**	0.10	0.75
전후반	(0.18)	0.33	0.83	전후반	(0.06)	0.38	0.94
기독교	(0.73)	0.38	0.48	경제민주화	0.02	0.14	1.02
천주교	0.53	0.48	1.70	복지확대	(0.06)	0.13	0.94
불교	(0.55)	0.62	0.57	후보단일화	(0.24)*	0.10	0.79
상수	3.07	1.71	21.63	정치쇄신	0.01	0.15	1.01
R제곱	0.21			국민통합	(0.03)	0.13	0.97
적중률	68.5			과거사	(0.36)**	0.11	0.70
N	228			반노무현	0.29**	0.10	1.34
				NLL	(0.00)	0.10	1.00
				반HMB	(0.07)	0.09	0.94
				이정희발언	0.18*	0.09	1.20
				상수	3.99	2.03	53.81
				R제곱	0.45		
				적중률	74.8		
				N	228		

<표 III -26> 문재인 투표 요인_20대 2 (자료 : KSCD)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07)	0.32	0.94	성	(0.06)	0.31	0.94	성	0.06	0.32	1.06
충청	(0.81)	0.52	0.45	충청	(0.84)	0.53	0.43	충청	(0.62)	0.53	0.54
호남	1.54	0.81	4.66	호남	1.73*	0.80	5.66	호남	1.39	0.81	4.00
TK	(0.72)	0.54	0.49	TK	(0.89)	0.54	0.41	TK	(0.87)	0.58	0.42
PK	(0.06)	0.42	0.95	PK	(0.03)	0.42	0.98	PK	(0.12)	0.42	0.89
학력	(0.38)	0.52	0.68	학력	(0.07)	0.49	0.93	학력	0.19	0.56	1.21
소득	(0.04)	0.05	0.96	소득	(0.02)	0.05	0.98	소득	(0.05)	0.05	0.95
이념	(0.23)**	0.09	0.79	이념	(0.26)**	0.09	0.77	이념	(0.25)**	0.09	0.78
전후반	(0.16)	0.33	0.85	전후반	(0.19)	0.33	0.83	전후반	(0.01)	0.34	0.99
이명박 평가	0.90**	0.25	2.46	국가경 제평가	0.89**	0.30	2.44	국가경 제전망	0.72*	0.38	2.06
생활행 위	(0.30)	0.24	0.74	가계경 제평가	(0.14)	0.33	0.87	가계경 제전망	0.41	0.40	1.50
상수	1.20	1.93	3.31	상수	(0.07)	1.91	0.94	상수	(1.42)	2.07	0.24
R제곱	0.24			R제곱	0.23			R제곱	0.26		
적중률	68.4			적중률	65.1			적중률	67.6		
N	228			N	228			N	228		

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데이터 분석

○ 세 번째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데이터를 이용해 문재인 투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부 지역변수의 영향력만이 확인되었다. 즉, 20대 내에서는 충청과 TK지역 거주자가 아닐수록 문재인 지지도 높았다. 그 외 주관적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문재인지지 가능성도 높았다.

○ 대선의 주요 프레임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앞서 분석한 박근혜 투표 영향 요인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vs 노무현 프레임, 후보단일화 프레임, 여성대통령 프레임, 친노 세력 평가 프레임 중 어떤 것도 20대의 후보선택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표 III -27> 문재인 투표 요인_20대 (자료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B	S.E.	Exp(B)
성	0.34	0.37	1.40
총청	(1.11)	0.63	0.33
호남	0.09	0.70	1.09
TK	(1.63)*	0.68	0.20
PK	0.18	0.54	1.19
학력	0.07	0.59	1.08
소득	(0.07)	0.15	0.93
이념성향	(1.01)**	0.24	0.37
자가소유	(0.01)	0.40	0.99
주관적계층	0.02	0.24	1.02
프레임1 : 박정희 vs 노무현	(0.28)	0.19	0.76
프레임2 : 후보단일화	0.28	0.24	1.32
프레임3 : 여성대통령	(0.06)	0.24	0.94
프레임4 : 친노세력 평가	(0.21)	0.21	0.81
상수	2.58	2.33	13.25
R제곱	0.302		
적중률	69.5		
N			

(3) 요약

- 20대에서 지역주의적 경향은 미미했고 오히려 보수정당 지지기반이 강한 PK지역에서 문재인 지지 경향도 나타났다. 그리고 반MB정서의 영향력이 주요하게 작용한 반면 친노무현정서의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 취업불안에 시달리는 20대에서 경제요인은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 먼저 현재 소득수준은 제한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문재인 지지가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박근혜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부유한 부모를 둔 20대의 보수화경향을 확인해주는 대목이다.
- 20대가 정치적 선택에 있어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정치사회화’ 현상은 일부 연구에서도 확인된바 있다(홍재우, 2012년 2월, “아버지와 나는 다르다” 세대정치와 정치사회화“ 21세기정치학회보). 19대 총선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성격의 연구이긴 하나 이 연구에 따르면 20대 대학생은 정치적 선택시 부모의 이념에 영향을 받는다. 물론 부모세대보다 이념적으로 진보적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말이다.
- 정당지지가 있는 경우만을 볼 때 아버지와 대학생 자녀의 정치적 선택이 일치하는 경우는 72.4%, 어머니와 자녀의 정치적 선택이 일치하는 경우는 70.1%, 부모와 자

녀 모두 일치하는 경우는 35.5%였다. 회귀분석에서도 가정내에서 부모의 영향을 받아 진보적 정치사회화가 이루어질수록 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졌고 그 반대의 경우 여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졌다.

- 성년이 되어 투표권을 획득한 이후 대학생들이 부모와의 정치적 견해 차이를 살펴본 결과 47.7%가 부모와의 정치적 견해 차이에 거의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고 차이가 커졌다는 응답은 16.5%, 차이가 줄었다는 응답은 9.6%에 불과했다.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거의 절반에 이른다는 것은 중고교 시절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아 지니게 된 정치적 견해가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이 조사 자료에서 20대 대학생 부모의 연령은 과반 이상이 386세대에 속하고 나머지는 이전 세대에 속한다. 따라서 민주화세대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정치적 영향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가도 제한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다. 분석에 의하면 민주화를 경험한 진보적 386세대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수적 부모를 둔 자녀, 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녀들일수록 부모의 영향을 받아 보수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된다.
- 기독교 등 종교의 영향력도 일정부분 나타나 보수 후보 지지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난 5년 국가경제평가에 따라 20대의 대선 후보 선택도 달라졌다. 하지만 소득 양극화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 특징적인 것은 후보선택시 정책 및 공약, 당선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수록 문재인 지지 가능성이 높았다. 20대에서 문재인 후보의 정책 및 공약이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 후보측이 20대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사회경제적 이슈와 정책 제시에 집중했지만 효과면에서 미미했고 오히려 정치적 이슈인 과거사 이슈가 대선 후보 선택에 영향을 주었음도 드러났다.

- 20대가 정치적 선택에 있어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정치사회화’ 현상은 일부 연구에서도 확인된바 있다(홍재우, 2012년 2월, “아버지와 나는 다르다” 세대정치와 정치사회화” 21세기정치학회보). 19대 총선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성격의 연구이긴 하나 이 연구에 따르면 20대 대학생은 정치적 선택시 부모의 이념에 영향을 받는다. 물론 부모세대보다 이념적으로 진보적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말이다.
- 정당지지가 있는 경우만을 볼 때 아버지와 대학생 자녀의 정치적 선택이 일치하는 경우는 72.4%, 어머니와 자녀의 정치적 선택이 일치하는 경우는 70.1%, 부모와 자녀 모두 일치하는 경우는 35.5%였다. 회귀분석에서도 가정내에서 부모의 영향을 받아 진보적 정치사회화가 이루어질수록 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졌고 그 반대의 경우 여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졌다.
- 성년이 되어 투표권을 획득한 이후 대학생들이 부모와의 정치적 견해 차이를 살펴본 결과 47.7%가 부모와의 정치적 견해 차이에 거의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고 차이가 컸다는 응답은 16.5%, 차이가 줄었다는 응답은 9.6%에 불과했다.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거의 절반에 이른다는 것은 중고교 시절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아 지니게 된 정치적 견해가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이 조사 자료에서 20대 대학생 부모의 연령은 과반 이상이 386세대에 속하고 나머지는 이전 세대에 속한다. 따라서 민주화세대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정치적 영향력을 어느정도 받고 있는가도 제한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다. 분석에 의하면 민주화를 경험한 진보적 386세대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수적 부모를 둔 자녀, 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녀들일수록 부모의 영향을 받아 보수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된다.

3) 30대 투표 영향 요인 분석

(1) 30대 박근혜 투표 요인 분석

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데이터 분석

- 지난 대선에서 30대의 박근혜 투표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살펴본 결과(<표 III-28>)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지역변수, 학력변수, 그리고 자가소유 변수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30대 내에서 지역변수는 TK거주자일수록, PK거주자가 아닐수록 박근혜 지지가 높게 나타나 전통적인 영호남 지역주의 경향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박근혜 지지가 높았고 일반적 예상과 달리 자가소유가 아닐수록, 주관적 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박근혜지지 가능성이 높았다. 30대 전반과 후반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 기본모델에 이명박정부와 노무현정부에 대한 평가를 추가했을 때는, 두 변수 모두 영향을 미쳤다(<표 III-28>). 즉, 이명박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노무현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박근혜 지지가 높았다.
- 경제상황을 지난 5년 국가 및 가계 경제평가, 향후 국가 및 가계 경제전망, 5년전과 비교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격차 평가, 5년전과 비교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갈등 평가로 구분해 30대에서 박근혜 투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표 III-29>) 지난 5년 경제평가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향후 가계경제전망만이 영향을 미쳤다. 즉, 30대의 박근혜 투표자는 MB정부 5년 동안의 평가와 관계없이 박근혜를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5년간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은 30대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쳐, 소득격차 인식이 심각하지 않을수록 박근혜지지 가능성도 높았다.
- 한편, <표 III-28>, <표 III-29>에 새누리당선호도와 민주당선호도 등 정당변수를 추가했을 때는 이명박, 노무현 정부 평가의 영향력도 사라졌다. 경제상황 중에서는 지난 5년 국가경제평가와 소득격차 인식이 박근혜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
- 경제요인 외 30대의 박근혜 지지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살펴보면 <표 III-30>와 같이 소속정당, 정책 및 공약, 당선가능성, 국정운영능력, 도덕성, 이념성향 중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박근혜 지지자는 이같은 요인들을 고려해서 투표한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표 III -28> 박근혜 투표 요인_30대 1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07)	0.35	0.94	성	(0.07)	0.38	0.93	성	(0.42)	0.50	0.66
충청	0.28	0.60	1.32	충청	0.34	0.66	1.40	충청	1.14	0.87	3.14
호남	(1.01)	0.66	0.36	호남	(0.40)	0.70	0.67	호남	1.02	0.95	2.78
TK	1.69	0.68 **	5.43	TK	1.56*	0.74	4.77	TK	0.71	0.96	2.03
PK	(1.07)	0.49*	0.35	PK	(1.65)*	0.57	0.19	PK	(1.23)	0.71	0.29
학력	(0.95)	0.42 *	0.39	학력	(1.15)*	0.48	0.32	학력	(0.78)	0.57	0.46
이념	(1.07)	0.22	0.34	이념	(0.89)*	0.23	0.41	이념	(0.59)	0.32	0.55
소득	0.20	0.17	1.22	소득	0.28	0.19	1.32	소득	0.31	0.25	1.37
전후반	0.32	0.37	1.38	전후반	0.20	0.41	1.22	전후반	0.01	0.55	1.01
자가	(0.90)	0.41*	0.41	자가	(1.20)*	0.47	0.30**	자가	(1.33)*	0.60	0.26
상수	3.45	2.06	31.41	이명박 평가	0.36	0.11	1.43**	새누리 당선호	0.15**	0.03	1.16
				노무현 평가	(0.39)	0.12	0.68**	민주당 선호	(0.13)**	0.03	0.88
				상수	4.84	2.37	126.60	상수	2.23	2.95	9.34
R제곱	0.37			R제곱	0.49			R제곱	0.73		
적중률	76.1			적중률	75			적중률	86.2		
N	245			N	245			N	245		

<표 III -30> 박근혜 투표 요인_30대 3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성	(0.19)	0.38	0.82
충청	0.20	0.64	1.23
호남	(0.99)	0.70	0.37
TK	1.67**	0.68	5.33
PK	(0.98)	0.53	0.37
학력	(0.87)*	0.44	0.42
이념	(1.08)	0.24	0.34
소득	0.12**	0.18	1.12
전후반	0.14	0.39	1.16
자가	(0.57)	0.44	0.57
소속정당	(0.15)	0.08	0.86
정책과 공약	(0.02)	0.13	0.98
당선가능성	0.19	0.10	1.21
국정운영능력	0.29	0.17	1.33
도덕성	(0.25)	0.19	0.78
후보이념성향	0.05	0.16	1.05
상수	3.27	2.30	26.27
R제곱	0.42		
적중률	77		
N	245		

<표 III -29> 박근혜 투표 요인_30대 2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12)	0.36	0.89	성	(0.11)	0.36	0.89	성	(0.20)	0.37	0.82
충청	0.32	0.61	1.37	충청	0.23	0.63	1.26	충청	0.23	0.62	1.26
호남	(1.08)*	0.66	0.34	호남	(0.86)	0.67	0.42	호남	(1.39)*	0.70	0.25
TK	1.74	0.69	5.69	TK	1.77*	0.71	5.87	TK	1.65*	0.70	5.20
PK	(1.07)*	0.50	0.35	PK	(0.91)	0.52	0.40	PK	(1.42)**	0.53	0.24
학력	(0.95)*	0.42	0.39	학력	(0.84)*	0.43	0.43	학력	(0.99)*	0.44	0.37
이념	(1.09)*	0.22	0.34	이념	(1.02)**	0.23	0.36	이념	(1.15)**	0.23	0.32
소득	0.16	0.18	1.17	소득	0.13	0.18	1.14	소득	0.22	0.18	1.24
전후반	0.25	0.38	1.28	전후반	0.32	0.39	1.38	전후반	0.41	0.39	1.50
자가	(0.97)	0.42	0.38	자가	(0.94)*	0.45	0.39	자가	(1.14)**	0.44	0.32
국가경제평 가	(0.10)	0.23	0.90	가계경제 전망	(0.33)	0.24	0.72	소득양극 화	1.11**	0.37	3.03
가계경제평 가	(0.34)	0.25	0.71	국가경제 전망	(0.65)*	0.30	0.52	갈등심화	(0.60)	0.34	0.55
상수	5.56	2.43	260.5 5	상수	5.92	2.32	370.4 3	상수	2.99	2.20	19.95
R제곱	0.39			R제곱	0.43			R제곱	0.41		
적중률	73.9			적중률	78.7			적중률	76.1		
N	245			N	245			N	245		

나. KSDC 데이터 분석

○ KSDC의 대선 사후데이터 분석에서도 지역, 학력 변수의 영향력은 확인되었다. 다만 영호남지역갈등 양상이 30대에서도 나타나 TK거주자일수록 박근혜 지지가 높고 호남거주자일수록 지지가 낮았다. 학력은 낮을수록 박근혜 지지도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미성은 다소 떨어졌다. 종교의 영향력도 일부 확인되었는데, 기독교일수록 박근혜지지 가능성도 높았다. 그 외 주관적 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박근혜 지지도 높았고 MB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박근혜 후보 투표가능성도 높았다.

○ 경제상황의 영향력을 평가한 <표 III-31>에 따르면 MB정부평가, MB정부 경제상황 평가(국가/가계), 경제전망(국가/가계) 중 MB정부하 국가경제상황 평가, 국가경제전망이 박근혜 지지에 영향을 미쳤다. 즉, MB정부하 국가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향후 국가경제전망을 긍정적으로 전망할수록 박근혜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현재 가계의 경제형편은 후보 선택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앞서 분석한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데이터와 비교하면 MB정부하 국가경제상황 평가의 영향력은 일부 데이터에서만 나타나는 셈이다.

○ 지난 대선의 주요 이슈들 중 30대의 박근혜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은 경제 민주화, 후보단일화, 정치쇄신, 과거사논란, MB정부심판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경

제민주화와 정치쇄신 이슈에 관심이 많을수록, 후보단일화, 과거사논란, MB정부심판 이슈에 관심이 적을수록 박근혜 지지가 높았다.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모두 야권측에서 제기한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박근혜측에 주도권을 뺏기면서 30대에서 박근혜 지지에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된다.

<표 III-31> 박근혜 투표 요인_30대 1 (자료 : KSCD)

	B	S.E.	Exp(B)
성	(0.40)	0.36	0.67
충청	(0.20)	0.64	0.82
호남	(2.29)**	0.93	0.10
TK	1.90**	0.65	6.69
PK	0.48	0.47	1.62
학력	(0.83)*	0.43	0.44
소득	0.11	0.07	1.12
이념	0.66**	0.12	1.93
전후반	0.04	0.37	1.04
기독교	1.20**	0.46	3.33
천주교	(0.09)	0.52	0.91
불교	0.52	0.60	1.68
상수	(2.74)	1.91	0.06
R제곱	0.39		
적중률	82.1		
N	242		

	B	S.E.	Exp(B)
성	(0.57)	0.43	0.56
충청	(1.00)	0.83	0.37
호남	(2.04)*	1.01	0.13
TK	2.38**	0.79	10.82
PK	(0.19)	0.54	0.83
학력	(0.36)	0.51	0.70
소득	0.11	0.08	1.12
이념	0.58**	0.14	1.79
전후반	0.09	0.42	1.10
경제민주화	(0.42)**	0.16	0.66
복지확대	0.19	0.14	1.21
후보단일화	0.39**	0.12	1.48
정치쇄신	(0.38)*	0.18	0.68
국민통합	0.09	0.14	1.10
과거사	0.34**	0.12	1.41
반노무현	(0.15)	0.11	0.86
NLL	(0.19)	0.12	0.83
반MB	0.38**	0.12	1.46
이정희발언	(0.20)*	0.10	0.82
상수	(3.32)	2.29	0.04
R제곱	0.53		
적중률	85.2		
N	242		

<표 III-32> 박근혜 투표 요인_30대 2 (자료 : KSCD)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46)	0.39	0.63	성	(0.26)	0.38	0.77	성	(0.28)	0.37	0.76
충청	0.08	0.73	1.08	충청	0.36	0.66	1.44	충청	(0.08)	0.63	0.92
호남	(2.09)*	0.94	0.12	호남	(2.00)*	0.87	0.14	호남	(2.14)*	0.92	0.12
TK	2.29**	0.72	9.85	TK	1.87**	0.66	6.49	TK	1.60**	0.62	4.95
PK	0.16	0.50	1.17	PK	0.10	0.48	1.10	PK	(0.02)	0.47	0.98
학력	(0.35)	0.44	0.71	학력	(0.53)	0.41	0.59	학력	(0.39)	0.41	0.68
소득	0.13	0.08	1.14	소득	0.06	0.07	1.06	소득	0.06	0.07	1.07
이념	0.54**	0.13	1.72	이념	0.56**	0.12	1.75	이념	0.60**	0.12	1.83
전후반	0.07	0.39	1.07	전후반	0.12	0.38	1.12	전후반	0.10	0.37	1.11
이명박 평가	(1.59)**	0.32	0.21	국가경 제평가	(0.68)*	0.34	0.51	국가경 제전망	(0.44)	0.38	0.65
생활형 편	0.57	0.32	1.77	가계경 제평가	(0.43)	0.38	0.65	가계경 제전망	(0.95)*	0.45	0.39
상수	(0.02)	2.24	0.98	상수	0.55	2.15	1.73	상수	(0.19)	2.08	0.82
R제곱	0.50			R제곱	0.41			R제곱	0.43		
적중률	83			적중률	81.1			적중률	79.8		
N	242			N	242			N	242		

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데이터 분석

○ 세 번째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데이터를 이용해 박근혜 투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역변수, 학력변수, 주관적 경제적지위 변수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즉, 30대 내에서는 TK거주자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주관적 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박근혜 지지도 높았다. 그 외 주관적 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박근혜 지지 가능성이 높았다.

○ 대선의 주요 프레임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박정희 vs 노무현 프레임, 친노세력 평가 프레임이 영향을 미쳤는데, 친노세력 평가 프레임은 박근혜 지지에 긍정적으로, 박정희 vs 노무현 프레임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표 III-33> 박근혜 투표 요인_30대 (자료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B	S.E.	Exp(B)
성	-0.372	0.359	0.689
충청	0.44	0.581	1.553
호남	-20.193	8650.614	0
TK	1.742**	0.598	5.71
PK	0.291	0.495	1.338
학력	-1.003*	0.446	0.367
소득	-0.06	0.158	0.942
이념성향	0.715**	0.23	2.045
자기소유	0.017	0.378	1.017
주관적계층	-0.395	0.223	0.674
프레임1 : 박정희 vs 노무현	0.38	0.202	1.462
프레임2 : 후보단일화	0.125	0.209	1.133
프레임3 : 여성대통령	-0.692**	0.263	0.501
프레임4 : 친노세력 평가	0.292	0.22	1.34
상수	2.184	2.001	8.883
R제곱	0.343		
적중률	77.6		
N	208		

(2) 30대 문재인 투표 요인 분석

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데이터 분석

○ 지난 대선에서 30대의 문재인 투표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살펴본 결과(<표 III-34>)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지역변수, 학력변수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30대 내에서 지역변수는 PK거주자일수록 문재인 지지가 높고, TK거주자일수록 문재인 지지

가 낮게 나타나 전통적인 영호남 지역주의 경향과 상이했다. 이는 앞서 박근혜 투표 영향요인 분석에서도 확인된 결과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문재인 지지 가능성이 높았다. 30대 전반과 후반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 기본모델에 이명박정부와 노무현정부에 대한 평가를 추가했을 때는, 두 변수 모두 영향을 미쳤다(<표 III-34>). 즉, 이명박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노무현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문재인 지지가 높았다.
- 경제상황을 지난 5년 국가 및 가계 경제평가, 향후 국가 및 가계 경제전망, 5년전과 비교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격차 평가, 5년전과 비교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갈등 평가로 구분해 30대에서 문재인 투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표 III-35>) 지난 5년 경제평가, 향후 국가경제전망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난 5년간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은 30대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쳐, 소득격차 인식이 심각할수록 문재인 지지 가능성도 높았다.

- 한편, <표 III-34>와 <표 III-35>에 새누리당선호도와 민주당선호도 등 정당변수를 추가했을 때는 이명박, 노무현 정부 평가의 영향력도 사라졌다. 경제상황 중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인식할수록 문재인 지지가 높았다.
- 경제요인 외 30대의 박근혜 지지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살펴보면 <표 III-36>와 같이 소속정당, 정책 및 공약, 당선가능성, 국정운영능력, 도덕성, 이념성향 중 소속 정당만이 영향을 미쳤다. 즉, 30대에서 문재인 지지가 가장 높았는데, 다른 요인이 아닌 오직 소속정당만을 보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III-24> 문재인 투표 요인_30대 1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00	0.35	1.00	성	(0.01)	0.38	0.99	성	0.33	0.50	1.38
충청	(0.49)	0.60	0.61	충청	(0.61)	0.65	0.55	충청	(1.59)	0.89	0.21
호남	0.79	0.62	2.21	호남	0.21	0.66	1.23	호남	(1.27)	0.91	0.28
TK	(1.56)*	0.68	0.21	TK	(1.43)*	0.73	0.24	TK	(0.44)	0.97	0.64
PK	1.05*	0.49	2.84	PK	1.56**	0.55	4.75	PK	1.16	0.69	3.20
학력	0.99*	0.42	2.68	학력	1.16**	0.46	3.19	학력	0.79	0.56	2.20
이념	1.10**	0.22	2.99	이념	0.92**	0.23	2.52	이념	0.61	0.32	1.83
소득	(0.17)	0.17	0.84	소득	(0.24)	0.18	0.79	소득	(0.29)	0.25	0.75
전후반	(0.25)	0.37	0.78	전후반	(0.13)	0.40	0.88	전후반	0.21	0.54	1.24
자가	0.72	0.41	2.06	자가	0.97*	0.45	2.64	자가	0.93	0.57	2.54
상수	(3.84)	2.05	0.02	이명박 평가	(0.34)**	0.11	0.71	새누리 당선호	(0.15)**	0.03	0.86
				노무현 평가	0.34**	0.12	1.40	민주당 선호	0.13**	0.03	1.14
				상수	(4.97)	2.32	0.01	상수	(3.29)	2.93	0.04
R제곱	0.36			R제곱	0.47			R제곱	0.72		
적중률	75.5			적중률	75.5			적중률	85.1		
N	245			N	245			N	245		

<표 III-35> 문재인 투표 요인_30대 2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08	0.36	1.08	성	0.04	0.36	1.04	성	0.13	0.36	1.135
충청	(0.57)	0.62	0.57	충청	(0.47)	0.63	0.63	충청	(0.45)	0.62	0.638
호남	0.88	0.63	2.41	호남	0.67	0.63	1.96	호남	1.15	0.66	3.148
TK	(1.64)*	0.70	0.19	TK	(1.60)*	0.70	0.20	TK*	(1.49)	0.69	0.225
PK	0.99*	0.50	2.69	PK	0.87	0.51	2.39	PK**	1.38	0.53	3.988
학력	0.98*	0.42	2.67	학력	0.89*	0.43	2.43	학력*	1.01	0.43	2.746
이념	1.14**	0.23	3.14	이념	1.05*	0.23	2.86	이념**	1.16	0.23	3.201
소득	(0.11)	0.17	0.89	소득	(0.10)	0.18	0.90	소득	(0.19)	0.17	0.829
전후반	(0.15)	0.38	0.86	전후반	(0.21)	0.39	0.81	전후반	(0.32)	0.39	0.729
자가	0.79	0.42	2.20	자가	0.71	0.43	2.03	자가	0.95*	0.43	2.585
국가경제평 가	(0.03)	0.24	0.97	가계경제 전망	0.39	0.24	1.47	소득양극 화	(1.06)**	0.36	0.348
가계경제평 가	0.50*	0.26	1.65	국가경제 전망	0.49	0.29	1.63	갈등심화	0.53	0.34	1.692
상수	(6.23)	2.46	0.00	상수	(6.21)	2.31	0.00	상수	(3.31)	2.18	0.036
R제곱	0.39			R제곱	0.41			R제곱	0.41		
적중률	73.4			적중률	77.1			적중률	77.1		
N	245			N	245			N	245		

<표 III -36> 문재인 투표 요인_30대 3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성	0.06	0.37	1.06
충청	(0.46)	0.63	0.63
호남	0.68	0.65	1.97
TK	(1.61)*	0.69	0.20
PK	0.92	0.52	2.50
학력	0.95*	0.44	2.60
이념	1.10**	0.23	3.00
소득	(0.10)	0.18	0.90
전후반	(0.04)	0.38	0.96
자가	0.47	0.43	1.61
소속정당	0.16*	0.08	1.17
정책과 공약	(0.01)	0.12	0.99
당선가능성	(0.09)	0.10	0.91
국정운영능력	(0.20)	0.16	0.82
도덕성	0.23	0.19	1.25
후보이념성향	(0.11)	0.16	0.89
상수	(4.20)	2.28	0.02
R제곱	0.39		
적중률	76.5		
N	245		

<표 III -37> 문재인 투표 요인_30대 1 (자료 : KSCD)

	B	S.E.	Exp(B)
성	0.22	0.32	1.25
충청	0.53	0.57	1.69
호남	1.16	0.65	3.20
TK	(2.10)**	0.68	0.12
PK	(0.71)	0.41	0.49
학력	1.01**	0.39	2.74
소득	(0.12)*	0.06	0.89
이념	(0.46)**	0.10	0.63
전후반	0.21	0.32	1.23
기독교	(0.80)*	0.41	0.45
천주교	0.31	0.46	1.36
불교	(0.48)	0.51	0.62
상수	(0.10)	1.68	0.90
R제곱	0.32		
적중률	75.1		
N	242		

	B	S.E.	Exp(B)
성	0.27	0.38	1.31
충청	0.77	0.72	2.15
호남	0.82	0.65	2.27
TK	(2.40)**	0.78	0.09
PK	(0.34)	0.48	0.72
학력	0.44	0.44	1.55
소득	(0.14)*	0.07	0.87
이념	(0.34)**	0.11	0.71
전후반	0.08	0.37	1.08
경제민주화	0.27*	0.14	1.31
복지확대	(0.35)**	0.13	0.71
후보단일화	(0.44)**	0.12	0.64
정치쇄신	0.40**	0.16	1.49
국민통합	(0.14)	0.11	0.87
과거사	(0.20)*	0.10	0.82
반노무현	0.19*	0.10	1.21
NLL	0.12	0.11	1.13
반MB	(0.32)**	0.11	0.72
이정희발언	0.26**	0.09	1.30
상수	1.39	1.96	4.00
R제곱	0.48		
적중률	75.3		
N	242		

<표 III -38> 문재인 투표 요인_30대 2 (자료 : KSCD)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24	0.34	1.27	성	0.04	0.34	1.04	성	0.16	0.33	1.17
충청	0.19	0.63	1.21	충청	0.09	0.59	1.10	충청	0.52	0.57	1.67
호남	1.27	0.67	3.56	호남	1.05	0.64	2.86	호남	1.05	0.67	2.85
TK	(2.36)**	0.73	0.09	TK	(2.15)**	0.70	0.12	TK	(1.63)**	0.66	0.20
PK	(0.28)	0.43	0.76	PK	(0.40)	0.41	0.67	PK	(0.18)	0.41	0.83
학력	0.52	0.39	1.69	학력	0.79*	0.38	2.21	학력	0.55	0.38	1.74
소득	(0.10)	0.07	0.91	소득	(0.08)	0.06	0.93	소득	(0.08)	0.06	0.93
이념	(0.36)**	0.10	0.70	이념	(0.37)**	0.10	0.69	이념	(0.39)**	0.10	0.68
전후반	0.18	0.34	1.19	전후반	0.15	0.33	1.17	전후반	0.16	0.33	1.18
이명박 평가	1.33**	0.26	3.77	국가경 제평가	0.48	0.30	1.61	국가경 제전망	0.46	0.35	1.58
생활형 편	0.11	0.27	1.12	가계경 제평가	0.65	0.34	1.92	가계경 제전망	0.77*	0.39	2.16
상수	(3.99)	2.04	0.02	상수	(3.47)	2.02	0.03	상수	(2.49)	1.84	0.08
R제곱	0.43			R제곱	0.36			R제곱	0.38		
적중률	79.5			적중률	73.2			적중률	72.8		
N	242			N	242			N	242		

나. KSDC 데이터 분석

○ KSDC의 대선 사후데이터 분석에서도 지역, 학력 변수의 영향력은 확인되었다. TK 거주자일수록 문재인지지가 낮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문재인 지지가 높았다. 그 외 가계소득수준의 영향력도 나타나, 소득이 낮을수록 문재인 지지가 높았다. 그 외 주관적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문재인 지지도 높았고 MB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문재인 후보 투표가능성도 높았다.

○ 경제상황의 영향력을 평가한 <표 III-38>에 따르면 MB정부평가, MB정부 경제상황 평가(국가/가계), 경제전망(국가/가계) 중 국가경제전망만이 문재인 지지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분석한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데이터와 비교 종합하면 30대에서 경제요인의 영향력은 지난 5년동안 소득격차 인식, 즉 지난 5년 경제상황에 대한 막연한 평가나 향후 경제전망이 아닌 양극화에 대한 인식만이 문재인 후보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30대가 양극화, 특히 자산양극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문제가 정치적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 지난 대선의 주요 이슈들 중 30대의 문재인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은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후보단일화, 정치쇄신, 과거사논란, 노무현정부부활지지, MB정부심판, 이정희발언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확대, 후보단일화, 과거사논란, MB정부심판 이슈에 관심이 높을수록,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과거사논란, 노무현정부부

활저지에 관심이 적을수록 문재인 지지가 높았다. 앞서 박근혜 투표 영향요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모두 야권측에서 제기한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박근혜측에 주도권을 뺏기면서 30대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에 유리하게 작용했음이 확인된다. 정책이슈 중에서는 복지확대만이 30대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데이터 분석

- 세 번째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데이터를 이용해 문재인 투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역변수, 학력변수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30대 내에서는 TK 거주자가 아닐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문재인 지지도 높았다. 그 외 주관적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문재인 지지 가능성도 높았다.
- 대선의 주요 프레임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박정희 vs 노무현 프레임, 여성대통령, 친노세력 평가 프레임, 후보단일화 프레임 중 어떤 것도 문재인 후보 투표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표 III-39> 문재인 투표 요인_30대 (자료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B	S.E.	Exp(B)
성	0.42	0.349	1.523
충청	-0.059	0.58	0.943
호남	20.403	8735.985	725715445.2
TK	-1.718**	0.626	0.179
PK	-0.248	0.473	0.781
학력	1.626**	0.469	5.084
소득	-0.066	0.153	0.936
이념성향	-0.844**	0.231	0.43
자가소유	0.304	0.372	1.356
주관적계층	0.274	0.215	1.315
프레임1 : 박정희 vs 노무현	-0.302	0.193	0.739
프레임2 : 후보단일화	-0.008	0.201	0.992
프레임3 : 여성대통령	0.431	0.254	1.54
프레임4 : 친노세력 평가	-0.226	0.212	0.798
상수	-3.733	2.029	0.024
R제곱	0.373		
적중률	75.9		
N	208		

(3) 요약

- 30대의 투표에 영향을 준 요인은 학력, 지역, 소득수준 등이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나 주관적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빈곤보수와 상반된 경향을 보여준다. 지역도 전통적인 지역주의 경향과 달리 PK지역거주자일수록 문재인 지지 가능성이 높았다.
- 30대에서도 경제요인은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는데, 지난 5년 경제상황에 대한 막연한 평가나 향후 경제전망이 아닌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인식이 문재인 후보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30대가 양극화, 특히 자산 양극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문제가 정치적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앞서 박근혜 투표 영향요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모두 야권측에서 제기한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박근혜측에 주도권을 뺏기면서 30대에서 박근혜 지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정책이슈 중에서는 복지확대만이 30대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 즉, 문재인 후보측이 30대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사회경제적 이슈와 정책 제시에 집중했지만 박근혜 후보측이 이슈 주도권을 가져감으로서 경제요인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4) 40대 투표 영향 요인 분석

(1) 40대 박근혜 투표 요인 분석

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데이터 분석

- 지난 대선에서 40대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살펴본 결과(<표 III-40>)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지역변수만이 유의미했다. 즉, TK거주자일수록 박근혜 지지가 높게 나타났고, 소득, 학력 등 다른 요인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주관적 이념성향은 보수적일수록 박근혜 지지 가능성이 높았다. 40대 전반과 후반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 기본모델에 이명박정부와 노무현정부에 대한 평가를 추가했을 때는, 두 변수 모두 영향을 미쳤다(<표 III-40>). 즉, 이명박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노무현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박근혜 지지가 높았다.

○ 경제상황을 지난 5년 국가 및 가계 경제평가, 향후 국가 및 가계 경제전망, 5년전과 비교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격차 평가, 5년전과 비교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갈등 확산 평가로 구분해 40대에서 박근혜 투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표 III-41>) 경제요인 중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40대에서 박근혜 투표자는 경제요인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투표했음을 시사한다.

○ 한편, <표 III-40>과 <표 III-41>에 새누리당 선호도와 민주당 선호도 등 정당변수를 추가했을 때는 이명박, 노무현정부 평가의 영향력도 사라졌다. 경제상황은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어떤 항목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경제요인 외 40대의 박근혜 지지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살펴보면 <표 III-42>와 같이 당선가능성과 국정운영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40대에서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는 당선가능성과 국정운영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했음이 확인되었다.

<표 III-40> 박근혜 투표 요인_40대 1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45	0.33	1.56	성	0.31	0.36	1.37	성	0.45	0.45	1.56
충청	1.06*	0.53	2.87	충청	1.04	0.58	2.83	충청	1.41	0.74	4.08
호남	(2.63)**	1.06	0.07	호남	(1.87)	1.08	0.15	호남	(1.67)	1.20	0.19
TK	2.76**	0.82	15.86	TK	2.54**	0.81	12.71	TK	2.53*	1.07	12.60
PK	(0.14)	0.40	0.87	PK	(0.01)	0.44	0.99	PK	0.31	0.54	1.36
학력	(0.11)	0.35	0.90	학력	(0.17)	0.38	0.84	학력	0.31	0.51	1.36
이념	(0.97)**	0.20	0.38	이념	(0.63)**	0.23	0.53	이념	(0.14)	0.29	0.87
소득	0.21	0.16	1.23	소득	0.26	0.18	1.30	소득	0.11	0.22	1.12
전후반	(0.07)	0.43	0.93	전후반	(0.17)	0.48	0.84	전후반	0.36	0.60	1.44
자가	0.16	0.34	1.17	자가	(0.01)	0.37	0.99	자가	(0.03)	0.46	0.97
상수	(0.35)	2.29	0.71	이명박 평가	0.25**	0.09	1.28	새누리당 선호	0.15**	0.02	1.16
				노무현 평가	(0.44)**	0.11	0.65	민주당 선호	(0.15)**	0.03	0.86
				상수	1.40	2.52	4.06	상수	(2.17)	3.18	0.12
R제곱	0.41			R제곱	0.50			R제곱	0.72		
적중률	74.3			적중률	77.1			적중률	85.3		
N	265			N	265			N	265		

<표 III-41> 박근혜 투표 요인_40대 2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44	0.34	1.55	성	0.28	0.34	1.32	성	0.44	0.33	1.55
충청	1.05*	0.54	2.84	충청	0.81*	0.55	2.25	충청	0.91	0.55	2.49
호남	(2.72)**	1.07	0.07	호남	(2.61)**	1.07	0.07	호남	(2.75)**	1.07	0.06
TK	2.70**	0.82	14.94	TK	2.81	0.83	16.56	TK	2.80**	0.85	16.48
PK	(0.19)	0.41	0.82	PK	(0.05)	0.41	0.95	PK	(0.17)	0.40	0.84
학력	(0.11)	0.35	0.90	학력	(0.20)	0.36	0.82	학력	(0.08)	0.35	0.92
이념	(0.95)**	0.20	0.39	이념	(0.93)**	0.21	0.39	이념	(0.93)**	0.21	0.39
소득	0.20	0.16	1.22	소득	0.21	0.16	1.23	소득	0.20	0.16	1.22
전후반	(0.08)	0.43	0.92	전후반	(0.11)	0.44	0.90	전후반	(0.02)	0.43	0.98
자가	0.10	0.35	1.10	자가	0.26	0.35	1.30	자가	0.13	0.34	1.14
국가경 제평가	(0.22)	0.23	0.80	가계경 제전망	(0.24)	0.26	0.79	소득양 극화	0.35	0.39	1.41
가계경 제평가	(0.04)	0.25	0.96	국가경 제전망	(0.46)	0.28	0.63	갈등심 화	(0.08)	0.37	0.93
상수	1.02	2.54	2.77	상수	1.28	2.42	3.59	상수	(0.72)	2.35	0.49
R제곱	0.42			R제곱	0.44			R제곱	0.41		
적중률	74.3			적중률	72			적중률	75.1		
N	265			N	265			N	265		

<표 III-42> 박근혜 투표 요인_40대 3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성	0.52	0.36	1.68
충청	1.21*	0.57	3.35
호남	(2.51)*	1.09	0.08
TK	2.99**	0.85	19.83
PK	(0.29)	0.43	0.75
학력	(0.08)	0.38	0.93
이념	(1.00)**	0.22	0.37
소득	0.22	0.17	1.25
전후반	0.01	0.46	1.01
자가	0.11	0.36	1.11
소속정당	(0.03)	0.07	0.97
정책과 공약	(0.08)	0.13	0.92
당선가능성	0.27**	0.10	1.31
국정운영능력	0.41*	0.20	1.50
도덕성	(0.30)	0.19	0.74
후보이념성향	0.06	0.18	1.06
상수	(2.71)	2.91	0.07
R제곱	0.49	0.22	0.86
적중률	77.4	4.01	0.02
N	265		

나. KSDC 데이터 분석

○ KSDC의 대선 사후데이터 분석에서도 지역 변수 만이 유의미했다. PK지지자일수록, 호남거주자가 아닐수록 박근혜지지 가능성도 높았다. 그 외 학력, 소득 등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주관적 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박근혜 지지도 높았다.

또한 MB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박근혜 후보 투표가능성도 높았다.

- 경제상황의 영향력을 평가한 <표 III-44>에 따르면 MB정부평가, MB정부 경제상황 평가(국가/가계), 경제전망(국가/가계) 중 MB정부하 국가경제상황 평가, 국가경제전망이 박근혜 지지에 영향을 미쳤다. 즉, MB정부하 국가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향후 국가경제전망을 긍정적으로 전망할수록 박근혜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현재 가계의 경제형편은 후보 선택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앞서 분석한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데이터에서는 경제변수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해 대비된다. 40대에서 경제변수가 미친 영향력에 대해 데이터별로 상이하게 나타나 향후 보다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 경제요인 외 지난 대선의 주요 이슈들 중 40대의 박근혜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은 후보단일화, 과거사논란, NLL논란, MB정부심판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NLL논란에 관심이 높을수록, 후보단일화, 과거사논란, MB정부심판 이슈에 관심이 적을수록 박근혜 지지가 높았다. 20대와 마찬가지로 40대에서도 NLL논란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된다.

<표 III-43> 박근혜 투표 요인_40대 1 (자료 : KSCD)

	B	S.E.	Exp(B)
성	0.20	0.30	1.23
총청	0.03	0.49	1.04
호남	(3.02)**	0.82	0.05
TK	0.86	0.57	2.36
PK	0.88*	0.45	2.42
학력	0.39	0.30	1.48
소득	(0.03)	0.05	0.97
이념	0.39**	0.08	1.48
전후반	0.47	0.31	1.60
기독교	(0.77)	0.41	0.46
천주교	(0.63)	0.38	0.53
불교	(0.42)	0.56	0.66
상수	(5.63)	1.98	0.00
R제곱	0.34		
적중률	72.3		
N	263		

	B	S.E.	Exp(B)
성	-0.23	0.38	0.79
총청	-0.17	0.65	0.84
호남	-3.18**	0.98	0.04
TK	0.72	0.68	2.06
PK	0.54	0.49	1.71
학력	0.43	0.37	1.54
소득	-0.04	0.07	0.96
이념	0.34**	0.10	1.40
전후반	0.38	0.38	1.46
경제민주화	-0.17	0.14	0.85
복지확대	-0.12	0.13	0.88
후보단일화	0.28**	0.09	1.32
정치채신	0.12	0.14	1.12
국민통합	-0.23	0.14	0.79
과거사	0.24**	0.09	1.27
반노무현	-0.04	0.08	0.96
NLL	-0.36**	0.10	0.70
반MB	0.21*	0.09	1.24
이정희발언	-0.02	0.08	0.98
상수	-4.45	2.50	0.01
R제곱	0.65		
적중률	82.3		
N	262		

<표 III-44> 박근혜 투표 요인_40대 2 (자료 : KSCD)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03	0.31	1.03	성	0.15	0.31	1.16	성	0.11	0.32	1.12
총청	0.13	0.50	1.14	총청	0.15	0.49	1.16	총청	(0.27)	0.51	0.77
호남	(3.03)**	0.86	0.05	호남	(3.33)**	0.91	0.04	호남	(3.08)**	0.83	0.05
TK	0.63	0.57	1.88	TK	0.76	0.57	2.13	TK	0.39	0.59	1.48
PK	0.56	0.44	1.75	PK	0.90*	0.43	2.45	PK	0.43	0.45	1.54
학력	0.35	0.32	1.42	학력	0.39	0.31	1.48	학력	0.44	0.32	1.56
소득	(0.02)	0.06	0.99	소득	(0.02)	0.05	0.98	소득	(0.02)	0.05	0.98
이념	0.29**	0.08	1.34	이념	0.35**	0.08	1.42	이념	0.33**	0.08	1.38
전후반	0.45	0.32	1.57	전후반	0.52	0.31	1.68	전후반	0.30	0.32	1.35
이명박 평가	(0.90)**	0.25	0.41	국가경 제평가	(0.83)**	0.28	0.44	국가경 제전망	(0.88)*	0.43	0.41
생활형 편	(0.23)	0.25	0.79	가계경 제평가	0.11	0.29	1.12	가계경 제전망	(0.67)	0.45	0.51
상수	(1.74)	2.26	0.18	상수	(3.77)	2.16	0.02	상수	(1.11)	2.26	0.33
R제곱	0.39			R제곱	0.37			R제곱	0.42		
적중률	77.6			적중률	73.1			적중률	74		
N	263			N	263			N	263		

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데이터 분석

- 세 번째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데이터를 이용해 박근혜 투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역변수와 성별 변수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즉, 40대 내에서는 TK 거주자일수록, 여성일수록 박근혜 지지도 높았다. 그 외 학력, 소득 변수는 무의미했다. 주관적 이념성향은 보수적일수록 박근혜지지 가능성도 높았다. 앞의 데이터와 비교 종합하면 40대에서 전반과 후반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여성과 남성간 차이는 일부 확인되고 있어 추후 보다 엄밀한 검증을 요한다.

- 대선의 주요 프레임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박정희 vs 노무현 프레임, 후보단일화 프레임 효과가 확인되었는데, 두 프레임 모두 박근혜 지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표 III-45> 박근혜 투표 요인_40대 (자료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B	S.E.	Exp(B)
성	1.016**	0.362	2.763
총청	0.51	0.559	1.665
호남	-20.464	8100.733	0
TK	2.419**	0.782	11.24
PK	0.61	0.456	1.84
학력	-0.4	0.417	0.67
소득	-0.166	0.174	0.847
이념성향	1.072**	0.247	2.922
자가소유	0.03	0.437	1.03
주관적계층	-0.209	0.257	0.812
프레임1 : 박정희 vs 노무현	0.677**	0.216	1.969
프레임2 : 후보단일화	-0.27	0.217	0.764
프레임3 : 여성대통령	-0.138	0.231	0.871
프레임4 : 친노세력 평가	0.665**	0.227	1.945
상수	-4.54	2.213	0.011
R제곱	0.519		
적중률	78.3		
N	271		

(2) 40대 문재인 투표 요인 분석

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데이터 분석

- 지난 대선에서 40대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살펴본 결과(<표 III-46>)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지역변수만이 유의미했다. 즉, 호남거주자일수록, TK거주자가 아닐수록 문재인 지지가 높게 나타났고, 소득, 학력 등 다른 요인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주관적 이념성향은 진보적일수록 문재인지지 가능성이 높았다. 40대 전반과 후반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 기본모델에 이명박정부와 노무현정부에 대한 평가를 추가했을 때는, 두 변수 모두 영향을 미쳤다(<표 III-46>). 즉, 이명박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노무현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문재인 지지가 높았다. 두 변수중에서는 반MB 보다 친노무현 영향력이 더 컸다. 한편, 앞서 40대에서 박근혜 투표 영향 요인에서도 반노무현이 친이명박 영향력 보다 높게 나타난 바 있다. 40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 보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투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 경제상황을 지난 5년 국가 및 가계 경제평가, 향후 국가 및 가계 경제전망, 5년전

과 비교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격차 평가, 5년전과 비교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갈등 평가로 구분해 40대에서 문재인 투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표 III-47>) 경제요인의 영향력이 미미했다. 5년 국가경제평가와 향후 가계 경제전망이 영향을 미쳤으나 통계적 유의도가 낮았다.

- 한편, <표 III-46>과 <표 III-47>에 새누리당선호도와 민주당선호도 등 정당변수를 추가했을 때는 이명박, 노무현 정부 평가의 영향력도 사라졌다. 경제상황은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어떤 항목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경제요인 외 40대의 문재인 지지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살펴보면 <표 III-48>와 같이 당선가능성과 국정운영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40대에서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는 소속정당, 정책 및 공약, 도덕성, 이념성향 등 다른 요인보다 당선 가능성과 국정운영능력을 덜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투표 영향 요인에서 당선가능성과 국정운영능력이 최우선 고려 요인으로 꼽혔던 것과 대비된다. 특히 국정운영능력이 40대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III-46> 문재인 투표 요인_40대 1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39)	0.33	0.68	성	(0.24)	0.37	0.79	성	(0.29)	0.46	0.75
총청	(0.94)	0.53	0.39	총청	(0.90)	0.57	0.41	총청	(1.19)	0.73	0.30
호남	2.73**	1.06	15.39	호남	2.02	1.08	7.57	호남	1.89	1.21	6.62
TK	(3.45)**	1.08	0.03	TK	(3.21)**	1.07	0.04	TK	(3.53)**	1.36	0.03
PK	0.25	0.40	1.28	PK	0.14	0.43	1.15	PK	(0.07)	0.54	0.94
학력	0.14	0.35	1.15	학력	0.20	0.38	1.22	학력	(0.21)	0.52	0.81
이념	0.95**	0.20	2.58	이념	0.59**	0.23	1.80	이념	0.09	0.30	1.10
소득	(0.25)	0.16	0.78	소득	(0.30)	0.18	0.74	소득	(0.20)	0.23	0.82
전후반	(0.00)	0.43	1.00	전후반	0.07	0.48	1.07	전후반	(0.56)	0.60	0.57
자가	(0.09)	0.34	0.91	자가	0.08	0.37	1.08	자가	0.13	0.47	1.13
상수	0.03	2.31	1.03	이명박 평가	(0.25)**	0.09	0.78	새누리당 선호	(0.15)**	0.03	0.86
				노무현 평가	0.43**	0.11	1.54	민주당 선호	0.15**	0.03	1.16
				상수	(1.71)	2.53	0.18	상수	1.61	3.21	5.00
R제곱	0.42			R제곱	0.51			R제곱	0.74		
적중률	75.7			적중률	78.4			적중률	85.8		
N	265			N	265			N	265		

<표 III -47> 문재인 투표 요인_40대 2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38)	0.34	0.68	성	(0.23)	0.34	0.79	성	(0.38)	0.33	0.68
충청	(0.93)	0.53	0.40	충청	(0.71)	0.54	0.49	충청	(0.72)	0.55	0.49
호남	2.78**	1.07	16.16	호남	2.69**	1.06	14.77	호남	2.94**	1.07	18.90
TK	(3.41)**	1.08	0.03	TK	(3.45)**	1.09	0.03	TK	(3.50)**	1.12	0.03
PK	0.29	0.41	1.33	PK	0.16	0.41	1.17	PK	0.30	0.41	1.35
학력	0.14	0.35	1.15	학력	0.26	0.36	1.29	학력	0.11	0.36	1.11
이념	0.93**	0.21	2.54	이념	0.88**	0.21	2.41	이념	0.89**	0.21	2.43
소득	(0.25)	0.16	0.78	소득	(0.25)	0.16	0.78	소득	(0.24)	0.16	0.78
전후반	0.01	0.43	1.01	전후반	0.04	0.44	1.04	전후반	(0.07)	0.44	0.93
자가	(0.05)	0.35	0.95	자가	(0.18)	0.35	0.84	자가	(0.05)	0.34	0.95
국가경제 평가	0.15	0.23	1.16	가계경 제전망	0.05	0.26	1.06	소득향 극화	(0.49)	0.40	0.61
가계경제 평가	0.02	0.25	1.02	국가경 제전망	0.55*	0.28	1.73	갈등심 화	0.08	0.38	1.08
상수	(0.91)	2.56	0.40	상수	(1.46)	2.43	0.23	상수	0.60	2.37	1.83
R제곱	0.43			R제곱	0.45			R제곱	0.43		
적중률	74.8			적중률	72.9			적중률	75.2		
N	265			N	265			N	265		

<표 III -48> 문재인 투표 요인_40대 3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성	(0.45)	0.36	0.64
충청	(1.02)	0.56	0.36
호남	2.61*	1.09	13.65
TK	(3.66)**	1.10	0.03
PK	0.42	0.43	1.53
학력	0.09	0.38	1.09
이념	0.96**	0.22	2.61
소득	(0.27)	0.17	0.77
전후반	(0.06)	0.46	0.94
자가	(0.05)	0.37	0.95
소속정당	0.04	0.07	1.04
정책과 공약	0.02	0.13	1.02
당선가능성	(0.21)*	0.10	0.81
국정운영능력	(0.42)*	0.20	0.66
도덕성	0.35	0.19	1.42
후보이념성향	(0.03)	0.18	0.97
상수	2.04	2.91	7.70
R제곱	0.49		
적중률	77.9		
N	265		

나. KSDC 데이터 분석

<표 III -49> 문재인 투표 요인_40대 1 (자료 : KSDC)

	B	S.E.	Exp(B)
성	(0.02)	0.38	0.98
충청	0.51	0.63	1.66
호남	2.84**	0.72	17.11
TK	(0.18)	0.72	0.84
PK	(0.20)	0.51	0.82
학력	(0.20)	0.36	0.82
소득	0.05	0.07	1.06
이념	(0.38)**	0.10	0.68
전후반	(0.38)	0.38	0.68
경제민주화	0.09	0.14	1.10
복지확대	0.17	0.13	1.19
후보단일화	(0.38)**	0.11	0.69
정치쇄신	(0.07)	0.15	0.93
국민통합	0.06	0.14	1.06
과거사	(0.14)	0.09	0.87
반노무현	0.05	0.09	1.05
NLL	0.22*	0.10	1.25
반HMB	(0.26)**	0.09	0.77
이정희발언	0.02	0.08	1.02
상수	4.78	2.59	118.94
R제곱	0.56		
적중률	81.4		
N	263		

<표 III -50> 문재인 투표 요인_40대 2 (자료 : KSDC)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36)	0.32	0.70	성	(0.47)	0.31	0.62	성	(0.38)	0.32	0.69
충청	0.31	0.51	1.37	충청	0.27	0.50	1.31	충청	0.62	0.51	1.85
호남	2.85**	0.70	17.27	호남	2.95**	0.71	19.19	호남	2.87**	0.66	17.69
TK	(0.36)	0.63	0.70	TK	(0.50)	0.62	0.61	TK	(0.29)	0.65	0.75
PK	(0.24)	0.47	0.79	PK	(0.54)	0.45	0.59	PK	(0.21)	0.46	0.81
학력	(0.02)	0.32	0.98	학력	(0.06)	0.31	0.94	학력	(0.18)	0.31	0.84
소득	0.06	0.06	1.06	소득	0.07	0.06	1.07	소득	0.07	0.06	1.07
이념	(0.38)**	0.09	0.69	이념	(0.43)**	0.09	0.65	이념	(0.43)**	0.09	0.65
전후반	(0.23)	0.32	0.79	전후반	(0.29)	0.32	0.75	전후반	(0.13)	0.32	0.88
이명박평 가	0.89**	0.26	2.43	국가경제 평가	0.62*	0.28	1.86	국가경제 전망	1.06*	0.45	2.87
생활형편	0.31	0.26	1.37	가계경제 평가	0.12	0.30	1.12	가계경제 전망	(0.01)	0.45	0.99
상수	(0.50)	2.34	0.61	상수	1.64	2.20	5.14	상수	0.66	2.25	1.93
R제곱	0.43			R제곱	0.39			R제곱	0.41		
적중률	78			적중률	75.9			적중률	76.4		
N	263			N	263			N	263		

◦ KSDC의 대선 사후데이터 분석에서도 지역 변수 만이 유의미했다. 호남거주자일수록 문재인 지지 가능성도 높았다. 그 외 학력, 소득 등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주관적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문재인 지지도 높았다. 종교의 영향이 일부 나타나 기독교신자일수록 문재인 투표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MB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문재인 지지 가능성도 높았다.

◦ 경제상황의 영향력을 평가한 <표 III -50>에 따르면 MB정부평가, MB정부 경제상황 평가(국가/가계), 경제전망(국가/가계) 중 MB정부하 국가경제상황 평가, 국가경제전망이 문재인 지지에 영향을 미쳤다. 즉, MB정부하 국가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향후 국가경제전망을 부정적으로 전망할수록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현재 가계의 경제형편은 후보 선택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앞서 분석한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데이터와 비교하면 지난 5년 국가경제상황평가의 영향력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40대에서 경제상황을 중심으로 한 회고투표는 문재인 후보에만 영향을 주었고, 박근혜 후보쪽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지난 대선의 주요 이슈들 중 40대의 문재인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은 후보 단일화, NLL논란, MB정부심판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후보단일화와 MB정부심판 이슈에 관심이 많을수록, NLL 이슈에 관심이 적을수록 문재인 지지가 높았다. 경제민주화 이슈는 40대에게 별 영향을 주지 못했음이 확인된다.

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데이터 분석

◦ 세 번째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데이터를 이용해 문재인 투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역변수와 성별 변수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즉, 40대 내에서는 호남거주자일수록, TK거주자가 아닐수록, 남성일수록 문재인 지지도 높았다. 그 외 학력, 소득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주관적 이념성향은 진보적일수록 문재인 지지 가능성도 높았다.

◦ 대선의 주요 프레임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박정희 vs 노무현 프레임, 후보단일화 프레임 효과가 확인되었는데, 두 프레임 모두 문재인 지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표 III -51> 문재인 투표 요인_40대 (자료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B	S.E.	Exp(B)
성	-1.09**	0.379	0.336
총청	-0.133	0.573	0.875
호남	21.052	7843.55	1389144256
TK	-2.792**	0.866	0.061
PK	-0.707	0.478	0.493
학력	0.024	0.441	1.024
소득	0.071	0.179	1.073
이념성향	-1.089**	0.257	0.337
자가소유	0.356	0.458	1.427
주관적계층	-0.018	0.26	0.983
프레임1 : 박정희 vs 노무현	-0.778**	0.221	0.459
프레임2 : 후보단일화	0.231	0.222	1.259
프레임3 : 여성대통령	0.114	0.244	1.121
프레임4 : 친노세력 평가	-0.984**	0.245	0.374
상수	7.392	2.382	1622.895
R제곱	0.577		
적중률	79.4		
N	271		

(3) 요약

◦ 40대의 투표에 영향을 준 요인은 지역변수(TK거주, 호남거주)였고 성별변수의 영향력이 일부 데이터에서 드러났다. 40대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선택이 엇갈려 여성일수록 박근혜 투표 가능성도 높았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 보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투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친노무현 정서와 아울러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되었다.

◦ 40대에서 경제요인은 제한적으로만 나타난다. 개인의 경제상황은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고 지난 5년 경제상황 평가에 입각한 회고투표는 문재인 지지에만 영향을 주는 등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박근혜 지지와는 무관했다. 즉, 40대 박근혜 투표층은 문재인 투표층에 비해 경제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경제요인의 영향력이 미비한 대신 후보의 당선가능성과 국정운영능력이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요인 모두 박근혜 지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슈에서는 20대와 마찬가지로 40대에서도 NLL논란의 영향력이 컸는데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된다. 경제민주화 이슈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5) 50대 투표 영향 요인 분석

(1) 50대 박근혜 투표 요인 분석

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데이터 분석

- 지난 대선에서 50대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살펴본 결과(<표 III-52>)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지역변수만이 유의미했다. 즉, 호남거주자가 아닐수록 박근혜 지지가 높게 나타났고, 소득, 학력 등 다른 요인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50대 전반과 후반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 기본모델에 이명박정부와 노무현정부에 대한 평가를 추가했을 때는, 두 변수 모두 영향을 미쳤다(<표 III-52>). 즉, 이명박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노무현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박근혜 지지가 높았다.
- 경제상황을 지난 5년 국가 및 가계 경제평가, 향후 국가 및 가계 경제전망, 5년전과 비교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소득격차 평가, 5년전과 비교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갈등 확산 평가로 구분해 50대에서 박근혜 투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표 III-53>) 경제요인 중 어떤 항목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50대에서 박근혜 투표자는 경제요인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투표했음을 시사한다.
- 한편, <표 III-52>와 <표 III-53>에 새누리당선호도와 민주당선호도 등 정당변수를 추가했을 때는 이명박, 노무현 정부 평가의 영향력도 사라졌다. 경제상황은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어떤 항목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경제요인 외 50대의 박근혜 지지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살펴보면 <표 III-54>와 같이 정책 및 공약, 당선가능성, 도덕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당선가능성을 중시할수록 정책 및 공약이나 도덕성은 고려하지 않을수록 박근혜 지지 가능성도 높았다.

<표 III-52> 박근혜 투표 요인_50대 1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11	0.36	1.11	성	0.25	0.41	1.29	성	0.13	0.49	1.14
충청	0.94	0.69	2.55	충청	1.30	0.76	3.68	충청	1.55	0.96	4.73
호남	(2.16)**	0.67	0.12	호남	(2.09)**	0.76	0.12	호남	(1.23)	0.89	0.29
TK	1.54	0.88	4.65	TK	1.52	0.95	4.59	TK	1.49	1.17	4.44
PK	0.06	0.46	1.06	PK	(0.14)	0.51	0.87	PK	0.82	0.62	2.27
학력	(0.40)	0.31	0.67	학력	(0.27)	0.33	0.76	학력	(0.69)	0.43	0.50
이념	(1.34)**	0.24	0.26	이념	(1.15)**	0.27	0.32	이념	(0.63)	0.32	0.54
소득	(0.09)	0.15	0.92	소득	(0.18)	0.17	0.84	소득	(0.24)	0.21	0.79
전후반	0.73	0.49	2.06	전후반	0.67	0.53	1.96	전후반	0.74	0.65	2.09
자가	0.46	0.39	1.58	자가	0.39	0.43	1.48	자가	(0.59)	0.55	0.55
상수	0.07	3.20	1.08	이명박 평가	0.41**	0.10	1.50	새누리당선호	0.13**	0.02	1.14
				노무현 평가	(0.32)**	0.12	0.72	민주당선호	(0.09)**	0.02	0.92
				상수	0.08	3.58	1.08	상수	5.01	4.59	150.03
R제곱	0.42			R제곱	0.54			R제곱	0.72		
적중률	79.5			적중률	83.4			적중률	89.8		
N	228			N	228			N	228		

<표 III-53> 박근혜 투표 요인_50대 2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04	0.37	1.04	성	0.01	0.37	1.01	성	0.12	0.37	1.13
충청	0.85	0.71	2.34	충청	0.94	0.71	2.56	충청	0.85	0.70	2.34
호남	(2.29)**	0.68	0.10	호남	(2.28)**	0.69	0.10	호남	(2.29)**	0.71	0.10
TK	1.57	0.92	4.82	TK	1.70*	0.86	5.46	TK	1.55	0.88	4.70
PK	(0.01)	0.47	0.99	PK	0.26	0.48	1.29	PK	0.01	0.47	1.01
학력	(0.37)	0.31	0.69	학력	(0.34)	0.32	0.71	학력	(0.38)	0.32	0.69
이념	(1.31)**	0.24	0.27	이념	(1.36)**	0.25	0.26	이념	(1.31)**	0.24	0.27
소득	(0.14)	0.16	0.87	소득	(0.13)	0.16	0.88	소득	(0.10)	0.16	0.91
전후반	0.77	0.50	2.17	전후반	0.75	0.50	2.13	전후반	0.72	0.50	2.06
자가	0.41	0.39	1.50	자가	0.37	0.40	1.44	자가	0.46	0.39	1.58
국가경제평가	(0.01)	0.24	0.99	가계경제전망	(0.57)	0.33	0.57	소득양극화	0.12	0.43	1.13
가계경제평가	(0.28)	0.27	0.76	국가경제전망	(0.15)	0.30	0.86	갈등심화	0.07	0.40	1.07
상수	1.64	3.51	5.16	상수	2.80	3.47	16.39	상수	(0.31)	3.30	0.74
R제곱	42.2			R제곱	0.44			R제곱	0.42		
적중률	79			적중률	80.9			적중률	78.4		
N	228			N	228			N	228		

<표 III -54> 박근혜 투표 요인_50대 3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성	0.33	0.42	1.39
충청	0.97	0.84	2.64
호남	(2.55)**	0.82	0.08
TK	2.48*	1.06	11.91
PK	(0.05)	0.51	0.95
학력	(0.60)	0.36	0.55
이념	(1.36)**	0.27	0.26
소득	(0.15)	0.17	0.87
전후반	0.63	0.55	1.87
자가	0.34	0.43	1.41
소속정당	(0.03)	0.09	0.98
정책과 공약	(0.32)*	0.16	0.73
당선가능성	0.49**	0.14	1.63
국정운영능력	0.26	0.21	1.30
도덕성	(0.54)**	0.20	0.59
후보이념성향	0.36*	0.16	1.43
상수	0.07	3.62	1.07
R제곱	0.55		
적중률	80.9		
N	228		

나. KSDC 데이터 분석

- KSDC의 대선 사후데이터 분석에서도 지역변수만이 유의미했다. 호남거주자가 아닐수록 박근혜 지지 가능성도 높았다. 그 외 학력, 소득 등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주관적 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박근혜 지지도 높았다. 또한 MB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박근혜 후보 투표가능성도 높았다.
- 경제상황의 영향력을 평가한 <표 III -57>에 따르면 MB정부평가, MB정부 경제상황 평가(국가/가계), 경제전망(국가/가계) 중 어떤 항목도 박근혜 지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현재 가계의 경제형편 역시 후보 선택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앞서 분석한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데이터와 동일하게 경제변수의 영향력이 미미했다.
- 경제요인 외 지난 대선의 주요 이슈들 중 50대의 박근혜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은 복지확대, 후보단일화, 과거사논란, 노무현정부부활저지, NLL논란, 이정희 발언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확대, 노무현정부부활저지, NLL논란, 이정희발언 등에 관심이 높을수록, 후보단일화, 과거사논란에 관심이 적을수록 박근혜 지지가 높았다. 특히 50대에서 NLL 이슈가 박근혜 지지에 가장 중요한 이슈였음이 확인되었다.

<표 III -55> 박근혜 투표 요인_50대 1 (자료 : KSDC)

	B	S.E.	Exp(B)
성	0.25	0.34	1.29
충청	0.54	0.54	1.71
호남	(3.01)**	0.85	0.05
TK	1.25	0.70	3.49
PK	0.11	0.46	1.11
학력	(0.03)	0.32	0.97
소득	(0.04)	0.06	0.96
이념	0.47**	0.10	1.60
전후반	0.34	0.37	1.41
기독교	0.11	0.43	1.11
천주교	(0.00)	0.42	1.00
불교	0.68	0.69	1.98
상수	(5.20)	3.18	0.01
R제곱	0.37		
적중률	76.1		
N	228		

	B	S.E.	Exp(B)
성	(0.17)	0.46	0.84
충청	0.50	0.78	1.65
호남	(2.78)**	0.92	0.06
TK	2.24	1.23	9.36
PK	(0.32)	0.56	0.73
학력	(0.32)	0.42	0.73
소득	0.05	0.08	1.05
이념	0.30*	0.14	1.36
전후반	0.22	0.51	1.25
경제민주화	0.07	0.17	1.07
복지확대	(0.30)*	0.14	0.74
후보단일화	0.46**	0.14	1.59
정치채신	(0.06)	0.18	0.94
국민통합	0.07	0.18	1.07
과거사	0.31*	0.13	1.37
반노무현	(0.30)*	0.13	0.74
NLL	(0.38)**	0.14	0.69
반MB	0.14	0.14	1.15
이정희발언	(0.34)**	0.11	0.71
상수	(1.15)	4.36	0.32
R제곱	0.67		
적중률	84.9		
N	228		

<표 III -56> 박근혜 투표 요인_50대 2 (자료 : KSDC)

	B	S.E.	Exp(B)
성	0.22	0.34	1.25
충청	0.84	0.58	2.32
호남	(3.15)**	0.88	0.04
TK	1.28	0.72	3.59
PK	0.23	0.45	1.26
학력	(0.05)	0.33	0.95
소득	(0.07)	0.06	0.94
이념	0.40**	0.10	1.49
전후반	0.28	0.38	1.32
이명박 평가	(0.79)**	0.26	0.46
생활형편	(0.09)	0.26	0.91
상수	(1.44)	3.46	0.24
R제곱	0.41		
적중률	77.1		
N	228		

	B	S.E.	Exp(B)
성	0.34	0.35	1.40
충청	0.66	0.57	1.92
호남	(3.21)**	0.86	0.04
TK	1.06	0.71	2.88
PK	0.10	0.46	1.10
학력	0.01	0.33	1.01
소득	(0.08)	0.06	0.93
이념	0.42**	0.10	1.53
전후반	0.31	0.38	1.36
국가경제평가	(0.47)	0.33	0.63
가계경제평가	(0.50)	0.36	0.60
상수	(1.52)	3.44	0.22
R제곱	0.41		
적중률	73.6		
N	228		

	B	S.E.	Exp(B)
성	0.47	0.37	1.60
충청	0.16	0.58	1.18
호남	(3.14)**	0.92	0.04
TK	0.66	0.73	1.94
PK	(0.04)	0.49	0.96
학력	0.09	0.34	1.09
소득	(0.03)	0.07	0.97
이념	0.42**	0.11	1.53
전후반	0.44	0.41	1.56
국가경제전망	(0.91)	0.50	0.40
가계경제전망	(0.76)	0.54	0.47
상수	(2.34)	3.49	0.10
R제곱	0.50		
적중률	78.4		
N	228		

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데이터 분석

- 세 번째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데이터를 이용해 박근혜 투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역변수, 주관적 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즉, 50대 내에서는 호남지역 거주자가 아닐수록 박근혜 지지도 높았다. 주관적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박근혜 투표 가능성도 높았다. 그 외 학력, 소득 변수는 무의미했다. 주관적 이념성향은 보수적일수록 박근혜 지지 가능성도 높았다.
- 대선의 주요 프레임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여성대통령 프레임, 후보단일화 프레임 효과가 확인되었는데, 여성대통령 프레임은 박근혜 투표에 긍정적으로, 후보단일화 프레임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표 III-57> 박근혜 투표 요인_50대 (자료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B	S.E.	Exp(B)
성	0.477	0.449	1.611
충청	-0.419	0.785	0.658
호남	-3.421**	0.88	0.033
TK	-0.414	0.75	0.661
PK	0.265	0.633	1.304
학력	-0.596	0.402	0.551
소득	-0.211	0.194	0.81
이념성향	1.245**	0.32	3.473
자기소유	-0.368	0.594	0.692
주관적계층	-0.579	0.303	0.561
프레임1 : 박정희 vs 노무현	0.223	0.24	1.25
프레임2 : 후보단일화	-0.724	0.306	0.485
프레임3 : 여성대통령	-0.237	0.279	0.789
프레임4 : 친노세력 평가	0.787**	0.277	2.196
상수	1.779	2.546	5.924
R제곱	0.532		
적중률	82.4		
N	246		

(2) 50대 문재인 투표 요인 분석

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데이터 분석

- 지난 대선에서 50대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살펴본 결과(<표 III-58>)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지역변수만이 유의미했다. 즉, 호남거주자일수록, TK거주자가 아닐수록 문재인 지지가 높게 나타났고, 소득, 학력 등 다른 요인의 영향력은 미미

했다. 주관적 이념성향은 진보적일수록 문재인 지지 가능성이 높았다. 50대 전반과 후반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 기본모델에 이명박정부와 노무현정부에 대한 평가를 추가했을 때는, 두 변수 모두 영향을 미쳤다(<표 III-58>). 즉, 이명박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노무현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문재인 지지가 높았다. 두 변수의 영향력은 비슷했다.
- 경제상황을 지난 5년 국가 및 가계 경제평가, 향후 국가 및 가계 경제전망, 5년전과 비교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격차 평가, 5년전과 비교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갈등 평가로 구분해 50대에서 문재인 투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표 59>) 경제요인의 영향력이 미미했다.
- 한편, <표 III-58>과 <표 III-59>에 새누리당 선호도와 민주당 선호도 등 정당변수를 추가했을 때는 이명박, 노무현 정부 평가의 영향력도 사라졌다. 경제상황은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어떤 항목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경제요인 외 50대의 문재인 지지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살펴보면 <표 III-60>와 같이 후보의 당선가능성과 도덕성, 이념성향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50대에서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는 도덕성을 고려했고 당선가능성이나 후보의 이념성향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III -58> 문재인 투표 요인_50대 1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28)	0.37	0.76	성	(0.51)	0.42	0.60	성	(0.45)	0.52	0.64
충청	(0.71)	0.69	0.49	충청	(1.10)	0.77	0.33	충청	(1.29)	0.98	0.27
호남	2.37**	0.67	10.67	호남	2.26**	0.77	9.61	호남	1.60	0.91	4.96
TK	(2.23)*	1.14	0.11	TK	(2.41)*	1.21	0.09	TK	(3.04)	1.73	0.05
PK	0.15	0.47	1.16	PK	0.42	0.53	1.52	PK	(0.49)	0.66	0.61
학력	0.37	0.32	1.45	학력	0.25	0.35	1.28	학력	0.71	0.45	2.02
이념	1.34**	0.24	3.83	이념	1.19**	0.28	3.29	이념	0.63	0.34	1.89
소득	0.07	0.16	1.07	소득	0.16	0.17	1.17	소득	0.21	0.23	1.23
전후반	(0.89)	0.51	0.41	전후반	(0.93)	0.54	0.40	전후반	(1.12)	0.69	0.33
자가	(0.40)	0.40	0.67	자가	(0.38)	0.45	0.69	자가	0.71	0.58	2.03
상수	(0.16)	3.29	0.85	이명박 평가	(0.39)**	0.10	0.68	새누리 당선호	(0.14)**	0.02	0.87
				노무현 평가	0.39**	0.13	1.48	민주당 선호	0.10**	0.02	1.10
				상수	(0.18)	3.71	0.83	상수	(5.31)	4.80	0.01
R제곱	0.44			R제곱	0.58			R제곱	0.75		
적중률	82.2			적중률	83.9			적중률	89.3		
N	228			N	228			N	228		

<표 III -59> 문재인 투표 요인_50대 2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18)	0.38	0.83	성	(0.19)	0.39	0.83	성	(0.27)	0.38	0.76
충청	(0.59)	0.71	0.56	충청	(0.67)	0.70	0.51	충청	(0.68)	0.70	0.51
호남	2.55**	0.69	12.76	호남	2.49**	0.69	12.00	호남	2.39**	0.71	10.88
TK	(2.43)*	1.21	0.09	TK	(2.33)*	1.13	0.10	TK	(2.25)*	1.15	0.11
PK	0.23	0.48	1.26	PK	(0.05)	0.49	0.95	PK	0.17	0.47	1.19
학력	0.34	0.32	1.40	학력	0.31	0.33	1.36	학력	0.37	0.32	1.45
이념	1.33**	0.25	3.77	이념	1.35**	0.25	3.84	이념	1.33**	0.25	3.77
소득	0.14	0.17	1.16	소득	0.11	0.16	1.12	소득	0.07	0.16	1.07
전후반	(0.99)	0.52	0.37	전후반	(0.91)	0.52	0.40	전후반	(0.88)	0.51	0.42
자가	(0.33)	0.40	0.72	자가	(0.31)	0.41	0.73	자가	(0.39)	0.40	0.68
국가경제평 가	(0.06)	0.25	0.94	가계경제 전망	0.52	0.34	1.68	소득양극 화	(0.10)	0.45	0.90
가계경제평 가	0.43	0.28	1.53	국가경제 전망	0.20	0.31	1.22	갈등심화	0.04	0.42	1.04
상수	(2.31)	3.65	0.10	상수	(2.87)	3.56	0.06	상수	(0.13)	3.40	0.88
R제곱	0.45			R제곱	0.47			R제곱	0.44		
적중률	81			적중률	82.9			적중률	81.9		
N	228			N	228			N	228		

<표 III -60> 문재인 투표 요인_50대 3 (자료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B	S.E.	Exp(B)
성	(0.53)	0.42	0.59
충청	(0.64)	0.79	0.53
호남	2.66**	0.79	14.32
TK	(2.87)*	1.28	0.06
PK	0.29	0.51	1.33
학력	0.52	0.36	1.68
이념	1.33**	0.26	3.78
소득	0.10	0.17	1.10
전후반	(0.73)	0.55	0.48
자가	(0.31)	0.43	0.74
소속정당	(0.01)	0.09	0.99
정책과 공약	0.23	0.15	1.25
당선가능성	(0.30)**	0.12	0.74
국정운영능력	(0.23)	0.22	0.80
도덕성	0.57**	0.20	1.77
후보이념성향	(0.39)*	0.16	0.68
상수	(0.58)	3.67	0.56
R제곱	0.53		
적중률	81.4		
N	228		

나. KSDC 데이터 분석

○ KSDC의 대선 사후데이터 분석에서도 지역 변수 만이 유의미했다. 호남거주자일수록 문재인 지지 가능성도 높았다. 그 외 학력, 소득 등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주관적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문재인 지지도 높았다. MB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문재인 지지 가능성도 높았다.

○ 경제상황의 영향력을 평가한 <표 III -62>에 따르면 MB정부평가, MB정부 경제상황 평가(국가/가계), 경제전망(국가/가계) 중 MB정부하 가계경제상황 평가만이 문재인 지지에 영향을 미쳤다. 즉, MB정부하 가계경제상황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층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현재 가계의 경제형편은 후보 선택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50대에게 경제요인의 영향력은 미미했고 문재인 후보선택에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주었는데, MB정부하 국가경제상황이 아닌 가계경제상황이 평가 기준이 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지난 대선의 주요 이슈들 중 50대의 문재인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은 후보 단일화, 과거사 논란, 노무현정부부활저지, 이정희발언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후보단일화와 과거사논란에 관심이 높을수록, 노무현정부부활저지와 이정희발언에 관

심이 낮을수록 문제인 지지가 높았다. 경제민주화 이슈는 40대와 마찬가지로 50대에게도 별 영향을 주지 못했음이 확인된다.

<표 III-61> 문제인 투표 요인_50대 1 (자료 : KSCD)

	B	S.E.	Exp(B)
성	(0.35)	0.36	0.71
충청	(0.45)	0.57	0.64
호남	2.86**	0.77	17.49
TK	(1.43)	0.81	0.24
PK	(0.35)	0.49	0.71
학력	0.21	0.34	1.23
소득	0.02	0.06	1.02
이념	(0.52)**	0.11	0.60
전후반	(0.04)	0.39	0.96
기독교	0.03	0.44	1.04
천주교	(0.10)	0.44	0.90
불교	(0.68)	0.74	0.51
상수	2.79	3.27	16.29
R제곱	0.39		
적중률	76.5		
N	228		

	B	S.E.	Exp(B)
성	(0.04)	0.46	0.96
충청	(1.04)	0.83	0.35
호남	2.50**	0.81	12.14
TK	(4.18)**	1.69	0.02
PK	0.11	0.58	1.12
학력	0.16	0.43	1.17
소득	(0.03)	0.09	0.97
이념	(0.26)*	0.14	0.77
전후반	(0.02)	0.52	0.98
경제민주화	(0.09)	0.18	0.91
복지확대	0.26	0.15	1.30
후보단일화	(0.54)**	0.15	0.58
정치체신	(0.04)	0.18	0.96
국민통합	(0.20)	0.19	0.82
과거사	(0.40)**	0.14	0.67
반노무현	0.49**	0.15	1.64
NLL	0.24	0.14	1.27
반HMB	(0.02)	0.14	0.98
이정희발언	0.37**	0.13	1.45
상수	0.32	4.40	1.38
R제곱	0.67		
적중률	84.9		
N	228		

<표 III-62> 문제인 투표 요인_50대 2 (자료 : KSCD)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	(0.32)	0.36	0.73	성	(0.40)	0.37	0.67	성	(0.54)	0.38	0.58
충청	(0.85)	0.62	0.43	충청	(0.60)	0.61	0.55	충청	(0.02)	0.61	0.98
호남	2.95**	0.80	19.18	호남	3.03**	0.75	20.65	호남	2.88**	0.81	17.84
TK	(1.51)	0.84	0.22	TK	(1.20)	0.83	0.30	TK	(0.87)	0.85	0.42
PK	(0.53)	0.49	0.59	PK	(0.41)	0.51	0.66	PK	(0.28)	0.53	0.76
학력	0.28	0.35	1.33	학력	0.23	0.34	1.26	학력	0.12	0.35	1.12
소득	0.05	0.07	1.05	소득	0.06	0.07	1.06	소득	0.01	0.07	1.01
이념	(0.44)**	0.11	0.65	이념	(0.49)**	0.12	0.61	이념	(0.46)**	0.12	0.63
전후반	0.07	0.40	1.07	전후반	(0.01)	0.39	0.99	전후반	(0.04)	0.42	0.97
이명박 평가	0.93**	0.29	2.54	국가경 제평가	0.29	0.34	1.33	국가경 제전망	0.99	0.52	2.69
생활형 편	0.09	0.29	1.10	가계경 제평가	0.79*	0.39	2.19	가계경 제전망	0.57	0.56	1.77
상수	(1.94)	3.66	0.14	상수	(1.34)	3.60	0.26	상수	(0.79)	3.58	0.46
R제곱	0.44			R제곱	0.44			R제곱	0.51		
적중률	79			적중률	75.9			적중률	83.6		
N	228			N	228			N	228		

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데이터 분석

<표 III-63> 문제인 투표 요인_50대 (자료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B	S.E.	Exp(B)
성	-0.569	0.469	0.566
충청	0.691	0.797	1.997
호남	3.274**	0.815	26.42
TK	-0.453	0.931	0.636
PK	0.054	0.643	1.055
학력	0.875*	0.432	2.4
소득	0.126	0.201	1.135
이념성향	-1.176**	0.321	0.309
자가소유	0.5	0.612	1.649
주관적계층	0.49	0.312	1.633
프레임1 : 박정희 vs 노무현	-0.195	0.246	0.823
프레임2 : 후보단일화	0.816*	0.32	2.263
프레임3 : 여성대통령	0.242	0.295	1.274
프레임4 : 친노세력 평가	-0.918**	0.282	0.399
상수	-2.144	2.66	0.117
R제곱	0.545		
적중률	83.7		
N	246		

○ 세 번째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데이터를 이용해 문제인 투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역변수와 주관적경제적지위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호남거주자일수록, 주관적경제적지위가 낮을수록 문제인 지지 가능성도 높았다. 그리고 주관적 이념성향은 진보적일수록 문제인 지지 가능성도 높았다.

○ 대선의 주요 프레임 중에서 후보단일화는 긍정적으로, 친노세력 평가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3) 요약

○ 50대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준 변수는 일부 지역변수(호남거주)였고 일부 데이터에서 주관적 경제적 지위 변수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즉 주관적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낮을수록 문제인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50대에서 제한적이거나 계층투표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50대에서 경제요인은 투표 선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박근혜 투표자는 경제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인 후보선택에서만

일부 나타났는데, MB정부가 가계경제상황이 평가 기준이 되었다. 즉 가계경제가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층에서 문재인 지지 가능성이 높았다. 50대에서는 양극화나 국가경제위기 등을 공략하기 보다 가계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공략하고 이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어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경제요인 외 50대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준 이슈로 후보단일화, 노무현정부부활저지, 이정희발언 등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노무현정부부활저지와 이정희발언은 박근혜 후보쪽에는 유리하게 문재인 후보쪽에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50대에게 경제민주화 이슈는 40대와 마찬가지로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4. 세대내부 심층 분석

1) 세대간 차이에 대한 심층 분석

- 이 장에서는 세대갈등이 두드러진 지난 대선에서 세대별로 정치의식, 정책태도, 경제인식 등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났는지 살펴볼 것이다.
- 먼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진단 및 정치적 태도, 역대 정부 인식에 대해 세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집단평균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표 III-64> <표 III-65>) 현재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진단, 정치이해도(“나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등에서만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진단하고 있었으며, 나이가 적을수록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 평균은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수준이었다. “나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20대와 60대 이상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고, 30대, 40대, 50대에서는 이보다 낮았다. 그 외 정치효능감, 정치행정에 대한 인식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정치나 행정에 대해 나보다 잘 알고 있다”) 등에서는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 노무현, 이명박정부에 대한 평가에서도 세대별 차이가 확인했고 유의미했다. 이명박 정부 평가는 30대와 40대에서 특히 낮았고, 다음으로 1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부정적이었다.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에 3.73으로 상당히 낮았다. 노무현 정부 평가는 전체 평균 4.97로 중간 수준이었으며 20대와 30대가 가장 높고 고연령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세대별로 확연히 갈리었고, 이 대목이 투표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된다. 두 정부에 대한 평가가 가장 갈리는 세대는 30대 > 2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나 50대 이상에서는 두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 -64> 정치 의식 및 태도 : 세대별

응답자연령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잘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영향도 주지 어렵다"	"정부는 나 같은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이 없다"	"나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정치나 행정에 대해 나보다 잘 알고 있다"
19-29세	평균	5.44	2.51	2.51	3.02	2.82
	N	217	217	215	217	217
	표준편차	1.919	1.081	1.004	0.828	0.818
30-39세	평균	5.8	2.53	2.41	2.81	2.82
	N	245	244	244	245	244
	표준편차	1.79	0.999	0.984	0.857	0.798
40-49세	평균	5.85	2.59	2.49	2.8	2.78
	N	265	265	263	264	263
	표준편차	1.831	0.954	0.92	0.811	0.706
50-59세	평균	6.11	2.56	2.57	2.75	2.82
	N	227	225	225	223	224
	표준편차	1.748	1.054	1.015	0.898	0.833
60세이상	평균	6.34	2.36	2.43	3.02	2.68
	N	246	246	246	246	246
	표준편차	1.723	0.945	0.981	0.976	0.752
합계	평균	5.91	2.51	2.48	2.88	2.78
	N	1200	1197	1193	1195	1194
	표준편차	1.824	1.006	0.979	0.882	0.78

자료 : 서울대 정치학과 한국정치연구소 (이하 동일)

**p<0.01, *p<0.05, 이하 동일

<표 III -65> 이명박, 노무현 정부 평가 : 세대별

응답자연령		이명박 국정운영 평가**	노무현 국정운영 평가**
19-29세	평균	3.59	5.34
	N	217	217
	표준편차	2.073	1.911
30-39세	평균	3.26	5.3
	N	245	245
	표준편차	1.982	1.956
40-49세	평균	3.35	5
	N	265	265
	표준편차	2.098	2.025
50-59세	평균	4.21	4.72
	N	227	227
	표준편차	2.197	1.951
60세이상	평균	4.32	4.49
	N	246	246
	표준편차	2.265	2.129
합계	평균	3.73	4.97
	N	1200	1200
	표준편차	2.167	2.022

○ 지난 대선의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세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III-66> <표 III-67>와 같다. 정치/대북 이슈는 대부분 보수쪽으로 기울었다. 한미동맹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대북지원 이슈 모두 보수의견이 우세했다. 경제관련 이슈는 한미FTA재협상, 비정규직문제, 고소득자세금확대, 철도 등 공기업민영화 등 대부분의 이슈에서 진보쪽 우세로 나타났다. 사회문화관련 이슈는 보수쪽이 대체로 우세해 학교체벌허용, 대체복무제, 사형제폐지 이슈는 보수쪽 우세로 나타났고, 집회 및 시위 최대한 보장 이슈만 진보쪽 우세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경제이슈에서는 진보쪽이 우세하지만 정치/대북 이슈, 사회문화 이슈에서는 다소 보수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세대별로는, 한미동맹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FTA재협상, 경제성장보다 복지주력, 학교 체벌 허용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미동맹강화는 평균 2.4점으로 찬성이 약간 우세했으며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세대별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 평균 2.68로 세대에 관계없이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한미FTA재협상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30대 > 20대 > 40대와 50대 순으로 찬성이 높았다. 지난 대선의 핵심 이슈였던 경제성장보다 복지주력 이슈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은 2.42로 찬성 의견이 다소 우세한 편이었다. 다만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층에서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으며 전 세대 중 50대에서 반대 의견이 가장 높았다. 50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수반한 복지를 보여주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사회문화분야 정책이슈인 학교체벌 허용 이슈에 대해서는 찬성이 높은 가운데, 반대 의견은 30대와 40대> 20대> 50대 >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대북 지원확대,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 자율, 고소득자 세금 확대, 철도 등 공기업 민영화, 대체복무제허용, 사형제 폐지, 집회 및 시위 자유 최대한 보장 등의 정책 이슈에서는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경제이슈는 전반적으로 진보쪽에 우세한 이슈였고, 세대별로도 차이가 확연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등에서 박근혜 후보쪽이 오히려 이슈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경제이슈가 변별성을 상실했다. 오히려 NLL같은 안보이슈가 부각되면서 박근혜 후보측이 전체 정책이슈 지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III -66> 주요 정책이슈 평가 1 : 세대별

응답자연령		한미동맹강화 **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FTA 제 협상**	대북 지원확 대	경제성장보다 복지 주력**	비정규직 문 제는 기업 자 율
19-29세	평균	2.18	2.61	2	2.74	2.3	2.71
	N	217	216	217	217	217	216
	표준편차	0.643	0.764	0.653	0.762	0.793	0.852
30-39세	평균	2.17	2.58	2.08	2.82	2.38	2.73
	N	245	244	243	245	244	244
	표준편차	0.66	0.779	0.654	0.791	0.835	0.85
40-49세	평균	2.06	2.61	2.06	2.76	2.38	2.72
	N	265	264	263	264	264	264
	표준편차	0.666	0.824	0.747	0.818	0.814	0.808
50-59세	평균	1.92	2.76	2.27	2.83	2.58	2.63
	N	226	226	226	226	226	224
	표준편차	0.59	0.835	0.718	0.819	0.802	0.751
60세이상	평균	1.9	2.84	2.22	2.84	2.47	2.61
	N	246	244	245	245	246	245
	표준편차	0.609	0.762	0.682	0.776	0.756	0.773
합계	평균	2.04	2.68	2.12	2.8	2.42	2.68
	N	1199	1194	1194	1197	1197	1193
	표준편차	0.645	0.799	0.699	0.794	0.805	0.808

* 매우 찬성 1, 매우 반대 4

<표 III -67> 주요 정책이슈 평가 2 : 세대별

응답자연령		고소득자 세금 확대	철도 등 공 기업 민영 화	학교 체벌 허용**	대체복무 제허용	사형제 폐 지	집회 및 시위 자유 최대한 보 장
19-29세	평균	1.63	2.71	2.14	2.88	2.98	1.94
	N	217	217	217	217	217	217
	표준편차	0.722	0.898	0.753	0.805	0.844	0.628
30-39세	평균	1.54	2.63	2.24	2.81	3.1	2.08
	N	245	242	245	243	244	245
	표준편차	0.704	0.884	0.732	0.876	0.865	0.708
40-49세	평균	1.52	2.73	2.23	2.91	3.13	1.99
	N	264	263	264	263	264	263
	표준편차	0.647	0.911	0.716	0.858	0.928	0.677
50-59세	평균	1.51	2.66	2.09	2.93	2.97	2.26
	N	226	225	227	226	227	225
	표준편차	0.653	0.824	0.745	0.852	0.929	0.671
60세이상	평균	1.57	2.71	2.03	2.92	3.12	2.33
	N	246	244	246	246	245	246
	표준편차	0.732	0.754	0.622	0.801	0.915	0.719
합계	평균	1.55	2.69	2.15	2.89	3.06	2.12
	N	1198	1191	1199	1195	1197	1196
	표준편차	0.692	0.856	0.718	0.84	0.899	0.698

1: 매우 찬성, 4: 매우 반대

- 세대별 정당호감도를 비교분석한 결과(<표 III -68>) 새누리당에 대해서만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민주당과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새누리당 호감도 평균은 53.78, 민주당 호감도 평균은 51.49로 새누리당이 근소하게 높지만, 새누리당에 대한 평가는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이 대비되었다. 20대 > 30대 > 40대 순으로 새누리당 호감도가 낮았다. 반면 민주통합당 호감도는 40대와 60대 이상에서 가장 낮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III -68> 정당 호감도 : 세대별

응답자연령		새누리당 호 감도**	민주통합당 호감도	통합진보당 호감도	진보정의당 호감도
19-29세	평균	46.33	55.01	39.96	34.88
	N	217	217	217	217
	표준편차	20.251	15.885	19.521	19.318
30-39세	평균	48.27	52.96	37.84	31.27
	N	245	245	245	245
	표준편차	22.327	16.856	20.534	19.592
40-49세	평균	49.25	49.88	32.18	26.36
	N	265	265	265	265
	표준편차	22.622	18.179	21.351	20.204
50-59세	평균	61.96	52.16	33.38	27.47
	N	227	227	227	227
	표준편차	66.357	65.577	67.242	67.412
60세이상	평균	63.2	48.06	33.73	35.58
	N	246	246	246	246
	표준편차	20.387	18.071	64.445	108.729
합계	평균	53.78	51.49	35.29	31
	N	1200	1200	1200	1200
	표준편차	35.42	32.544	44.321	59.343

- 세대별로 최우선 중시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분야별 정부지출이 확대되어야 하는지 축소되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표 III -69>) 교육, 실업급여, 국방, 노인연금 등에서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분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대 > 40대 > 20대 순으로 높았고 실업급여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대 > 30대 > 50대 순으로 높았다. 국방분야는 고연령으로 갈수록 확대 의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30대가 가장 적었다. 노인연금은 고연령으로 갈수록 높았다. 20대는 실업급여 등 고용관련 분야, 30대와 40대는 교육, 50대와 60대는 노인연금 등을 최우선 정책으로 보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III -69> 주요 분야별 정부지출 확대/축소 의견 : 세대별

응답자연령		보건/의료비	교육**	실업급여**	국방**	노인연금**	기업과 산업	경찰 및 치안	복지
19-29세	평균	2.6	2.5	2.73	2.8	2.75	2.92	2.48	2.42
	N	215	215	214	212	212	211	212	213
	표준편차	0.736	0.767	0.855	0.837	0.871	0.891	0.775	0.857
30-39세	평균	2.57	2.36	2.91	2.92	2.75	3.03	2.6	2.37
	N	241	243	239	241	241	237	239	243
	표준편차	0.799	0.833	0.838	0.791	0.865	0.789	0.737	0.845
40-49세	평균	2.7	2.47	3.04	2.74	2.68	3.05	2.56	2.44
	N	263	264	262	262	261	262	262	264
	표준편차	0.845	0.854	0.784	0.831	0.856	0.847	0.764	0.908
50-59세	평균	2.69	2.75	2.99	2.69	2.61	2.94	2.66	2.66
	N	225	226	226	225	221	223	223	226
	표준편차	0.824	0.794	0.769	0.785	0.784	0.802	0.769	0.845
60세이상	평균	2.62	2.81	3	2.56	2.37	2.96	2.6	2.43
	N	241	240	234	241	245	235	241	243
	표준편차	0.789	0.746	0.747	0.761	0.755	0.674	0.674	0.709
합계	평균	2.63	2.58	2.94	2.74	2.63	2.98	2.58	2.46
	N	1185	1188	1175	1181	1184	1166	1177	1189
	표준편차	0.802	0.819	0.804	0.809	0.839	0.818	0.745	0.84

* 지금보다 매우 더 많이 지출 1, 지금보다 매우 더 적게 지출 5.

- 지난 대선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로 어떻게 상이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집단평균 분석을 시도했다(<표 III -70>). 대체로 지난 5년에 대한 국가/가계경제 평가가 향후 5년 국가/가계 경제 전망 보다 훨씬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5년전과 비교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격차나 갈등확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 이 중 지난 5년 국가경제상태 평가, 향후 5년 국가경제전망,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격차 5년 전과 비교는 세대별로 평가가 상이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가계경제보다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에서 세대별 차이가 뚜렷하며, 소득격차확대에 대한 인식도 세대별로 인식이 뚜렷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5년 국가경제상태 평가에 대해서는 40대 > 30대 > 50대 > 60대 > 20대 순으로 평가가 부정적이었다. 향후 5년 경제상태 전망에 대해서는 60대 > 50대 > 30대 > 40대 > 20대 순으로 긍정적이었다. 5년전과 비교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격차에 대해서는 40대 > 50대 > 30대 > 60대 > 20대 순으로 확대되었다는 비판적 평가가 높았다. 대체로 40대에서 경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 III -70> 경제 평가 : 세대별

응답자연령		지난 5년 국가경제상태 평가**	지난 5년 가계경제상태 평가	향후 5년 가계경제전망	향후 5년 국가경제전망**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격차 5년 전과 비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갈등 5년 전과 비교
19-29세	평균	3.62	3.33	2.7	2.74	1.86	2.06
	N	217	217	217	217	217	217
	표준편차	0.905	0.72	0.799	0.811	0.659	0.701
30-39세	평균	3.8	3.33	2.66	2.55	1.84	2
	N	245	245	245	245	245	245
	표준편차	0.868	0.791	0.847	0.775	0.641	0.659
40-49세	평균	3.85	3.49	2.63	2.56	1.69	1.89
	N	265	265	265	265	265	265
	표준편차	0.854	0.808	0.792	0.824	0.61	0.649
50-59세	평균	3.7	3.44	2.63	2.48	1.8	1.92
	N	226	226	225	225	225	225
	표준편차	0.86	0.814	0.702	0.738	0.689	0.72
60세이상	평균	3.66	3.45	2.71	2.47	1.89	2.01
	N	246	246	246	246	245	245
	표준편차	0.782	0.728	0.69	0.701	0.699	0.69
합계	평균	3.73	3.41	2.67	2.56	1.81	1.97
	N	1199	1199	1198	1198	1197	1197
	표준편차	0.856	0.776	0.768	0.776	0.662	0.684

*경제평가, 경제전망은 1. 매우 긍정 5. 매우 부정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격차와 갈등 평가는 1. 매우 부정, 5. 매우 긍정

- 지난 대선의 핵심 정책이슈였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어느 후보의 공약이 더 나은지 평가한 결과(<표 III -71>의 교차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박근혜 응답이 우세했으며 2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대에서 박근혜 응답이 우세했다. 박근혜 후보에 비판적이면서 경제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30대와 40대에서도 박근혜 응답이 높아 경제민주화 이슈를 박근혜 후보가 주도했음이 확인된다.
- 세대별로 주요 정치정보를 획득하는 경로가 어떻게 상이한지 교차분석한 결과, 모든 세대에서 TV토론회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20대는 인터넷과 SNS, 30대는 TV 및 라디오 방송연설, 인터넷과 SNS 등으로 고루 분포되었다. 40대 이상에서는 TV 및 라디오 방송연설, 신문이나 방송 광고 등이 고루 분포했고 고연령으로 갈수록 인터넷과 SNS 이용이 현격히 감소했다. SNS 사용 여부는 세대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표 III -73>) 저연령층으로 갈수록 활발히 이용했고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는 이용비율이 매우 낮았다.

○ 대선 투표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건을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표 Ⅲ-74>) 모든 세대에서 TV 토론에서 드러난 후보역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40대 이하에서는 안철수 전 교수의 문재인 후보 지원이, 50대 이상에서는 여성대통령론이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세대별로 차이가 확인됐다. 여성대통령론은 박근혜 후보측의 아젠다로 50대 이상 연령층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문재인 후보측이 주도한 아젠다 중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1> 경제 민주화 공약 더 나은 후보 : 세대별

	박근혜	문재인	별 차이없다
20대	18.4%	33.6%	47.9%
30대	29.8%	27.8%	42.0%
40대	34.0%	24.5%	41.5%
50대	52.4%	19.4%	28.2%
60대	55.3%	13.8%	30.9%
전체	38.2%	23.7%	38.1%

유의확률 : P<0.01, 카이자승=102.021

<표 Ⅲ-72> 주요 정치정보 획득 경로 : 세대별

	① TV 토론회	② TV 및 라디오 방송연설	③ 신문이나 방송광고	④ 선거벽보	⑤ 선관위 발송 선거공보	⑥ 거리연설 및 유세	⑦ 각 정당 의원 현수막	⑧ 후보자 경력방송	⑨ 인터넷과 SNS
20대	59.0%	14.7%	4.6%	0.5%	0.5%	1.4%		0.9%	18.0%
30대	65.7%	13.1%	5.7%	2.0%	1.2%	2.0%	0.4%	0.8%	7.8%
40대	65.7%	15.5%	6.8%	0.4%	1.1%	2.3%	0.8%	3.0%	4.2%
50대	69.6%	16.7%	6.2%		1.8%	1.3%		0.9%	2.6%
60대	66.9%	17.1%	7.3%	1.2%	1.6%	2.4%		1.6%	
전체	65.5%	15.4%	6.2%	0.8%	1.3%	1.9%	0.3%	1.5%	6.3%

유의확률 : P<0.01, 카이자승=102.824

<표 Ⅲ-73> SNS 사용 여부 : 세대별

	①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② 계정은 있지만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③ 일주일에 1-2일	④ 일주일에 3-4일	⑤ 거의 매일
20대	15.7%	15.2%	19.8%	9.2%	40.1%
30대	36.7%	25.7%	17.1%	9.0%	11.4%
40대	59.6%	16.6%	17.4%	2.3%	4.2%
50대	73.1%	12.8%	10.6%	0.9%	2.2%
60대	94.7%	1.6%	1.6%	0.8%	1.2%
전체	56.8%	14.4%	13.3%	4.3%	11.2%

유의확률 : P<0.01, 카이자승=502.731

<표 Ⅲ-74> 대선 투표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건 : 세대별

	① 북한의 정거리 로켓 발사	② 국정원 여직원 사건	③ 안철수 전 교수의 문재인 후보 지원	④ 이정희 전 대표의 대선후보 사퇴	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발언	⑥ 여성 대통령론	⑦ TV 토론에서 드러난 후보역량	⑧ SNS 불법선거운동
20대	3.7%	2.3%	30.4%	3.2%	2.3%	7.8%	39.2%	3.2%
30대	3.7%	2.4%	23.3%	5.3%	1.6%	9.4%	44.1%	1.6%
40대	1.5%	4.2%	22.6%	3.8%	2.3%	13.6%	40.8%	
50대	3.9%	2.6%	12.7%	7.5%	5.3%	14.0%	41.2%	
60대	6.9%	0.8%	12.6%	6.1%	4.9%	18.3%	38.2%	
전체	3.9%	2.5%	20.2%	5.2%	3.2%	12.7%	40.7%	0.9%

유의확률 : P<0.01, 카이자승=102.058

2) 20대 전/후반 비교

○ 20대 전반과 후반이 정치의식, 정책이슈평가, 경제상황 평가등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집단평균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정치의식면에서 이명박정부 평가, 노무현정부 평가,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호감도 등 모든 항목에서 20대 전반과 후반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 대북관계, 경제분야, 사회문화 분야 등을 망라한 정책이슈에 대해서도 20대 전반과 후반간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다만 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분야별로 정부지출이 확대되어야 하는지 축소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했을 때 일부 분야에서는 차이가 드러났다. 취업불안이 높은 20대 후반에서 실업급여와 기업 및 산업 분야에서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20대 초반과 비교해 높았다.

- 지난 5년 국가/가계경제상태 평가, 향후 5년 국가/가정경제전망,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소득격차 5년 전과 비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갈등 확대 5년 전과 비교 등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 있어 20대 전반과 후반이 어느 정도 상이한지 살펴본 결과, 지난 5년 국가경제상태 평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소득격차 5년 전과 비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갈등 확대 5년전과 비교 등에서 20대 전반과 후반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세 항목 모두에서 20대 전반 보다 20대 후반에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표 III-75> 정당 및 역대 정부 평가 : 20대 전/후반 평가

응답자연령		이명박 국정 운영 평가	노무현 국정 운영 평가	새누리당 호감도	민주통합당 호감도	통합진보당 호감도	진보정의당 호감도
20대 전반	평균	3.75	5.38	46.15	56.28	40.9	36.46
	N	130	130	130	130	130	130
	표준편차	2.032	1.806	20.694	16.274	19.427	19.017
20대 후반	평균	3.36	5.29	46.61	53.1	38.56	32.53
	N	87	87	87	87	87	87
	표준편차	2.124	2.068	19.685	15.178	19.691	19.631
합계	평균	3.59	5.34	46.33	55.01	39.96	34.88
	N	217	217	217	217	217	217
	표준편차	2.073	1.911	20.251	15.885	19.521	19.318

<표 III-76> 주요 정책이슈 평가 1 : 20대 전반/후반

응답자연령		한미동맹강 화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FTA 재 협상	대북 지원 확대	경제성장보 다 복지 주 력	비정규직 문제는 기 업 자율
20대 전반	평균	2.12	2.61	1.99	2.74	2.3	2.74
	N	130	130	130	130	130	129
	표준편차	0.666	0.821	0.676	0.793	0.794	0.869
20대 후반	평균	2.26	2.6	2.01	2.75	2.31	2.67
	N	87	86	87	87	87	87
	표준편차	0.6	0.674	0.619	0.719	0.797	0.831
합 계	평균	2.18	2.61	2	2.74	2.3	2.71
	N	217	216	217	217	217	216
	표준편차	0.643	0.764	0.653	0.762	0.793	0.852

<표 III-77> 주요 정책이슈 평가 2 : 20대 전반/후반

응답자연령		고소득자 세금 확대	철도 등 공 기업 민영 화	학교 체벌 허용	대체복무 제허용	사형제 폐 지	집회 및 시위 자유 최대한 보 장
20대 전반	평균	1.68	2.72	2.11	2.92	2.96	1.91
	N	130	130	130	130	130	130
	표준편차	0.778	0.917	0.77	0.794	0.91	0.616
20대 후반	평균	1.55	2.71	2.2	2.83	3.01	1.98
	N	87	87	87	87	87	87
	표준편차	0.624	0.875	0.729	0.824	0.739	0.647
합계	평균	1.63	2.71	2.14	2.88	2.98	1.94
	N	217	217	217	217	217	217
	표준편차	0.722	0.898	0.753	0.805	0.844	0.628

<표 III-78> 주요 분야별 정부지출 확대/축소 의견 : 20대 전반/후반

응답자연령		보건/ 의료비	교육	실업금 여*	국방	노인연 금	기업과 산업*	경찰 및 치안	복지
20대 전반	평균	2.63	2.5	2.64	2.83	2.68	2.82	2.4	2.31
	N	129	129	128	126	127	125	126	127
	표준편차	0.751	0.83	0.867	0.895	0.881	0.862	0.791	0.852
20대 후반	평균	2.55	2.5	2.87	2.77	2.85	3.07	2.59	2.57
	N	86	86	86	86	85	86	86	86
	표준편차	0.714	0.664	0.823	0.746	0.852	0.918	0.742	0.848
합계	평균	2.6	2.5	2.73	2.8	2.75	2.92	2.48	2.42
	N	215	215	214	212	212	211	212	213
	표준편차	0.736	0.767	0.855	0.837	0.871	0.891	0.775	0.857

<표 III-79> 경제 평가 : 20대 전반/후반

응답자연령		지난 5년 국가경제상 태 평가*	지난 5년 가계경제상 태 평가	향후 5년 가정경제전 망	향후 5년 국가경제전 망	고소득자 와 저소득 자 간의 소 득격차 5년 전과 비교#	고소득자 와 저소득 자 간의 갈 등 5년 전 과 비교*
20대 전반	평균	3.52	3.33	2.68	2.71	1.93	2.14
	N	130	130	130	130	130	130
	표준편차	0.908	0.709	0.836	0.802	0.695	0.734
20대 후반	평균	3.78	3.33	2.71	2.78	1.76	1.94
	N	87	87	87	87	87	87
	표준편차	0.882	0.742	0.746	0.827	0.59	0.635
합계	평균	3.62	3.33	2.7	2.74	1.86	2.06
	N	217	217	217	217	217	217
	표준편차	0.905	0.72	0.799	0.811	0.659	0.701

p=0.059

3) 30대 전/후반 비교

○ 30대 전반과 후반이 정치의식, 정책이슈평가, 경제상황 평가 등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집단평균 분석을 시도한 결과 정치의식면에서 노무현정부 평가, 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호감도 등의 항목에서 30대 전반과 후반간 차이가 나타났다. 네 항목 모두에서 30대 후반 보다 초반에서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이명박정부 평가, 새누리당 호감도에서는 30대 전반과 후반간 별 차이가 없었다.

○ 대북관계, 경제분야, 사회문화 분야 등을 망라한 정책이슈에서 30대 전반과 후반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한미FTA재협상, 대북지원확대, 집회 및 시위 자유 최대한 보장 등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세 항목 모두에서 30대 후반 보다 초반에서 지지 여론이 높았다. 객관적 정치의식면에서 30대 초반이 후반 보다 대체로 진보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분야별로 정부지출이 확대되어야 하는지 축소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했을 때 보건/의료비, 교육, 노인연금 등에서 30대 전반과 후반간 차이가 드러났다. 세 항목 모두에서 30대 후반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30대 전반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지난 5년 국가/가계경제상태 평가, 향후 5년 국가/가정경제전망,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격차 5년 전과 비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갈등 확대 5년 전과 비교 등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 있어 30대 전반과 후반이 어느정도 상이한지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30대 전반과 후반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인식 측면에서는 전반과 후반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80> 정당 및 역대 정부 평가 : 30대 전/후반 평가

응답자연령		이명박 국정 운영 평가	노무현 국정 운영 평가**	새누리당 호감도	민주통합당 호감도**	통합진보당 호감도*	진보정의 당 호감도*
30대 전반	평균	3.23	5.71	47.73	56.75	41.35	33.97
	N	97	97	97	97	97	97
	표준편차	2.069	1.859	23.783	16.879	20.89	20.103
30대 후반	평균	3.28	5.03	48.61	50.47	35.54	29.49
	N	148	148	148	148	148	148
	표준편차	1.93	1.976	21.395	16.427	20.035	19.111
합계	평균	3.26	5.3	48.27	52.96	37.84	31.27
	N	245	245	245	245	245	245
	표준편차	1.982	1.956	22.327	16.856	20.534	19.592

<표 III-81> 주요 정책이슈 평가 1 : 30대 전반/후반

응답자연령		한미동맹강 화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FTA 재 협상#	대북 지원 확대#	경제성장보 다 복지 주 력	비정규직 문제는 기 업 자율
30대 전반	평균	2.13	2.53	1.99	2.7	2.42	2.73
	N	97	97	97	97	96	96
	표준편차	0.671	0.765	0.669	0.806	0.854	0.827
30대 후반	평균	2.19	2.61	2.14	2.89	2.36	2.74
	N	148	147	146	148	148	148
	표준편차	0.653	0.789	0.639	0.775	0.825	0.868
합 계	평균	2.17	2.58	2.08	2.82	2.38	2.73
	N	245	244	243	245	244	244
	표준편차	0.66	0.779	0.654	0.791	0.835	0.85

<표 III-82> 주요 정책이슈 평가 2 : 30대 전반/후반

응답자연령		고소득자 세금 확대	철도 등 공 기업 민영 화	학교 체벌 허용	대체복무 제허용	사형제 폐 지	집회 및 시위 자유 최대한 보 장*
30대 전반	평균	1.59	2.65	2.16	2.88	3.05	1.96
	N	97	96	97	97	97	97
	표준편차	0.732	0.882	0.702	0.869	0.808	0.676
30대 후반	평균	1.51	2.62	2.29	2.76	3.13	2.16
	N	148	146	148	146	147	148
	표준편차	0.685	0.888	0.749	0.881	0.901	0.72
합계	평균	1.54	2.63	2.24	2.81	3.1	2.08
	N	245	242	245	243	244	245
	표준편차	0.704	0.884	0.732	0.876	0.865	0.708

<표 III-83> 주요 분야별 정부지출 확대/축소 의견 : 30대 전반/후반

응답자연령		보건/ 의료비#	교육#	실업급여	국방	노인연금*	기업과 산업	경찰 및 치안	복지
30대 전반	평균	2.46	2.24	2.86	2.82	2.6	3.03	2.54	2.31
	N	95	96	94	94	95	93	95	96
	표준편차	0.783	0.83	0.911	0.761	0.916	0.84	0.755	0.85
30대 후반	평균	2.64	2.44	2.94	2.98	2.84	3.03	2.64	2.41
	N	146	147	145	147	146	144	144	147
	표준편차	0.804	0.828	0.789	0.806	0.819	0.757	0.725	0.843
합계	평균	2.57	2.36	2.91	2.92	2.75	3.03	2.6	2.37
	N	241	243	239	241	241	237	239	243
	표준편차	0.799	0.833	0.838	0.791	0.865	0.789	0.737	0.845

<표 III-84> 경제 평가 : 30대 전반/후반

응답자연령		지난 5년 국가경제상태 평가	지난 5년 가계경제상태 평가	향후 5년 가정경제전망	향후 5년 국가경제전망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격차 5년 전과 비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격차 5년 전과 비교
30대 전반	평균	3.8	3.39	2.74	2.52	1.89	1.97
	N	97	97	97	97	97	97
	표준편차	0.812	0.715	0.857	0.738	0.659	0.684
30대 후반	평균	3.79	3.3	2.61	2.57	1.82	2.02
	N	148	148	148	148	148	148
	표준편차	0.905	0.837	0.838	0.8	0.629	0.644
합계	평균	3.8	3.33	2.66	2.55	1.84	2
	N	245	245	245	245	245	245
	표준편차	0.868	0.791	0.847	0.775	0.641	0.659

4) 40대 전/후반 비교

- 40대 전반과 후반이 정치의식, 정책이슈평가, 경제상황 평가등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집단평균 분석을 시도한 결과 정치의식면에서 이명박 정부 평가만이 전반과 후반간 차이를 드러냈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즉 40대 전반 보다 후반에서 이명박 정부 평가가 긍정적이었다.

- 대북관계, 경제분야, 사회문화 분야 등을 망라한 정책이슈에서 40대 전반과 후반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한미FTA재협상, 철도 및 공기업 민영화 항목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한미FTA재협상은 40대 초반에서 더 지지했고, 철도 및 공기업 민영화는 40대 후반에서 더 지지했다. 두 항목에서 40대 초반이 40대 후반 보다 더 진보적 태

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분야별로 정부지출이 확대되어야 하는지 축소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했을 때 보건/의료비에서만 40대 전반과 후반간 차이가 드러났다. 40대 후반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0대 전반 보다 우세했다.

- 지난 5년 국가/가계경제상태 평가, 향후 5년 국가/가정경제전망,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소득격차 5년전과 비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갈등 확대 5년 전과 비교 등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 있어 40대 전반과 후반이 어느 정도 상이한지 살펴본 결과, 지난 5년 국가경제상태 평가, 향후 5년 가정경제전망, 향후 5년 국가경제전망,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소득격차 5년전과 비교 등에서 40대 전반과 후반간 차이가 드러났다. 지난 5년 국가경제상태 평가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소득격차 5년전과 비교에서 40대 전반이 후반 보다 더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향후 국가/가정경제전망에서는 40대 후반이 더 부정적이었다.

<표 III-85> 정당 및 역대 정부 평가 : 40대 전/후반 평가

응답자연령		이명박 국정 운영 평가#	노무현 국정 운영 평가	새누리당 호감도	민주통합당 호감도	통합진보당 호감도	진보정의당 호감도
40대 전반	평균	3.08	5.15	47.12	50.45	31.75	25.68
	N	118	118	118	118	118	118
	표준편차	2.109	2.053	22.678	20.309	21.442	19.336
40대 후반	평균	3.56	4.88	50.95	49.42	32.52	26.9
	N	147	147	147	147	147	147
	표준편차	2.071	2.002	22.508	16.328	21.345	20.923
합계	평균	3.35	5	49.25	49.88	32.18	26.36
	N	265	265	265	265	265	265
	표준편차	2.098	2.025	22.622	18.179	21.351	20.204

<표 III -86> 주요 정책이슈 평가 1 : 40대 전반/후반

응답자연령		한미동맹강 화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FTA 재 협상#	대북 지원 확대	경제성장보 다 복지 주 력	비정규적 문제는 기 업 자율
40대 전반	평균	2.08	2.63	1.97	2.78	2.33	2.76
	N	118	118	118	118	118	118
	표준편차	0.661	0.814	0.679	0.828	0.796	0.824
40대 후반	평균	2.04	2.6	2.13	2.75	2.42	2.68
	N	147	146	145	146	146	146
	표준편차	0.671	0.834	0.793	0.812	0.828	0.796
합 계	평균	2.06	2.61	2.06	2.76	2.38	2.72
	N	265	264	263	264	264	264
	표준편차	0.666	0.824	0.747	0.818	0.814	0.808

<표 III -87> 주요 정책이슈 평가 2 : 40대 전반/후반

응답자연령		고소득자 세금 확대	철도 등 공 기업 민영 화#	학교 체벌 허용	대체복무 제 허용	사형제 폐 지	집회 및 시위 자유 최대한 보 장
40대 전반	평균	1.48	2.85	2.28	2.89	3.2	1.93
	N	118	118	118	118	118	118
	표준편차	0.623	0.93	0.703	0.865	0.902	0.65
40대 후반	평균	1.54	2.64	2.19	2.93	3.08	2.04
	N	146	145	146	145	146	145
	표준편차	0.666	0.887	0.727	0.855	0.947	0.696
합계	평균	1.52	2.73	2.23	2.91	3.13	1.99
	N	264	263	264	263	264	263
	표준편차	0.647	0.911	0.716	0.858	0.928	0.677

<표 III -88> 주요 분야별 정부지출 확대/축소 의견 : 40대 전반/후반

응답자연령		보건/의 료비*	교육	실업급여	국방	노인연금	기업과 산업	경찰 및 치안	복지
40대 전반	평균	2.53	2.43	2.97	2.69	2.63	3.12	2.54	2.33
	N	117	117	115	115	115	115	116	117
	표준편차	0.826	0.854	0.826	0.882	0.841	0.807	0.796	0.881
40대 후반	평균	2.84	2.51	3.1	2.78	2.72	3	2.58	2.52
	N	146	147	147	147	146	147	146	147
	표준편차	0.839	0.855	0.747	0.79	0.869	0.876	0.741	0.924
합계	평균	2.7	2.47	3.04	2.74	2.68	3.05	2.56	2.44
	N	263	264	262	262	261	262	262	264
	표준편차	0.845	0.854	0.784	0.831	0.856	0.847	0.764	0.908

<표 III -89> 경제 평가 : 40대 전반/후반

응답자연령		지난 5년 국가경제상 태 평가*	지난 5년 가계경제상 태 평가	향후 5년 가정경제전 망#	향후 5년 국가경제전 망*	고소득자 와 저소득 자 간의 소 득격차 5년 전과 비교#	고소득자 와 저소득 자 간의 갈 등 5년 전 과 비교
40대 전반	평균	3.97	3.53	2.54	2.44	1.61	1.83
	N	118	118	118	118	118	118
	표준편차	0.784	0.77	0.747	0.843	0.614	0.631
40대 후반	평균	3.75	3.46	2.71	2.65	1.76	1.95
	N	147	147	147	147	147	147
	표준편차	0.898	0.838	0.821	0.799	0.601	0.66
합계	평균	3.85	3.49	2.63	2.56	1.69	1.89
	N	265	265	265	265	265	265
	표준편차	0.854	0.808	0.792	0.824	0.61	0.649

5) 50대 전/후반 비교

○ 50대 전반과 후반이 정치의식, 정책이슈평가, 경제상황 평가등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집단평균 분석을 시도한 결과 정치의식면에서 이명박 정부 평가, 새누리당 선호도에 있어 전반과 후반이 상이했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즉 50대 전반 보다 후반에서 이명박 정부 평가, 새누리당 선호도 모두 훨씬 긍정적이었다.

○ 대북관계, 경제분야, 사회문화 분야 등을 망라한 정책이슈에서 50대 전반과 후반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교체벌허용과 같은 사회문화적 이슈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는데 50대 후반에서 지지가 더 높았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분야 별로 정부지출이 확대되어야 하는지 축소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했을 때 노인연금에 서만 50대 전반과 후반간 차이가 드러나 50대 초반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 지난 5년 국가/가계경제상태 평가, 향후 5년 국가/가정경제전망,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격차 5년전과 비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갈등 확대 5년 전과 비교 등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 있어 50대 전반과 후반이 어느 정도 상이한지 살펴본 결과, 향후 5년 가정경제전망, 향후 5년 국가경제전망에서 50대 전반과 후반간 차이가 드러났다. 두 항목 모두에서 50대 후반이 전반 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표 III -90> 정당 및 역대 정부 평가 : 50대 전/후반 평가

응답자연령		이명박 국정 운영 평가#	노무현 국정 운영 평가	새누리당 호감도#	민주통합당 호감도	통합진보당 호감도	진보정의 당 호감도
50대 전반	평균	3.89	4.66	54.97	48.23	30.55	24.26
	N	124	124	124	124	124	124
	표준편차	2.097	1.761	23.253	17.666	19.305	19.034
50대 후반	평균	4.59	4.8	70.31	56.85	36.76	31.3
	N	103	103	103	103	103	103
	표준편차	2.262	2.163	94.523	95.233	97.49	97.781
합계	평균	4.21	4.72	61.96	52.16	33.38	27.47
	N	227	227	227	227	227	227
	표준편차	2.197	1.951	66.357	65.577	67.242	67.412

<표 III -93> 주요 분야별 정부지출 확대/축소 의견 : 50대 전반/후반

응답자연령		보건/ 의료비	교육	실업급 여	국방	노인연 금*	기업과 산업	경찰 및 치안	복지
50대 전반	평균	2.68	2.68	2.97	2.71	2.71	2.98	2.63	2.69
	N	123	124	124	123	124	124	123	124
	표준편차	0.793	0.781	0.685	0.73	0.805	0.801	0.782	0.809
50대 후반	평균	2.69	2.84	3.02	2.65	2.48	2.9	2.7	2.61
	N	102	102	102	102	102	98	101	102
	표준편차	0.863	0.805	0.861	0.847	0.742	0.805	0.755	0.888
합계	평균	2.69	2.75	2.99	2.69	2.61	2.94	2.66	2.66
	N	225	226	226	225	225	221	223	226
	표준편차	0.824	0.794	0.769	0.785	0.784	0.802	0.769	0.845

<표 III -91> 주요 정책이슈 평가 1 : 50대 전반/후반

응답자연령		한미동맹강 화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FTA 재 협상	대북 지원 확대	경제성장보 다 복지 주 력	비정규직 문제는 기 업 자율
50대 전반	평균	1.97	2.69	2.22	2.81	2.53	2.7
	N	124	124	124	124	124	122
	표준편차	0.555	0.903	0.728	0.853	0.822	0.76
50대 후반	평균	1.86	2.84	2.33	2.87	2.64	2.55
	N	102	102	102	102	102	102
	표준편차	0.627	0.74	0.705	0.779	0.778	0.736
합 계	평균	1.92	2.76	2.27	2.83	2.58	2.63
	N	226	226	226	226	226	224
	표준편차	0.59	0.835	0.718	0.819	0.802	0.751

<표 III -94> 경제 평가 : 50대 전반/후반

응답자연령		지난 5년 국가경제상 태 평가	지난 5년 가계경제상 태 평가	향후 5년 가정경제전 망*	향후 5년 국가경제전 망#	고소득자 와 저소득 자 간의 소 득격차 5년 전과 비교	고소득자 와 저소득 자 간의 같 등 5년 전 과 비교
50대 전반	평균	3.73	3.5	2.72	2.56	1.8	1.92
	N	124	124	124	124	124	124
	표준편차	0.902	0.831	0.717	0.725	0.687	0.751
50대 후반	평균	3.67	3.38	2.52	2.39	1.79	1.92
	N	102	102	101	101	101	101
	표준편차	0.809	0.793	0.671	0.748	0.694	0.684
합계	평균	3.7	3.44	2.63	2.48	1.8	1.92
	N	226	226	225	225	225	225
	표준편차	0.86	0.814	0.702	0.738	0.689	0.72

<표 III -92> 주요 정책이슈 평가 2 : 50대 전반/후반

응답자연령		고소득자 세금 확대	철도 등 공 기업 민영 화	학교 체벌 허용*	대체복무 제 허용	사형제 폐 지	집회 및 시위 자유 최대한 보 장
50대 전반	평균	1.45	2.63	2.18	2.91	2.99	2.2
	N	124	123	124	124	124	123
	표준편차	0.616	0.853	0.8	0.846	0.975	0.69
50대 후반	평균	1.59	2.7	1.97	2.96	2.95	2.32
	N	102	102	103	102	103	102
	표준편차	0.692	0.79	0.66	0.862	0.875	0.645
합계	평균	1.51	2.66	2.09	2.93	2.97	2.26
	N	226	225	227	226	227	225
	표준편차	0.653	0.824	0.745	0.852	0.929	0.671

IV. 결론 및 향후 과제

1. 세대별 고용사정과 생활상태의 변화

-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로 정치권력이 교체된 지난 10여 년 동안,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국민의 삶은 악화되었다.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 했고,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은 고착화되었다. 경제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악화되었고, 임금불평등은 심화되고 가구소득 불평등은 확대되었다. 가계수지 적자가구와 빈곤가구는 누적되고 있다.
- 생애주기별로 노동생활 추이를 살펴보면, 20대는 노동시장 진입기, 30~40대 남자는 노동시장 정착기, 30대 여자는 자녀출산과 양육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쉽지 않아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시기, 40대 여자는 노동시장 재진입기, 50~60대는 남녀 모두 노동시장 퇴출기로 정의할 수 있다.
- 20대는 남녀 모두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다. 청년층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대량으로 파괴되면서 노동시장 진입에 걸리는 기간은 늘어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용률이 높아진다. 노동시장에서 성 차별도 작은 시기다.
- 30~40대는 남녀 모두 나이가 들수록 임금노동자와 공식고용 비율이 줄고, 비임금근로자와 비공식고용 비율이 늘어나는, 고용의 질이 나빠지는 시기다. 30~40대에 남성은 임금이 높아지지만, 여성은 임금이 낮아지고 저임금계층과 최저임금 미달자가 늘어나는 시기다. 30~40대에 늘어나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임금노동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고용형태다.
- 50~60대는 노동생활을 마치고 은퇴생활로 전환해 가는 시기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은퇴 후 노후생활이 준비되지 않아, 노동생활과 은퇴생활 모두 불안정한 시기다. 나이가 들수록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높아진다. 이는 다니던 직장에서는 정년 등을 빌미로 밀려나고, 노후생활은 준비되지 않아 다시 구직활동에 나서는 현실을 반영한다. 남녀 모두 나이가 들수록 임금수준은 낮아지고, 저임금계층과 최저임금 미달자는 늘어난다.

- 40세 이상 중고령자들의 노후생활 대비와 관련해, 노후생활을 준비하거나 준비한 사람은 60%고, 나머지 40%는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 노후생활 준비 방법은 공적 연금 가입이 가장 많았다. 특히 60~70대 노인들은 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60대 후반 남성은 소득의 27.5%가 공적 이전소득이고, 여성은 소득의 25.1%가 공적 이전소득이다. 70대 남성은 소득의 31.9%가 공적 이전소득이고, 여성은 소득의 40.1%가 공적 이전소득이다. 그만큼 노후생활에서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지난 대선에서 연금문제가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어느정도 폭발성을 지닌 사안이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 40대 후반을 정점으로 인생 하강 곡선과 노동시장 퇴출기에 접어든 5060이 겪는 고용 및 생활상의 어려움과 박탈감,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에서 패인도 ‘야권이 2030에 집중한 나머지 5060에게 그들의 고용사정과 생활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전망과 믿음을 주지 못한’ 데서 찾아야 한다.
 -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를 찍었던 50~60대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은 것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국민의 삶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된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민주정부 10년은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글로벌 스탠더드인 양 맹위를 떨치던 시기였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제1의 정책과제로 추진했고, 고용사정은 더 이상 악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 앞으로 야권이 50~60대의 지지를 회복하려면 ‘야권이 집권해야 나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꿈과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한편, 과연 2030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20대와 30대는 고학력자가 많다는 점에서는 동질적이지만,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취업난을 겪는 20대 남녀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안정적 정착기에 접어든 30대 남자, 자녀출산과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30대 여자는 노동시장 내 처지가 뚜렷하게 다르다.
- ##### 2. 경제상황이 2012년 대선 투표에 미친 영향
- 그렇다면 객관적 경제상황의 변화가 주관적 경제평가(MB정부 국가경제 평가 등)를 거쳐, 2012년 대선 투표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용률과 임금인상률, 노동소득분배율은 참여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에서 더 악화되었

지만, 임금불평등과 가구소득 불평등은 이명박 정부보다 참여정부 때 가장 극심했다. 따라서 경제위기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만으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대중들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 대선투표 분석결과, 객관적 경제상황 악화라는 환경속에서 2012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영향을 받은 경제적 요인(경제인식 및 평가)들은 주관적 경제적 지위와 이명박 정부 5년 국가경제평가, 그리고 소득격차 심화 인식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주관적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문제인지지 가능성도 높았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5년 국가경제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소득격차가 심화되었다고 인식할수록 문제인지지 가능성도 높았다.

- 하지만 세대별로 경제요인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했다. 지난 대선에서 20대와 30대는 투표시 경제요인(경제평가/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등)의 영향을 받았지만 40대와 50대는 비교적 영향력이 적었다. 특히 50대는 경제요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 세대별로 경제상황 악화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중 어느 시기에 더 심각해졌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상이하고 그에 따라 경제요인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력도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의 20대와 30대는 참여정부시기 10대와 20대로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이거나 막 경제활동을 시작하던 시기다. 따라서 참여정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할만한 요소가 약하다. 지금의 30대의 경우 참여정부때 취업을 하고 이명박 정부 때 본격적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고용의 질 악화, 양극화 심화 등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 따라서 지금의 20대와 30대는 참여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 시기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 반면, 지금의 40대와 50대는 참여정부시기에는 30대와 40대로서 경제활동의 핵심축이었다. 참여정부 시기 경제상황 악화, 양극화로 인해 삶의 질 악화를 직접적으로 체감한 연령층인 것이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못지않게 참여정부도 경제상황 악화에 책임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경제상황악화의 책임을 MB정부에 집중시키는 전략은 설득력이 약할 수 밖에 없다. 분석결과도 40대와 50대에서 경제요인은 대선 투표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다만 대선 투표에서 40대와 50대가 차이가 났는데 40대에서는 반MB정서라는 정치적 요인이 작용한 반면 50대 이상은 반MB와 반노무현이 비슷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지난 대선에서 반MB로는 50대를 설득하기 어려웠다. 이들이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경제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MB정부와 참여정부에게 공동으로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50대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반MB보다 반노무현이었고 반이정희였다. 50대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반MB를 넘어서 참여정부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했으나 이것이 결여되어 있었다.

3. 세대 전략 방안

- 지난 대선에서는 세대간 연대 보다 기성세대에 맞선 2030세대의 투쟁이 더 강조되면서 결과적으로 세대갈등이 폭발했다. 2030세대 또는 2040세대간 연대는 이 세대가 경제적 불안정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이 점에서 경제적 지위하락에 대한 불안감,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은 50대라도 연대할 조건은 충분했다. 하지만 실제 대선에서 야권은 세대간 차이와 갈등을 부각시키면서 50대 이상을 정치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즉, 경제위기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세대연대론이 제기되었어야 하나 정치적 전략의 실패로 인해 결과적으로 세대투쟁론이 부각되었다.

- 고령화 추세로 인해 2017년 대선에서는 50대 이상 인구 비중이 45.1%에 이른다. 그리고 연령효과와 세대효과와 관련한 일부 연구들에 의하면 지금의 50대 이상 고연령층은 16대 대선 이후 보수적 선택이 강해지는 '연령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의 40대(486세대)는 16대 대선 이후 일관되게 진보적 선택이 유지되고 있어 '세대효과'가 강하다. 50대의 압도적인 박근혜 지지는 '나이가 들면 보수화된다는' 연령효과를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한다.

-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50대의 선택을 연령효과에 따른 보수화로만 보긴 어렵다. 50대는 그 어느 연령층보다 경제적 불안, 고용 불안에 심하게 직면해 있으며, 50대가 경제상황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은 여러 지표에서 드러난다. 50대의 보수적 선택은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지위하락과, 미래 불안의 책임이 MB정부 못지않게 참여정부에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야권은 이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줄 수 있는, 참여정부를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박근혜 후보는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50대를 끌어들이 수 있었다.

- 2017년 대선 전략 수립에 있어 세대효과나 연령효과나 라는 정태적 틀을 넘어 결국 50대의 경제적 불안, 노후 불안을 해소해줄 수 있는 정책방안, 그리고 전략 제시가 관건이 될 것이다.

- 40대도 경제상황 인식에 있어 50대와 비슷하나 반MB정서로 인해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지지가 우세했다. 2017년 대선에서 이들에게 민주정부의 능력과 비전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야권지지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지난 대선에서 경제이슈는 전반적으로 진보쪽에 우세한 이슈였고, 세대별로도 차이가 확인됐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등에서 박근혜 후보쪽이 오히려 이슈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경제이슈가 변별성을 상실했다. 대신 NLL같은 안보이슈가 부각되었다. 야권이 참여정부를 극복할 수 있는 세대별, 계층별 정책대안 제시에 실패한 것이다.

- 따라서 세대별 차이, 세대내 차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제시가 절실하다. 앞의 분석에 따르면 20대는 실업급여 등 고용관련 분야, 30대와 40대는 교육, 50대와 60대는 노인연금 등을 최우선 정책으로 보고 있다.

-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가계의 책임자로서 이들의 경제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주어야 한다. 이층은 고용시장에서 퇴장하는 층으로서 새로운 일자리가 절실하며, 연금문제를 포함한 노후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60대 이상 노령층은 생활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70대는 그동안 공적연금을 받을 기회가 없었으나 제도 변화로 연금 혜택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4. 2040세대 전략 방안

-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적 불안은 크지만 이러한 불안이 곧바로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계기들에 의해 경제적 불안은 정치화되고 동원되는가? 이 지점을 포착해 경제적 불안을 정치화시키고 청년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야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2017년 대선도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그동안은 경제적 불안이나 사회구조에 대한 불만이 바로 진보적 선택으로 이어진다

고 보는 오류를 범해왔다. 이를 규명해내기 위해서는 계량적 데이터 분석 보다는 심층 면접 등 질적 접근이 더 요긴하다. 앞에서 분석한 대선 데이터 및 연구자가 기존에 수행해왔던 심층 면접 자료를 이용해 2040세대에 대한 전략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0대 전략

- 대선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경제적 의존도가 큰 20대에서는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박근혜 지지가 높게 나타나 부유층 부모를 둔 20대의 보수화경향이 일정부분 확인되었다. 이는 심층면접에서도 나타나는 데, 20대 초반에서는 후보를 선택할 때 부모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20대일수록 집안의 보수적 분위기, 부모의 영향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대 후반으로 가면 부모의 영향력은 약해졌다.

- 20대가 정치적 선택에 있어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정치사회화’ 현상은 일부 연구에서도 확인된바 있다. 따라서 민주화를 경험한 진보적 386세대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 보수적 부모를 둔 자녀, 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녀들일수록 부모의 영향을 받아 보수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된다.

- 20대는 고용진입기로서 스펙쌓기라는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에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요구는 약하다. 거시적 정책으로 이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20대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취업 등 자신의 문제에 관심이 높다. 육아 등 정부정책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은 30대, 40대와 차이가 있다. 정책을 통한 변화 등 공공적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복지나 분배 보다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취업기회 확대에 관심이 더 높다. 적극적 산업정책, 기업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전 제시가 중요하다.

- 20대는 30대와 비교해 정의에 대한 관심이 약하며 가치나 명분 보다 실익이 중요하다. 가치만으로 이들을 설득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실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20대는 정치담론에 얼마나 노출되느냐, 특히 진보적 담론에 얼마나 노출되느냐(사

회화의 계기)가 정치참여 및 정치적 선택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의 정치관심을 촉진시킬 촉매제가 필요한데, 20대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아울러 20대가 정치적 관심을 지닐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예. 청년 정치 캠프 등 조직화)

- 20대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약하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청년실업정책 등 큰 틀의 정책으로 20대를 끌어안기는 쉽지 않다. 20대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0대의 가장 중요한 관심인 취업문제와 정치를 연계시키기 위해 “정치가 일자리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청년 정치캠프에 참여하도록 하고 국회 인턴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치분야 일자리를 통해 이들의 관심을 끌어와야 할 것이다.

2) 30대 전략

- 30대는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세대로, 우리사회 불공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30대는 자산 등 자신의 노력이 아닌 것에 의해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 지점에서 분노가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 30대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다. 또한 노동시간단축이나 복지 위한 세금 납부 등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는 것도 역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 30대 남성에게 소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기득권을 탈피 노력 보여주어야 한다. 차악에서 차선으로, 대안세력으로서 민주당에 대한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30대 여성에게는 실현가능성이 중요하다. 무상복지 보다는 실현가능한 복지, 가계 부담이 없는 실현가능한 복지를 내세워야 한다. 이들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개인주의적, 가족중심적 생존해법을 찾는 경향이 있다.

3) 40대 전략

- 40대 경제적 불안정층을 정치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이들의 정치적 관심을 꾸준히 유지하게 하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의 관건이다. 이들은 안정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 또한 후보의 국정운영능력이 중요하다.

- 경제적 불안정에 처한 40대와 50대를 묶고 이들을 ‘안정적 변화’, ‘책임감있는 변화’로 견인해내는 4050세대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이 2030세대 전략과 같이 가야 한다.

5. 향후 과제

- 경제위기의 심화와 이에 책임져야 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난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경제요인은 일부 세대에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쳤다. 이는 경제불안이 정치적 선택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경제불안은 어떻게, 어떠한 계기와 만나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지는지, 즉 정치화되는지를 면밀히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각 세대별, 계층별 심층면접을 통한 세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 특히 50대의 서민들에게 경제불안은 어느 정도로 이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은 어떠한 맥락에서 정치화되는가? 40대가 느끼는 경제불안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정치화 화는가?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아울러 20대들의 정치적 선택은 유동적이며 불안정하다. 비록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우세했지만 다음 대선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20대는 부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이들의 부모는 ‘보수화되고 있는’ 50대와 40대 후반이 대부분이다. 향후 부모의 정치적 견해가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치사회화’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필요하다.